



우리 민족끼리

칠의 진사 범청학련 16기 통일신봉대
9기 진여대협 10기 통일신봉대
교양자료집



철의 전사 범청학련 16기 통일신봉대
9기 전여대협 1기 통일신봉대
교양자료집

교양일정

- 1일 정세교양
- 2일 북핵문제
- 3일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해
- 4일 통일 관련 흐름
- 5일 여성과 통일
- 6일 전체교양
- 7일 반미운동사
- 8일 사람과 세계
- 9일 사람과 세계
- 10일 여성운동사
- 11일 전체교양
- 12일 여성운동사
- 13일 독서발표

자료집 순서

- 핵심** <북핵문제> ... 3

 -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 조선외무성 대변인 (평양 10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 3
 - ▶"지금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 4
 - ✓온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 조평통 대변인 담화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 5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택포기, 후대화>주장을 배격 ... 6
 -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이다-조국전선과 조평통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향> 발표 ... 6
 - ▶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조·미 관계의 근본문제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7
- 핵심**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에 대하여> ... 19

사건 <남북의 공동성언 및 주요합의문과 글들> ... 24

 -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 24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 25
 -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월 20일) ... 26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 26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 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1993년 6월 11일) ... 2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 28
 -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 30
 - ▶조로공동선언 (2000년 7월 19일) ... 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컴뮈니케 (2000년 10월 12일) ... 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선언 (2001년 8월 4일) ... 32
 - ▶조일평양선언 (2002년 9월 17일) ... 34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 ... 34
- 핵심** <여성과 통일> ... 35

 -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 36
 - ▶여성과 통일 -2000년 전여대협 통일교양자료집 발췌 ... 39
 -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 41
 - ▶한반도 통일과 여성 / 정현백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42
- 핵심** <한국 반미운동사 조명해 본다.> ... 44

 - ▶1946년 첫 반미항전 ... 44
 - ▶제주도 4.3 봉기 ... 44
 - ▶반미구국투쟁 10월민중항쟁 ... 45
 - ▶27 구국투쟁 ... 45
 - <자료를 통해 본 한국침략사> ... 46
 - ▶갑신정변과 미국 ... 46
 - ▶신미양요 ... 46
 - ▶「한일합병」과 미국 ... 47
- 핵심** <사람과 세계> ... 47

 - ✓<근현대 한국여성운동사> ... 72 *핵심 + 2인*
 - ▶식민지시대의 여성해방운동사(1910-1945) .. 72 *핵심*
 -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80
 - ▶현대의 여성운동(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 85 *) 핵심*

<북핵문제>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 조선외무성 대변인 (평양 10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새 세기에 들어 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다.

북남, 조로, 조중, 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 졌던 북남철도의 련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 졌다.

우리는 변화된 현 정세와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내오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실천적기여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환영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 버리고 평등한 립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대통령의 특사를 받아 들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긍정적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수행정부의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코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미국의 태도는 놀라움을 자아 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강도적론리가 우리에게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크게 오산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그 리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본합의문의 제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멍이나 파 놓은데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에 연간 100만키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되었다.

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 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동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대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량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의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비공개량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조항중에 미국이 준수한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리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수표하였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

그러나 부수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킨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것이다.

부수행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부수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국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다.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더 알맞는 대답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 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우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지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

평 양

주체 91(2002)년 10월 25일

▶"지금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고비때마다 터져나오는 '핵카드'

전쟁을 왜 안 하는 거요?

1991년 12월 남과 북이 남북합의서라는 역사적 문건을 합의하자마자 갑자기 미국은 북에 핵이 있다고 하면서 북폭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대통령은 초기에 이인모 노인을 석방하는 등 화해협력정책을 취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미국압력에 밀려 결국 미국의 북폭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미국과 일본에게 이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말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드디어 1994년 6월 미국은 이북에 대한 북폭을 감행하기 위해서 미국시민들을 이남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전쟁 90일만에 이남 사람 1백여만명이 죽고, 한국군이 60만명이 죽는다는 보고를 접했다. 그때야 김 전대통령은 정신을 차리고 전쟁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전쟁 90일 만에 남쪽 동포들이 1백여만명이 죽고 미군도 5만여명이나 사상자가 난다는 것을 위계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군은 한국 대통령의 반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착하다 착한 한국백성들 다수가, 아니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7천만 민족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이다. 12 시간만 있으면 한반도가 석기시대로 전변될 지도 모르는 긴박한 정세에서 카터-김일성 합의로 전쟁은 가까스로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반미·친북?

북의 핵개발관련 발언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권영길 후보 이외에 다른 대통령후보들은 무조건 핵개발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대북협력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 이외에는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심적인 미국사람들이 사실을 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고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셸리그 해리슨은 제네바협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핵선제공격을 앉겠다는 보증을서 주기로 했으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네바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북에 대한 핵폭격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도 2008년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 같다. 경제봉쇄조치 해제 약속도, 연락사무소 설치도 모두 미국은 지키지 않았다.

"이북놈들이 곧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아예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후에 북이 망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북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식이 적합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북미공동교류니케를 발표하고 방북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미국에게 활말을 해야 한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종미시대적인 한국 정치인들처럼 무조건 북측에게만 핵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포기하라! 제네바협정정신에 입각해서 북의 에너지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라! 경제봉쇄조치를 해제하

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고 외치고 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북의 핵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맡겨놓을 것인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에 대한 폭격을 감행시 한국정부에 어떠한 상의나 협의조차도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7천만 동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한미행정협정도 즉각 개정돼야 한다. 제네바협상에 참여했던 한 미국인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워싱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죽는다. 경수로 건설비용도 한국이 거의 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것인가.”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 온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 조평통 대변인 담화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민족의 통일위업을 가로 막으려는 미국의 적대적인 기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핵계획>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극히 오만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가 무장을 놓고 굴복하려는 것이며 민족최대의 위업인 조국통일도 가로 막고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도 뒤집어엎으려는 간악한 흥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위대한 선군정치와 민족자주통일위업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정의이고 참다운 애국이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바로 우리 인민의 최고의 리익인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의 정치이다.

우리가 추켜 든 선군정치는 결코 우리 공화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까지 포괄하여 전 민족의 존엄과 안전, 리익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보검이다.

오늘 북과 남은 다같이 미국으로부터 엄중한 침해와 위협을 받고 있다.

남이 불편할 때 동족인 북이 편안할 수 없고 북이 불편할 때 동족인 남이 편안할 수 없다.

하나의 민족인 북과 남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은 불가분리의 통일체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어느 한쪽에서만 지켜 저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 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군의 기치를 든 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오늘 미국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된다고 운운하고 있는 이른바 <우려사항>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파렴치하고 황당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봉쇄하고 제재하며 이제는 무장해제까지 강요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력사적경험은 선군정치가 외세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해 온 민족수난의 력사에 기초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총대가 약해 외세의 침략과 강타의 대상으로 되고 지어 왕궁의 안방에서 왕비까지 외세의 칼에 맞아 생죽음을 당했고 강도적인 대포문앞에서 5천년 력사국을 빼앗기는 통한의 비극을 당한 우리 민족이었다.

우리 겨레는 자기 존재를 지킬 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해 왔다.

우리 민족의 5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러한 민족사의 교훈을 혁명위업에 구현하시어 백두산에서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 드시였기에 우리 겨레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조선전쟁과 전후 근 반세기동안 제국주의의 온갖 봉쇄와 제재,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 낼 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어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퍼심으로써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주고 계신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남관계가 활성화되며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벌어 지고 있는 현실도 역시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선군이 없었더라면 조국의 광복과 번영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도 나라의 평화와 안정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과 남은 다같이 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총대로 반대배격하는 선군정치를 펴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면 남조선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남조선에서 민족성원들의 생존자체도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의 존재도 기업들의 운영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선군으로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 놓았기때문에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는 평화가 보장되고 남조선동포들도 우리의 자위적보호권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선군을 통하여 배격하려는 대상은 철두철미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남조선이 아니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남조선에 위협으로 되거나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악랄한 도전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위업이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오늘의 준엄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받드는 것은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강자가 약자를 먹어 치워도 어디가서 하소할데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은 오직 선군밖에 없다.

선군이야말로 북이나 남이나 해외나 온 겨레가 다같이 따르고 받들어 나가야 할 유일무이한 정치방식으로 된다.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선군정치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족의 자주권도 통일도 없다.

있다면 망국노의 치욕스러운 운명과 민족의 공멸뿐이다.

<온 민족이 떨쳐 나 애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옹호하자>, 이것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나선 투쟁과업이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주는 애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 기치아래 선군에 도전하는 세력들과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특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책동에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하며 민족의 분열과 전쟁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끝)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택포기, 후대화>주장을 배격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극구 외면하고 저들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주장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0월 25일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고 미국이 핵불사용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대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타격위협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타결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선택포기, 후대화>라는 거꾸로 된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를 국제사회에 납득시켜 우리에게 대한 외교적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야심을 다시한번 그대로 내보인것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침공의사가 없다>고 한 부쉬대통령의 발언이 순수 허위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장기간 뿌리깊은 적대관계속에 서로 대치하여 왔으며 특히 현 미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조미사이에 불신과 대결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 쌍방이 이처럼 최악의 적대관계에 있고 더우기 대방의 침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의 실정에서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각종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리치이다.

사실 조미사이에 지금같은 적대관계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경제형편도 어려운 때에 것처럼 많은 품을 들여 가며 방위력강화에 힘을 넣고 특수무기까지 만들겠는가.

명백히 하건대 미국의 <선택포기>주장은 새로운 충돌을 불러 오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화하는데로 떠밀뿐이다.

우리는 구태여 적대국의 그 무슨 <인정>을 받겠다고 먼저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구걸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끝)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이다—조국전선과 조평통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발표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억제력을 결코 들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을 발표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핵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밀려 오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로골화하고 있다.

얼마전에 있는 남조선미국<회담>이라는데서는 미국이 그 무슨 <제재>와 <봉쇄>, <군사적타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압살하겠다고 내놓고 말하였으며 그의 산물인 <공동성명>에서는 <추가적조치>라는 명목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의 길까지 열어 놓았다.

뒤이어 있는 미일<정상회담>에서는 그 무슨 <핵위기>를 떠들면서 보다 구체적인 전쟁모의를 거듭하던 끝에 대조선<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주도하에 남조선당국과 일본반동들은 반공화국전쟁열에 들떠 <북핵포기>의 쌍나발을 불어 대며 리성을 잃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점경예로 몰아가고 있다.

바야흐로 <이라크 다음은 북조선>이라고 떠들어 온 미국호전광들의 전쟁싸나리요가 실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으며 펜타곤의 핵조건경은 우리 조선반도를 더 깊숙이 겨냥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적해결>의 면사포속에서 꾸며 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움직임은 위험천만하게도 전체 조선민족을 멸살시킬 핵폭풍을 예고해 준다.

미국과 남조선이 만들어 낸 <공동성명>이라는데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내든 <추가적조치>란 비평화적방법이며 그것은 곧 <제재>와 <봉쇄>, <군사적선택>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제 <추가적조치>라는것이 현실로 되면 이 땅에는 핵우박이 쏟아져 삼천리강산이 폐허로 되고 온 민족이 참화속에 빠지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는데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군사적억제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억제력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강토와 동포형제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력이다.

우리 민족은 신식보총 한자루 없어 외국군대에 자기 나라 왕궁의 파수를 맡기고 국토를 통채로 빼앗긴 뼈저린 치욕의 력사, 수난의 망국사를 잊을수 없다. 자기 힘이 없으면 민족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은 지나간 력사의 교훈이다.

특히 현 미국행정부는 상식도 리성도 대화도 통하지 않으며 국제법도 세계여론도 유엔도 안중에 없는 집단이다.

부쉬정권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테로지원국>이니, <인권탄압국>이니, <대량살상무기확산국>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 <힘>으로 없애치우고 행성을 아메리카합중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이 남을 치고 먹는것을 세계질서로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처한 물리적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벌써 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어 온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은 안전하고 문제로 되지 않으며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지않는것은 위험하고 문제로 된다는 론리아말로 얼마나 낯강도적인것인가.

주먹을 내두르는 자들은 주먹으로만 다스릴수 있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천출명장의 선군령도를 받고 있는 우리의 무적필승의 억제력은 조선반도의 북만이 아니라 남도 지켜 주는 민족방위, 전 민족을 보호해 주는 민족수호의 보루이다.

우리의 군사적억제력은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로 되지만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동포애로 전쟁위기를 막아 주고 지켜 주는 철의 방패로 된다. 그것은 남조선동포형제들에게 어떠한 위협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운명의 수호주로만 될뿐이다.

남조선동포형제들은 우리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에 대해 마땅히 민족적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억제력은 미국의 <정밀타격>에도 <외과수술식타격>에도 <선제핵공격>에도 다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들의 <공중타격>에는 공중타격으로, <지상전략>에는 지상전략으로 대답한다는것이 우리의 억제력의 사명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민족의 피 맺힌 원한과 복수를 담아 침략자들의 아성을 짓뭇개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할것이다.

우리의 무제한한 타격앞에 그 어떤 <핵우산>도 <방위체계>도 <재배치>도 모두 무용지물로 될것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대미결전은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구원의 대성전이며 민족수호의 대결전이다.

그것은 전체 조선민족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을 타방으로 하는 정의와 부정의, 평화와 반평화사이의 전면대결이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반전반미운동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사상과 리념, 당국과 민간, 여와 야의 구별이 있을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 남녀와 로소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친미보수라고 하여 어찌 핵참화를 면하고 당국자라고 하여 어떻게 전란을 피할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전 민족이 단합하여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 도처에서 반전반미성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핵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오늘 우리의 선군정치와 억제력에 대한 태도는 평화와 전쟁,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은 온 겨레가 환영하고 지지하며 받들어 나가야 할 가장 귀중한 생명력이다.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살건 우리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그의 강력한 결정체인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적극 옹호해 나서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무모한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반전반미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할 것이다.

▶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조·미 관계의 근본문제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 (2) 미국이 3년 동안 덮어두었던 북(조선)의 '핵의혹'
- (3) 조·미 사이에서 재개된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
- (4) 2002년의 '핵의혹' 공방전에서 부시 정부가 자행한 왜곡과 날조
- (5)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 (6) 부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
- (7) 북(조선)의 '놀라운 제안'은 무엇일까?
- (8) 정세는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1993년 3월 10일 북(조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AEA)를 앞세워 강요하고 있었던 이른바 '특별사찰'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오전 10시 50분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전격적이고 대담한 정치공세였다.

당시 미국 정부와 워싱턴 정치권에서 핵확산금지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를 강타한 북(조선)의 정치공세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은 북(조선)의 초강경 정치공세 앞에서 대경실색하였다. 북(조선)은 미국의 허를 찔렀고, 북(조선)의 기습공세를 받은 미국은 비명을 질렀다.

놀랍게도, 북(조선)의 공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북(조선)은 1993년 5월 29일에 사거리 500킬로미터의 준중거리 미사일 1기를 일본의 노도반도 앞바다로 시험발사하였고, 30일에는 사거리 3,000킬로미터의 2단형 중거리 미사일 2기를 괌 앞바다와 하와이 앞바다로 각각 시험발사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거점들인 일본 열도, 하와이, 알래스카, 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들을 모조리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실증한 것이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무력시위였다. 북(조선)은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를 동시에 전개하면서 미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북(조선)의 영변 핵시설에 대하여 이른바 특별사찰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만일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를 당해내지 못하고 불과 몇 일 뒤에 기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역사적인 조·미 정치협상은 북(조선)의 전술적 승리와 미국의 전술적 패배를 보여준 사변이었다.

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은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곤경에 몰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원칙을 수용·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6월 11일 뉴욕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성명이 조·미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그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조·미 관계개선의 원칙이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역사적 문서를 채택하였던 전술적 승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짙막한 세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었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위의 문장에는 네 가지 원칙이 들어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적대정책 포기의 원칙,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원칙이다.

이 네 가지 원칙 가운데 조·미 두 나라가 합의하여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공동의 원칙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나머지 3개의 원칙은 형식상 조·미 두 나라가 합의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내심 반대하였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쌍방이 합의한 원칙이 아니라 북(조선)이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제시한 원칙인 것이다. 당시에 미국은 내심 반대하였으면서도, 강력한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로 미국을 압박하였던 북(조선)의 요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기에 합의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1993년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적대정책 포기의 원칙,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원칙은 북(조선)의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를 그대로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원칙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3대 원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한 조·미 관계개선의 원칙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93년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북(조선)은 시종일관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 8월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합의성명, 같은 해 10월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문, 그리고 2000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3년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북(조선)의 대미전략의 성과였다.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2002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는 대통령 특사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가 파견되었는데, 그의 상대역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뉴욕에서 열린 조·미 정치협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미국에게 제시하여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였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이듬해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문에 서명하였던 바로 그 사람 강석주 제1부상이었다. 이 사실은 북(조선)이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1993년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정치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조선)이 경제재건에 요구되는 물질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이라는 협상수단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정치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조·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도 순전히 북(조선)의 경제재건에 요구되는 물질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이 '달라'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에게 맞서서 그토록 치열하게 정치·군사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한(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달라' 획득의 문제로 바꿔치려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오해다. 물론 조·미 관계와 조·일 관계에서 경제지원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질적 보상문제가 배제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미 관계와 조·일 관계의 핵심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군사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에는 물질적 보상문제가 들어있지 않다. 북(조선)의 대미협상전략은 물질적 보상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북(조선)은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이 3년 동안 덮어두었던 북(조선)의 '핵의혹'

부시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월 스트리트 저널』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제3국으로부터 사들였다는 '정보'를 부시 정부가 파악한 시점은 2002년 7월이었다고 한다. 부시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8일자도 미국이 지난여름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물품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브루나이에서 북(조선)의 백남순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Colin L. Powell)의 회동이 이루어진 직후에,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북(조선)이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2002년 9월말, 그러니까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뒤늦게나마 남(한국) 정부당국에 제공하였다고 한다.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미국 국무부의 성명은 그 문제를 언급한 대목에서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에 요구되는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고 표현하였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제3국에서 반입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날조다. 농축우라늄을 제조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용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핵의혹'이라는 울가미를 씌우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부시 정부가 2002년 7월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정보'를 파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월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제조를 조·미 정치협상에서 시인했다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언론에 그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는 바람에 10월 16일에 앞당겨 공개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그날 낮에 발표하지 못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에 서둘러 발표하였다. 백악관이 국무부보다 한 발 앞서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제조를 시인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도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반입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북(조선)의 협상대표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왜곡이다.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사들였다는 '정보'를 지난 7월 이후 두 달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사들였다는 '정보'를 조·미 정치협상에서 시인하였다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언론에 새어나가자 서둘러 공개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일반 언론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부시 정부가 만일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이라크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데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조·일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에서 부시 정부가 만일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본의 여론에는 조·일 정상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역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조·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파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부시 정부는 등장 이후 처음으로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 나설 때, 북(조선)이 강력한 정치공세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무척 긴장하였다.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맞설 수 있는 대항 수단을 철저히 요구하였다. 그들의 머리 속에서 정치협상의 대항수단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였던 것이다. 부시 정부가 그러한 정치협상의 대항수단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2002년 7월에 처음으로 파악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파악했다는 시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파악의 시점에 관한 내외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 시점은 1999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파키스탄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로 폭발실험에 성공하였을 때,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동력자원부가 북(조선)도 앞으로 6년 안에(다시 말해서 2004년 안에)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때는 1998년이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의장 벤저민 길먼(Benjamin A. Gilman)이 뉴욕에 있는 아시아협회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때는 1999년 10월이었다. 지난 10월 20일 미국의 씨엔엔(CNN)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였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단편적인 정보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1999년에 이르러서는 북(조선)이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올해 여름에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한국)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수년 전부터 북(조선)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21일 남(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관련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첩보를 정부가 지난 99년에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 이준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 사실을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1999년은 클린턴 정부 시기다. 이것은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 의도적으로 덮어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보'를 파악하였다고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미국은 1999년에 북(조선)의 '핵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페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워싱턴에서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클린턴의 방북으로 조·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왜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공개하면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유포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유포하고 있는 행위의 이면에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에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조선)이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극비정보'를 '핵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날조하여 국제사회에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의혹' 날조에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술할 것이다.

(3) 조·미 사이에서 재개된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

그렇다면 미국이 '핵의혹'을 날조·유포함으로써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문제는 간단한 답변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강력한 압박공세를 취하기 위한 구실로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그릇된 것이다. 미국은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조선)의 '핵의혹'을 날조·유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련하여 마치 '정설'처럼 굳어진 판단을 뒤집어엎는 이 새로운 관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미국이 끈질기게 '핵의혹'을 날조·유포하고 있는 대상은 북(조선)과 이라크다. 그런데 북(조선)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새로운 친미정권으로 교체하고 이라크군을 무장해제하려는 기공할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북(조선)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핵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조선)과는 수없이 정치협상을 추진하면서 1993년 6월의 조·미 공동성명, 1994년 8월의 조·미 합의성명과 10월의 조·미 기본합의문, 2000년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한때 조·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똑같이 '핵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라크와는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정치협상도 하지 않았고, 단 한 건의 합의문서도 채택하지 않

았으며, 오직 침략전쟁, 정치압박, 경제봉쇄, 외교고립을 총동원하여 기어이 압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 준비를 지휘하고 있는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나고 묻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물을 질문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나 의회에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중얼거리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호전광 럼스펠드조차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면서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국주의적 재침책동을 피할 길이 없는 이라크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처지에 있다.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 모하메드 알두리가 『뉴욕 타임스』 2002년 10월 16일자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면, 이라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라크는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 어떤 대량파괴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무기를 획득할 의사도 없다. 우리가 미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말을 믿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사찰단을 보내어 조사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조사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공개정책을 제안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가 미국의 '핵의혹'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굴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라크는 자기의 정치적 굴복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10여 년만에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밀려가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이라크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핵의혹' 공방전에서는 공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지만, 북(조선)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핵의혹' 공방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공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다. 이것은 조·미 사이에서 '핵의혹' 공방전이 벌어졌던 199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북(조선)은 '핵의혹' 공방전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세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으며, 미국이 '핵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세로 나오면 즉각 더 강력한 역공을 가하여 미국을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곤 하였다. 북(조선)은 미국의 '핵의혹' 공세를 단호히 물리치고, 강력한 역공으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는 어찌하여 1990년 이후 '핵의혹' 공방전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위기에 몰려 있으며, 북(조선)은 어찌하여 1993년 이후 '핵의혹' 공방전에서 미국에게 압박공세를 가하면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서 찾아야 한다. 2002년 10월 19일 미국 텔레비전 방송 엔비씨(NBC)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북(조선)은 이라크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강한 군사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군대의 사상무장 수준은 일단 논외로 치고, 순전히 무장장비의 수준만을 평가할 때, 강한 군사력은 전술무기의 보유수준을 넘어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략무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뜻한다.

이 글은 북(조선)의 '핵의혹'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북(조선)의 전략무기에 대하여 논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하지는 않고 핵무기에 관한 문제만 다룬다.

이라크는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에게 완패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북(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를 갖지 못했다면, 미국은 애초에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북(조선)의 운명도 이라크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협상을 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와는 전쟁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 그리고 북(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과 그것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조·미 관계를 분석하려 하는 경우, 결론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리게 된다. 북(조선)은 이라크와 달리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핵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도 번번이 패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2001년 1월에 작성한 장문의 논문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북(조선)의 대응 핵전략』에서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논술했다. 그 구체적인 논술내용을 이 글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한다. 다만 최근에 부시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북(조선)의 '핵의혹'을 날조·유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정부와는 구별되는 발언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조선)이 1개 또는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러한 분석은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나는 북(조선)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도 지난 10월 21일 일본 외상 가와구치 요리코를 비롯한 고위관리들과 잇따라 회담하는 자리에서 북(조선)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 2002년 10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조선)이 1년 안에 연간 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부시 정부 고위관리들의 견해는, 미국이 그 동안 북(조선)의 '핵의혹'에 대한 발언수위를 조절하면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조선)의 '핵의혹'에 대한 미국의 발언수위는 지난 9년 동안 조·미 '핵의혹' 공방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천해왔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조야한 형태의 원시적인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연간 6개의 핵무기를 곧 만들 것이라는 식으로 변천된 것이다.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비록 정부의 공식발언은 아니지만,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일반 언론들도 그러한 견해에 슬그머니 맞장구를 치고 있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 2002년 10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조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미국에게 경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 한(조선)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정치·군사적 동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미 관계가 그 문제에 의하여 규정받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조·미 두 나라는 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미국이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일본에게 핵무장의 구실을 주는 것이므로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금지체제는 즉각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게 핵무장의 구실을 주지 않아야 미·일 동맹체제도 유지할 수 있고 핵확산금지체제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조선)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 보유사실을 구태여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미국에게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치공세를 취하면 된다. 북(조선)의 목적은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공세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북(조선)의 '핵의혹'이라는 허구를 날조·유포하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은폐하면서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목적을 높이고 있으며, 북(조선)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강력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체제가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미 정치협상의 걸모습만 훑어보면, 그 협상은 미국이 날조한 '핵의혹'의 허구를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는 참으로 '기묘한 협상'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조·미 두 나라가 대결하고 있는 지점은 미국이 날조한 '핵의혹'의 허구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다. 조·미 정치협상은 '핵의혹'의 허구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를 놓고 사회주의국가와 제국주의국가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치열한 공방전이다.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물품을 제3국에서 반입하였다고 하는 '정보'가 왜곡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미국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매우 충격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다시 꺼내어놓았다.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부시 정부가 한동안 잠잠하였던 '핵의혹'을 다시 꺼내어 날조·유포하는 것을 북(조선)에 대한 압박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부시 정부가 '핵의혹'을 날조·유포하는 것이 북(조선)에 대한 압박공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 관계의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핵의혹'은 부시 정부의 압박공세가 아니라,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곤경에 몰리게 된 부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세적 대응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조선)은 '핵의혹' 공방전에서 언제나 공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곤경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조·미 사이의 '핵의혹' 공방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조선)이 언제나 공세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까닭은 '핵의혹' 공방전이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만들었는가 아직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그 대신 '핵의혹'의 허구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

미국이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데서 핵확산금지체제가 가지는 정치·군사적 의의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체제는 세계를 '경양'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미국의 정치·군사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금지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에 따라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미·일 동맹체제도 동반적으로 붕괴되고, 결국 미국의 정치·군사전략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파탄지경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조·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까닭은, 조·일 적대관계를 일정하게 완화시킴으로써 일본의 비핵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안보관리체제 안에 묶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북(조선)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북(조선)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강경책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핵확산금지체제와 미·일 동맹체제가 동시에 붕괴되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조엘 위트(Joel S. Wit)가 「뉴욕 타임스」, 2002년 10월 19일자 기고문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경우, 남(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전세계적인 핵확산금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가 훼손될 것이다. 조엘 위트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로 무장하는 경우를 논하였지만, 이 글에서 나는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서술한 내용은 웬만한 정보와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 대체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조·미 정치협상에서 비공개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해서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은 없을 터인데도, 미국은 비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만일 미국이 조·미 정치협상에서 비공개적으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인정하면,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할 마지막 수단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북(조선)의 '핵의혹'은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대항수단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끝내 감추면서,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항하려는 목적에 따라 북(조선)이 핵무기를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있다는 '핵의혹'을 날조·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대항수단인 '핵의혹'의 허구에 매달려 있고, 북(조선)은 정치공세를 퍼부으면서 그 마지막 대항수단마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미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이다.

(4) 2002년의 '핵의혹' 공방전에서 부시 정부가 자행한 왜곡과 날조

부시 정부는 이번에 또 다시 마지막 대항수단에 의존하여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맞서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시 정부는 마지막 대항수단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는 플루토늄에 관련한 '핵의혹'의 허구를 마지막 대항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번에 부시 정부는 농축우라늄에 관련한 '핵의혹'의 허구를 마지막 대항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8일자 보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많이 반입하였다는 '정보'다. 「요미우리신문」,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미 정치협상에서 제임스 켈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북(조선)으로 반입된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에 관한 영수증 및 통관서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둘째, 북(조선)이 우라늄 농축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다. 이것은 미국의 첩보위성 및 첩보기에서 입수한 '의혹지점'에 대한 영상정보를 뜻한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증거자료'들은 2002년 10월 4일 평양에서 있었던 조·미 정치협상에서 제임스 켈리에 의하여 대항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켈리가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대항수단을 이렇게 사용하였다.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농축우라늄 제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계획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여기 있다. 그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시 정부가 내놓은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라는 것은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부시 정부가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를 왜곡·날조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북(조선)이 과연 미국의 정보망에 노출되리라는 것도 모르고 버젓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양의 고강도 알루미늄을 다른 나라에서 반입하는 것은 미국의 정보망이 쉽게 포착할 수 있는데, 북(조선)은 그 반입이 미국에게 포착되리라는 것을 미처 몰랐을까?

『워싱턴 타임스』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1999년에 북(조선)의 무역회사가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물품을 일본 회사에 주문했다는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북(조선)이 초기 단계의 농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본 회사의 판매가 미국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3년 전에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이 파악했다는 그 '정보'도 역시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날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3년 전의 그 정보를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북(조선)이 올해 또 다시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물품을 제3국에서 통관절차를 밟아서 수입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부시 정부는 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물품이 아니라 일반 산업용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을 농축우라늄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왜곡하였던 것이다.

둘째, 미국의 첩보위성과 첩보기가 24시간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정찰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있는 조건에서 북(조선)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지상시설을 버젓이 착공하였을까?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비확산문제 연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 존 윌프스탈(Jon Wolfsthal)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가스원심분리시설들(gas-centrifuge facilities)은 크지 않고 높은 열을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얼마든지 지하에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은 소규모 지하시설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 북(조선)이 만일 우라늄 농축시설을 세우려 하였다면 지상에서 착공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북(조선)은 이번에 지상시설을 버젓이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정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북(조선)의 실수였을까? 부시 정부는 일반 산업용 건축공사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왜곡하였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이른바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는 것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꾀변이다.

북(조선)이 고강도 알루미늄을 반입하려다가 미국의 정보망에 노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지상시설을 착공하여 미국의 첩보위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부시 정부가 언론에 흘린 것은 평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또 하나의 '핵의혹'을 날조한 행위다. 부시 정부는 처음 맞붙게 되는 '핵의혹' 공방전에서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항할만한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해 고심한 나머지, 자기들의 감시정보와 정찰정보를 왜곡하여 또 하나 새로운 '핵의혹'을 날조해낸 것이다.

(5)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미국이 먼저 공세를 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지, 미국이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미국의 '핵의혹' 날조·유포를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맞서려는 대항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앞서서, 조·미 사이의 '핵의혹' 공방전은 이번에 부시 정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핵의혹' 공방전은 이미 1993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서 시작되어 9년 동안이나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결의 연속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북(조선)이 부시 정부에게 강력한 정치공세를 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클린턴 정부가 조·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북(조선)과 합의해놓고 퇴장하였으므로, 부시 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그 합의된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 정부는 북(조선)이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전술적 승리를 얻으면서 조·미 관계개선을 위하여 마련해놓았던 조치들을 무시하고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미 정치협상 재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부시 정부는 이번에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면 북(조선)의 '핵의혹'을 대항수단으로 들고 나오면서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응하려고 타산하였다.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제1차 '핵의혹' 공방전은 9월 17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다.

부시 정부는 제1차 '핵의혹' 공방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일본 정부에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사들였다는 이른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시점은 지난 8월 하순이었다. 『마이니치신문』 2002년 10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였던 미국 국무차관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는 총리 관저에서 고이즈미를 만나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조·일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미·일 전략협약이 진행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북(조선)의 '핵의혹'은 조·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인 지난 9월 12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었다. 그 회담에서 부시는 고이즈미에게 조·일 정상회담에 나가면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언론들이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2002년 10월 2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부시는 고이즈미에게 "북(조선)의 '핵의혹'을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핵무기 개발의 동결을 유지하도록 북(조선)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이즈미는 부시의 요청에 따라 조·일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거론하였다.

일본 정부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조·일 정상회담의 논의내용을 보면, 조·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는 북(조선)이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한(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조·미 기본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일 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한 고이즈미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문제'는 일본과는 무관한 것이며, 조·미 사이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핵문제'는 조·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본은 주제넘게 끼여들지 말라는 뜻이다. 할 말을 잃은 고이즈미가 핵전쟁 능력에서는 미국이 북(조선)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말하면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전쟁 능력에서 미국이 우위인지 북(조선)이 우위인지는 실제로 핵전쟁을 해보아야 안다고 말했다.

부시의 요구대로 허위정보를 가지고 조·일 정상회담에 나섰던 고이즈미는 '핵의혹'에 관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9일자에 보도되었던 제1차 '핵의혹' 공방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전평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미국이 전달해준 '핵의혹'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조·일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한다.

제2차 '핵의혹' 공방전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조·미 정치협상에서 있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제2차 공방전도 역시 미국의 완패로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20일자 기사에 나온 흥미로운 표현을 빌리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흉내내고 있었던 조지 부시의 향후 진로는 북(조선)에 의해서 가로막힌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은 제임스 켈리에게 "단호하고 공세적으로(assertive, aggressive)" 발언했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 2002년 10월 16일자는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석주 제1부상의 태도가 "호전적(belligerent)"이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국)의 언론들이 매우 산만하게 보도하였던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에 조·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이 켈리에게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밑그림으로 재구성된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 군대는 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조·미 공동성명과 조·미 기본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조·미 공동성명과 조·미 기본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을 끌어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위의 재구성한 내용은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게 흘려줌으로써 여기저기 산만하게 보도되었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은 북(조선)이 추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미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북(조선)은 부시 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조·미 기본합의문은,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핵의혹'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이고, 북(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미 관계 개선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다. 그런데 북(조선)은 부시 정부가 그러한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음을 밝혔다.

셋째, 북(조선)은 조·미 기본합의문의 무효화는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남아있어야 할 근거를 제거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였다.

넷째, 북(조선)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밝혔다.

다섯째, 북(조선)은 미국의 침략전쟁전략에 대해서 해방전쟁전략으로 맞서고 있다는 '주체의 전쟁관'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6) 부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

이번에 열린 조·미 정치협상에서 부시 정부는 북(조선)으로부터 불의의 타격을 받고 비틀거렸다. 켈리가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강석주 제1부

상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자 부시 정부는 경악과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시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충격(jaw-dropper)”이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이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에서 표현한 대로, “미국은 북한의 도전적인 태도에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강석주 제1부상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와 의 협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말하였지, 켈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한 데 대해서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주권행사를 밝히는 것과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는 핵무기의 보유가 주권행사라는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이다.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발언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발언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제임스 켈리 같은 고위관리들이 자신의 입으로 북(조선)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자기들의 정보평가내용을 종합·정리하여 2002년 1월에 발표한 「국가정보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서도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부시 정부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시인발언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조선)은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명할 필요도 없으며, 시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는 주권행사의 문제를 확인해주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였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부시 정부가 그 시인 발언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다른 데서 충격을 받았다. 부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미국이 조·미 공동성명과 조·미 기본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시 정부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질타하였던 강석주 제1부상의 초강경한 공세적 발언이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그 발언을 듣고 경악과 충격에 빠졌던 것이다.

그런데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 부시 정부의 대표로 참석했던 제임스 켈리는,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였다는 왜곡된 주장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에 따라서 모든 언론들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제임스 켈리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물품을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내놓자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으며, 부시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북(조선) 협상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20일자 기사 따위가 그것이다. 모든 언론의 논조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발언에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그 왜곡된 발표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미 정치협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부시 정부의 언론공작이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핵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 제임스 켈리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제임스 켈리가 ‘증거자료’를 내놓으면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부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전술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협상전술은 파탄되고 말았다.

부시 정부의 협상전술이 그렇게 파탄되었던 원인은, 부시 정부가 나중에 왜곡하여 발표하였던 대로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시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미국과의 정치협상에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강석주 제1부상의 발언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있다. 『요미우리신문』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은 약 1시간 동안 회담장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회담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강석주 제1부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미국의 협상대표를 경악과 충격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를 강석주 제1부상에게 지시하였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정치과업의 수행정형을 언제나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이행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으나 하는 문제가 정치협상의 평가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등장한 이후에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인정하기는커녕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조성하며 관계개선을 방해하였다.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와의 어렵고 힘든 정치협상을 통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접근하였던 관계개선의 추세를 정체상태에 빠뜨린 것이다. 조엘 위트가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9일자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부시 정부는 조·미 대화나 조·미 기본합의 이행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 계속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조·미 관계개선의 정치과업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정부와의 첫 정치협상에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타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7) 북(조선)의 '놀라운 제안'은 무엇일까?

2002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에 의해서 경악과 충격에 빠져들었던 미국의 협상대표는 연이어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북(조선)이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돌아간 켈리의 보고를 통해서 북(조선)의 제안을 전달받았던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켈리 특사는 북(조선)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으며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그 제안을 보고하자 미국 정부 안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북(조선)은 부시 정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연속하여 강타를 날린 셈이다.

제임스 켈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부시 정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조선)의 제안은 무엇일까? 그 제안에 관해서는 조·미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으나, 당시 강석주 제1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발언하였던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를 인정하며,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면 우리도 미국의 '우려사안'을 해결하려 한다."

제임스 켈리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이 미국에 제안한 것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북(조선) 정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대한 법적 담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제임스 켈리에게 요구하였던 적대정책 포기와 자주권 존중은 1993년 6월에 북(조선)이 천명하고 클린턴 정부가 합의하여 조·미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던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부시 정부와의 첫 번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은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두 개의 원칙을 제안하였고, 한(조선)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제3의 원칙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 발표된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그 담화는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협상대표는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약속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예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임스 켈리의 발언과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조건과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3대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다.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논술했었다.

이번에 북(조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이 아니라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3대 조건을 제시하였다. 북(조선)은 앞으로 3대 조건 위에서 정치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그 3대 조건을 받아들지 않으면 조·미 정치협상은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조선)이 10월 25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던 대로, 미국이 북(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조·미 관계개선의 제2원칙인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이것은 북(조선)이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제안하였던 조·미 사이에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역시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렇지만 북(조선)

이 기존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제안을 조·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제안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북(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가침조약 체결로 담보하는 것은 조·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조건이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미 관계개선의 제1원칙인 적대정책 포기 의 원칙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1994년 4월 28일 북(조선)이 외교부 성명어로 발표했던 조·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자는 제안과 19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조·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조·미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조·미 공동군사기구를 조직·운영하자는 제안은 이번에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 나왔다. 2002년에 제안한 조·미 불가침조약과 1996년에 제안한 조·미 잠정협정은 동일한 것이다.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조·미 평화협정 체결의 선행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은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조·미 관계개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법적 담보로 견지하면서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시되었던 북(조선)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 1999년 9월 17일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일부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였으며 경제제재조치의 실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북(조선)은 조·미 정치협상은 미국이 북(조선)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미국이 북(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북(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조·미 정치협상이 추진된다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은 북(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로써 1993년 6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하였던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서 두 개의 원칙이 실현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조·미 국교가 수립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조·미 사이에서는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조·미 관계개선 제3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10월 25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북(조선)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미국의 안보상 우려'라는 표현은 부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우려사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미국의 '우려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을까?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자에 보도된 외교소식통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북(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북(조선)은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강석주 제1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제안하였던 충격적인 제안은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이라고 생각된다.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는 이번에 열린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은 조·미 두 나라의 모든 현안을 포괄하는 일괄타결을 역제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에 산만하게 보도된 북(조선)의 '놀라운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경우, 북(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8) 정세는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조선)의 '충격적인 제안'은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다. 그 제안은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안' 해결요구와 북(조선)이 제기하고 있는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 실현요구를 서로 맞바꾸는 일괄타결이 그것이다.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북(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에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근본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안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리처드 아미티지는 1999년 3월 4일 연방하원 의장 벤저민 길먼에게 제출한 「아미티지 보고서(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에서 조·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안(comprehensive package)'을 제시하면서 "북(조선)이 미국의 안보관심사를 충족시켜준다면 미국은 완전한 관계정상화(국교수립을 뜻함-옮김)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일괄타결안을 제기하였던 리처드 아미티지는 지금 부시 정부의 한(조선)반도 정책 수행을 총지휘하는 국무차관으로 있다.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는 '우려사안'과 3대 원칙 실현을 서로 맞바꾸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해결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북(조선)의 제안을 외면하면서, 북(조선)이 핵문제에 관한 협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여야 정치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일토당도하지 않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켈리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북(조선)으로부터 일괄타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조선)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먼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북(조선)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조·미 기본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한(조선)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부시 정부의 생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금 부시 정부는 겉으로는 북(조선)에게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만일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제시한 조·미 정치협상 재개의 3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부시 정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체제와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부시 정부는 겉으로는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라는 공허한 요구를 되풀이하며 맞서겠지만, 결국에는 1993년에 조·미 사이에서 합의한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하다.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조·미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 환영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의 새 정부가 적대정책을 취할 경우 조선은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아사히신문」 2001년 1월 22일자에 보도된 이 발언은, 2001년 1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중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에게 밝힌 대미정책의 기본입장이다.

지금 부시 정부는 조·미 정상회담에 나서서 근본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인가 아니면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로 파국을 맞을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2003년의 갈림길에 차츰 밀려가고 있다. 2003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조·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제시한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2002년 10월 31일 작성)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에 대하여>

0.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대 다수 가까운 인류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발 여성문제가 할 수 있다.

여성문제는 시대별, 지역별로 가조, 직업과 사회적 여건, 신분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그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는 상이하지만 대부분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과 그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인류의 역사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에 의해 활발해 졌다.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산주의권 나라 그리고 오랜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해당시기 풍미한 사상과 사회과제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해온다.

여성문제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그 본질 해결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여성해방이론들이 도출되었으며, 그것은 실천적인 여성들의 투쟁을 통하여 검증되고 실현되었다. *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은 한반도 이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처지와 조건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여성을 규정하는 모순들을 사회구조의 연관속에서 밝혀내고 그 그늘-원인을 바로 인식하며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경로를 보여주는 이론을 이야기 한다. 안타깝게도 여성운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해방이론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조건, 여성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그 나라들만의 해방이론들이 존재하고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속에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이며, 여성들에게 복잡하고 간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작업, 각 이론과 투쟁의 경험,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한반도 이남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깊이 분석하고 그 해방이론을 우리 스스로 도출하고 실천하여 우리식의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간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남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고 또한 자료나 경험의 축적이 많지 않으며 한국사회의 복잡함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여성해방의 과제를 도출하고 조

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각고의 노력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학내에서 여성문제를 먼저 등장하였고, 실천적 조직으로 여학생 회를 꾸려내었으며 꾸준히 이론을 풍부화하면서 여학우 대중에 근간한 여학생운동을 정형화하는 과정이었다. 아직도 여학생운동에서 밝혀내어야 할 이론적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학우, 여성민중을 여학생회라는 대중울타리를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조직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보태지고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기간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에서 밝혀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더욱 논의를 활성화해가면서 풍부화시켜 나가야 한다.

1.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 이론은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1) 이남사회의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밝히고 있다.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모든운동은 모순에서 출발한다. 그러하기에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는 모순에서 출발한다.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는 모순(통칭하여 여성문제)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문제란 성을 매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 사회 학교등 제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문제를 말한다. 한 성이 또다른 성을 억압하는 것이나 성별로 분리하여 차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한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단순히 몇몇의 사례뿐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삶 전체를 두루 살피며 그속에서 성의 억압과 착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 이남사회의 여성문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영역별로 살펴보자

2) 여성문제의 원인,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다.

여성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면 여성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구조)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여성문제는 인류초기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게 되는 원죄가 아니라 힘에 의한 사람의 지배와 착취를 기반한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을 부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자주적인 진출을 막아나섰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는 사회전반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여성의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고 여성역할을 규정하는 성별분업의 고착화에 그 억압의 근본을 두고 있다.

3) 여성의 처지와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러한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속에서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지배구조와 성별억압을 살펴보고록하자.

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여성억압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

제 2차 세계대전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한국은 미국에게 다시 강점당하고 사회의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됨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다시 짓밟히게 되었다.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그의 식민지성은 한국사회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식민지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적 자주권의 상실은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상실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권력을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 현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일제의 총독정치때와는 다른 간접적 통치방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통치체계는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현지지배체계와 겹보기에 자주권을 가진 독립군의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식민지 대리정권으로 치장한 대외통치체계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와 충실한 대리정권을 세워 남한에 대한 자신의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 기구들을 마련하고, 계속 정권을 교체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켜왔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과정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은 독립국가의 물질적 기초이기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식민지는 경제적 예속을 중요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을 강점한 미국은 자신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 했다. 미국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급적 기반을 축성하기 위해 매관자본을 축성하고 농촌에서 봉건적인 지주 소작관계를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해 왔다.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립성을 완전히 상실당하고 자본과 원자재, 설비와 기술 시장 모두를 미국을 비롯한 외래 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식민지 하청경제로 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 예속성에 바탕한 반식민지와는 달리 미국에게 군사전략적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군사적 예속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우선 한국에서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명령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군부에게서 통수권은 명줄이다. 바로 그 통수권을 쥔 자가 군대를 쥘지며 군대를 쥘자가 정권까지 쥐게 된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상문화적 예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식민지인가 아닌가를 가름해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민족자주정신이 민족적 독립의 사상적 초석인 만큼 미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의식, 민족주체의를 말살하고 외세의 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해 왔다. 한국사회의 의식구조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대 굴종의식, 매국배종의의식, 외래종교의 사치스러움속에서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의 사멸등이 그것이다.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여성민중들의 삶은 어떠한가?

첫째,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주한미군의 성요구충족의 대상이 되고 저질 퇴폐향락문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의 주한미군 범죄, 해방 이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후 한시도 주한미군의 범죄의 위협속에서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고 생각했던 주한미군들이 한반도 땅을 밟으면서 처음 했던 것이 술과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의 땅에 버티기 내국인 출입금지업소를 만들어 놓고 부패타락한 제국주의 성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되고 있는 불법 포르노 비디오의 95%가 기지촌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이 포르노 비디오는 여성의 성을 인간의 아름다운 한부분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락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포르노 비디오는 시중에 유통되면서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흐리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상대로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기지에서 몸을 팔면서 온갖 인간으로서의 참지 못할 억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식민지 종속국 여성으로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살지만 금기가 주한미군에게 살해까지 당하는 것이 지금 남한 여성민중의 현실이다.

고 윤금이씨부터 서정민씨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폭행 강간등의 경우까지 합하여 미군범죄 대한 재판율은 1.1%에 불과하고 설사 형을 받았다하더라도 호화로운 감방생활에 감형 가석방등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둘째, IMF의 충격흡수층 한반도 여성들, 일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상황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저열한 근로조건 승진과 승급 제한과 같은 성차별이었다. 하지만 요근래 몇해사이에 벌어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사례는 만만치 않다.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들어온 IMF신탁통치는 이남 민중의 삶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의 합법화로 실업자의 수가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거리에는 부랑자 노숙자로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생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생계형 자살자도 늘고 있다. 남편의 생계부양으로 인해 이때까지는 취업의 문이 닫혀 있어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여성들은 IMF이후 집안의 실질적인 가정으로 이 집의 여성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 집안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을 단순히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정리해고가 시행된 이후 정리해고 0순위로 가장 먼저 해고 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특히 사내커피이나 아이가 한둘있는 주부사원인 경우에는 예외없는 정리해고 대상자이다. 기업체에서의 해고사유는 가장인 남편이 생계비를 벌어오고 있으니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인 가정일에 충실하라는 논리이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IMF에 의해 도래된 대량실업사태와 경제불황의 충격흡수층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 여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능이 며,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제국주의와 일부 매판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한 정권의 성립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결정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본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민중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민중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중들은 변혁의지를 가지고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끊임 없이 짓누르려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그것의 주요한 방식은 크게 물리력과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다. '여자가 무슨?' '여자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논리를 법제도로, 교육으로, 사회관습으로 심어다가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인간이 아닌 온순하고 소극적인 인간으로 길들여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은 남성의 몫, 사회나 정치적인면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신문은 보는 것은 남성들만의 것이고 여성들은 드라마나 보게 만들고, 화장품 약세사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자꾸만 사회의 모순에 눈뜨지 못하게 한다. 인구의 반이 잠잠해 있다면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자본주의 사회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가능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잉여가치는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긴다. 이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따라서 노동력을 그 가치이하의 가격으로 사는 것,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타나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로 여성의 노동력, 특히 가사노동력(노동력 재생산 영역)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 가사노동력은 분명히 노동자가 내일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안받침 해주는 노동력이다. 만약, 이 가사 노동력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밥을 사먹어야 하고 아이들 또한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 등 만만찮게 많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모든 노동력을 주부의 할 일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이 무일푼으로 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생산이 사회화 되었으면서 유독 노동력 재생산해내는 상품 생산노동과는 달리 하찮고 시시한 일로 취급으려써 여성은 집안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력 재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첫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 속에서 2중,3중으로 착취받고 있다.

식민지 남한 경제구조는 심한 기형성과 종속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5,60년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불리는 방직, 서유, 전자등의 업종에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했으며, 80년대 들어와 제국주의의 분비물인 향락유해산업에 여성들이 흡사 당하고 있는 현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많은 민중여성들에게 노동의 문제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조건속에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적'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속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대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야 한다.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헐값에 여성 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된다.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속에서 여성은 단순직 임시직으로 직종을 크게 제한받게 된다. 또한 그나마 열려있는 전사, 교직, 공무원, 통역, 번역등의 제한된 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 밖에 보장하고 있지 않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의 제한은 자본주의 성상품화의 발맞추어 자신의 성을 무기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1980년대 한국 경제 구조변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는 서비스 부분의 팽창이다. 서비스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차 산업의 발달은 1,2차 산업의 건설

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비생산적이고 향락적인 서비스업의 성장이었던 것이다. 향락산업이 성장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파행적 구조이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가 무분별하게 향락문화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각종 투기 및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2차 산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자본이 향락산업에 투자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같은 향락산업 중심의 서비스직 부문의 팽창은 곧 많은 여성들이 이 부문에 취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생관광이다. 해외 여행 자유화와 73년, 대만과의 국교단절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다. 그해 일본 관광객 수는 전년에 비해 83.3%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특출난 명소가 있는것도 아닌데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인 이들의 대부분이 본국에서 '기생서비스'가 만점인 남성천국 '한국의 매력, 기생관광' 등 한국의 기생관광에 대한 일본내 여행사의 선전이나 한국기생파티의 경험을 흥미위주로 그려 놓은 기사들을 보고, '기생파티'의 묘미를 직접 맛보고자 떼지어 몰려온 일명 '색정단'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기생관광을 선호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식민지 종속경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대미 의존적 경제로 재편되었던 한국경제가 65년 한일 협정조인으로 서비스직 종사자 217만 명중 여성이 61.7%로 13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여성이 취업한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기타 사회개인 서비스업이다. 이 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의 수요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모두 향락산업에 종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의 수에 비교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 특유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향락 산어부문의 여성종사자 증가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성윤리에 기초를 둔 성의 상품화가 진전됨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절제한 외국문화와 성적 가치관이 유입되어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난다. 특히 이 부문에 여성들을 대부분 소규모이며 불안정한 업체로 노동계약이나 취업 규칙이 전무한 상태에 고요되어 있는 형편이다.

한편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20대 전후의 미혼 여성이다. 서비스업 직주는 다른 어떤 직주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지식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여성특유의 희생, 봉사를 강조하며 외모나 연령 등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부문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안정한 형태에 고요되어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밖에 살 수 없는 미국의 속구이라는 현실과 자본주의와 봉건제로 인하여 우리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 수 밖에 없다. 여성은 조금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겐 벅찬 것일 수 밖에 없는 3중의 역할(직장인, 주부, 어머니)을 거뜬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인 듯 묘사되기도 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연히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모성의 기능조차도 여성이 혼자 담당해야 하고, 모성을 이유로 사회적 자기 실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또한 2천만 남한 여성의 현실이기도 하다. 즉 여성의 열등함을 끊임없이 유폐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23중의 모순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하기에 여성문제란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말한다.

(2) 여성운동의 주체를 밝혀내고 있다.

여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다.

여성인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변혁의 주체이다.

그러하기에 여성은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주체, 여성운동의 주체로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모순과의 투쟁이 바로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바로 운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적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본질상 여성이 겪고 있는 모순을 여성 스스로가 인식하여 여성자신의 힘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운동이다. 여성은 오랜기간 봉건적 억압과 지배속에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 관습적인 길들임속에서 계급에서 소외되고 사회의 주인이기 보다는 부차적인 존재로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은 변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전체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지배사회속에서 올바른 평가받지 못했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 여성의 자주성의 옹호와 실현을 중심에 두고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명확히 하였다.

(3) 여성해방 인간 해방의 과정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인간 개별개별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지배역사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여성해방을 달성해나가는 과정 또한 각기 다양하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리고 유교적 문화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그 억압의 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여성해방이란 이러한 식민지와 자본주의와 이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여성의 올바른 자주성의 실현 남녀가 평등하고 사람의 자주성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해방 인간해방으로 가는 경로는 여성스스로 인식하고 그 해결의 주체가 되는 방향에서 여성 스스로의 요구 속에서 자주적인 여성조직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만들고 강력한 여성운동 역량을 축적하여 또한 사회변혁을 여성해방을 이루는 물질 기초를 만드는 (여성해방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것으로 함께 통일적으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과정과 경로이다.

2.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우선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을 하나하나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여대생의 존재와 특성을 일차적으로 남한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실정에 의해 규정된다.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매관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소외와 법적 무권리 상태에 있다. 또한 제국주의하에서의 산업의 수직적 재편과정을 통하여 미일 독점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경제구조속에서 세계 제일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략, 우민화 정책으로 제국주의 문화 침탈에 의하여 퇴폐향락의 사회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여성들은 성상품화,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여성의 처지는 여대생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첫째로 여대생은 식민지 근로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기 보다는 지배체제 논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89년 초반의 여대생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기층여성 민중들에 비해 특권의식을 가지며, 결혼을 통해 계층상승을 꿈꾸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다수 미혼 여성들이기에 '결혼제일주의'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대생은 여타 계급계층 여성들보다 결혼을 통한 계급 상승이 보다 쉬운 조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여 소비적인 인간형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1등 공신으로 여대생이 손꼽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같은 대학생과 결혼하더라도 계층상승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볼 때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의 욕구는 허황되기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었다. 민족의 삶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자기도 여대생이 자기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결혼으로 메꾸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직업으로 메꾸어 간다. 그래서 대학 1,2학년때는 미티어나 연애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공부나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의식을 주입받고 일정정도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내에서의 남성위주의 문화공토, 공간 등에 의해 부채질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여대생들이 받는 교육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봉건제 논리에 의해 여성들의 소극성과 순결이 강조되어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순결학과가 개설되어 여성의 순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받는다 하면 또한 대학을 자신의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고 대학을 다니고 교육 또한 사회진출의 중간고리로 여기며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교육 때문에 지금 시기의 여대생들은 자신의 전망을 밝히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셋째로 여대생은 남한 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착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 진출에서부터 여대생을 좌절시킨다. 대학을 상품화시키려는 사회와 자본의 논리와 예비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급증을 통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노동착취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대생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89년 50대 기업 대졸신입사원중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여성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낙타 비늘구멍 통과하기식의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여성차별과 수모, 승진 기회의 박탈 모성보호의 소홀등은 여성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강제로 쫓아내어 여성은 평생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문제를 알고 있는 여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 또한 갖고 있다. 여대생의 문제가 원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여대생은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가장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높은 정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해방을 통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부여해주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옹기 이해한다면 잠재된 변혁성을 무한히 발휘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체 노력(활동)'을 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여학생 운동을 달리 말한다면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 요소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쳐나가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이라 하겠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① 남한 사회에 현존해 있는 성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② 지배 계급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여성억압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여성의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 했다.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유지해왔다.

③ 민족 모순속의 여성이 처해 있는 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목표를 이루지 않고는 어떠한 여성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이루어 낼 수 없다. 지금 한반도 내의 여성문제는 성모순이나 계급 모순 등 한두가지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성격에서 비롯되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억압과 철폐의 요인에 대항해 나가는 운동이다.

④ 학원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의식과 구조의 철폐를 통한 학원내의 민주화 실현이다.

3.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 운동

운동의 목표는 모순된 사회의 변혁이다. 현재 사회의 모순은 소수의 지배자가 민중을 착취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현 운동의 목표는 미국에 의해 예측되어 있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과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들로부터 억눌린 자주성을 되찾는 사회변혁운동의 방도는 오로지 민중이 주인되어 벌여내는 투쟁, 압도적 다수의 조직된 힘으로 지배자들을 포위할 수 있는 대중투쟁이다.

사회변혁운동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직접 당하는 여러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는 운동이다. 이것이 확대되어 전체 사회의 변혁을 이룬다.

여성운동에서도 그러한다.

여성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한 통일 투쟁, 6월 항쟁의 기폭제였던 최루탄 추방투쟁 성폭력 추방투쟁 참정권 투쟁 등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투쟁

을 벌여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조직적 운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자리잡아 나가야 하는가?

첫째,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은 결코 남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의미로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운동내에 상대적 독자성(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로 인해 독자활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을 가지는 하나의 부분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청년학생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그 기치아래 여학생 또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여학생의 독자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학생의 내용을 견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학생운동이다.

이는 아직 우리 운동의 지향인 진정한 인간해방의 의미속에 남녀평등 실현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 여성 모두가 개별적 차원에서 각종여성 차별적 요소를 넘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 차별 사회 현실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전체 여성이 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받아안고 해결해야 한다. 전체 사회 변혁을 지향하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중첩된 문제를 조직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이는 계급모순 혹은 민족모순이 해결된다고 여성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여성문제 해결은 사회모순해결의 의지없이 완수 될 없는 것과도 같다.

4.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청년여학도의 임무와 역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여학생운동의 전개양상에 있어서 조직화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임을 전제로 한다. 상층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은 아무리 뛰어난 간부가 사업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대중으로부터 강제받을 수 없으며 대중과 괴리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조직을 건설해내고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투쟁속에서 조직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부는 대중투쟁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내고 여성운동의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성문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이 증대되고 사회의 변혁적 조건이 마련되면서 여성운동의 객관적 여건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성운동을 이악스럽게 풀어나갈 주체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학우중심의 확고한 대중관과 철저히 사회 변혁과 여성해방과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진 여학생운동 역량을 마련하여 여학생운동의 구심인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드는데 선봉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해방의 길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요원하고 막연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여학생운동의 실천을 통한 자신감을 얻으며 한발 한발 앞장서 가자.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99년 현재 47.4%로 남성 74.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라든지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여성 취업율이 17.7%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IMF이후 정리해고 0순위는 계속해서 여성의 자리로 되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자의 70%가 일용직,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을 피할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여대생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에 졸업했음에도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하기는커녕 고시공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다 시금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돌려야하는게 바로 지금 여대생들의 모습이다.

이에 여성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보여지는 여성역업의 기재들을 척결해나가야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근본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6.15남북공동선언의 지지관철에 조국통일의 근본적 원칙과 방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북의 여성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할 수 있는 조국통일의 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과 법,제도적인 부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민중들의 목소리가 어떠한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이후 자주통일의 세기인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인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여성부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남북의 공동성언 및 주요합의문과 글들>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화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가져 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 졌던 민족적연계를 회복하며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이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이후락 1972년 7월 4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데두리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협력, 교류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홀어 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내왕과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기를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리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 남과 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남 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한다.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남과 북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불력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 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를 존중하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 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복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

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 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과 북,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 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뒤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1993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반적으로 립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연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연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연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너지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는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제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에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너지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연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련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 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남북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것이다.

2)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 / 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졌다.

남북수뇌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한 민 국
국 방 위 원 장	대 통 령
김 정 일	김 대 중

▶ 조로공동선언 (2000년 7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인신 웨. 웨. 푸틴각하가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호상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념원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매개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어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다른 일방의 자주권, 독립, 영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확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남북 조선사람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을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수 없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천년기수뇌자회의와 총회가 성과적으로 그리고 결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원국들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것을 호소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인도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2가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여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하루빨리 체결되도록 하는것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현 국제적현실에 대한 분석결과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삼는것이 완전히 무근거하다는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블랙형의 폐쇄적인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는것이 지역적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수 있다고 간주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와 분립주의,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범죄활동이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은 민용항공과 해상항행의 안전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들과 마약, 무기, 문화적 및 역사적재부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범죄 및 테로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21세기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세기로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권국가들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고한 경제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협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선린, 안정과 평등한 국제적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변함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아세안지역연단이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연단의 사업에 응당한 기여를 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쌍무적인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연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 재정적 및 경제적조건을 조성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과 규범들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한다.

금속, 동력, 운수, 립업, 원유, 가스공업,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조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하여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공동으로 건설한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로 하였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두 나라의 립법기관들, 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련계를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 과학과 교육, 문화와 보건, 사회보장, 법률, 환경보호, 관광, 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푸썬각하는 평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로씨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2000년 7월 1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푸 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컴뮤니케 (2000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특사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엄 클린튼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차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옹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초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여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남북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튼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튼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웨. 웨.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7월 26일부터 로씨야에 체류하시였으며 8월 4일과 5일 공식방문하시였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로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

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민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전적분립주의의 전파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류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서명한 조로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역사적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로씨야측은 일련의 쌍무계획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리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리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실천에서 공인된 호상리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남북과 로씨야, 유럽을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 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성을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인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사이의 공식관계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사이의 회담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방문기간 로씨야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푸쩨닌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아련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웨. 웨. 뷘쨌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끝)

▶조일평양선언 (2002년 9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중이찌로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지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준수할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총리대신
김정일 고이즈미 중이찌로
2002년 9월 17일 평 양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2003년 1월 10일)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 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립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우리가 몇주일내로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미국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여 자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 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은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배격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부쉬행정부 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포고까지 하였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의혹>을 꼬집어 내어 중유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렸으며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과 진지한 협상노력에 <봉쇄>와 <군사적응징> 위협으로, <말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는 실제행동에 옮겨 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가능성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때문이었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해 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 당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립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걸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주체92(2003)년 1월 10일 평 양(끝)

<여성과 통일>

▶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 도쿄, 서울, 평양 토론회를 중심으로, 김윤옥(토론회 실행위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공동주최,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제2차 세미나 주제 1 / 1993

1. 들어가는 말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일반운동과 마찬가지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모순과 질곡들의 주요원인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강대국의 이념적 대결로 빚어진 한반도의 같은 민족끼리의 군사적 대결은 경제적으로는 국방비의 과잉지출로 여성복지의 전무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팽배한 군사주의 문화로 성폭력과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불평화가 여성들의 삶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는 분단구조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실사회주의의 해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급격한 질서개편 앞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열망이 되었다. 이러한 열망을 위해 활동하던 남한의 진보적 여성지도자들은 일본의 양심적 여성들을 매개로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성사시켰고 도쿄(1991.5.31-6.2), 서울(1992.11.25-30), 평양(1992.9.1-6)을 돌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여성들의 인식은 이 토론회에서 일차적으로는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토론회에서의 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여성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 결론으로 우리의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2 “통일과 여성”에 대한 남북의 주장들

2-1. 남측의 주장

제1차 도쿄 토론회에서는 분단구조의 극복을 위한 역할로 내면적 분단의식의 변화와 극복, 군축운동, 교류(이호재), 군사주의 문화에 대치되는 여성문화의 창출, 다양성 중의 조화와 협력의 공생사회 구축, 평화교육, 서로를 바로알기 운동(이우정) 등을 제시했으나, 제2차 서울 토론회에서는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이경숙 교수가 남한정부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통일의 3대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내걸며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하고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로 되는 바탕을 점차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이다”는 것이다. 그는 북측의 연방제안을 과도기의 방안일 뿐 궁극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연방제안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는 이념체제가 달라도 “같은 쪽으로 물고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차 평양에서 이호재 대표는 “민족대단결” 부분에서 통일의 3대 기본명제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전제하며 지금까지는 주로 외세를 향한 자주에 민족대단결의 초점을 두어왔고 그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간과된 부분, 즉 계급/계층/성으로 분열된 민족 내부의 단결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민족대단결이란 “소유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족내의 계급/계층/성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과 평화와 자주는 서로 연관되는 한 몸이며 민족대단결을 이룬 민족은 “새 민족”으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토론회를 이끌어 왔던 남측의 통일운동 인식은 다분히 남한 내의 사회적, 이념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한의 통일정책은 일반적으로 각각 처한 입장과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론’,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안’, 문익환의 ‘3단계 통일방안’, 김낙중의 ‘4단계 통일방안’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장 현재의 주어진 유리한 국내외의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화 압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흡수통합을 이루자는 주장과 현단계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흡수통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정도 북한의 경제력이 성장한 다음에 흡수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아직 정책적 기초라기 보다는 그 하위단위에 불과한 방안들에 치중된 남한의 통일정책의 공존 가운데서 여성운동 자체의 통일방안은 전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 봄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1차 세미나에서 정현백 교수가 지적했듯이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안에 반대만 하지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세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정현백 교수는 “여성운동의 통일정책은 민주화, 사회체제의 변혁이 동반되어 어느것이 선결조건이기 보다는 동시적인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방제안이 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고 제안한 바 있다.

2-2 북측의 주장

북측은 도쿄토론회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분명하고 일관된 연방제안을 주장했다. 서울토론회의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남북여성들이 각자 자기 정부의 대변인만 하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여성들 자신의 방안을 내놓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평양에서 다시금 북측은 여전히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도쿄토론회에서 정명순, 려연구 대표는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을 문제삼으며 전쟁위험을 억지할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제, 연방제 통일방안 이야말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순은 여성들이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1995년을 통일달성의 해로 정했는데도 아직 민족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개탄, 제도적 통일과 연방제의 두 방안이 있으나 통일을 평화적으로 부담없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인 연방제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통일은 흡수통합일뿐인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제도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토론회에서도 정명순 대표는 우리 민족은 “이질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46년간 다른 제도에 살아왔

나 민족적 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통일문제 해결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제도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연방제는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절대화하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통일에 유익하다면 누구의 제안이든 받아들이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50명씩의 대표가 같이 앉는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거기서 순수하고 소박한 협상, 누구를 고집시키거나 끌어당기는 식이 아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여성들이 함께 조국통일방도를 모색하고 확정할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도 했다. 그리고 남북여성들이 함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남북여성회의"도 제안했다.

평양토론회의 "민족대단결" 부분에서 강춘금 사회과학원장은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 심리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며 수난과 극절을 겪은 민족일 수록 민족의 단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적절히 호소"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분단된 우리민족이 대단결을 하느냐 여부에 민족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모시와 길주의 마포, 영변의 약사단과 전주와 창호지를 바꾸고 함경도 처녀와 서울 총각, 전라도 처녀와 평안도 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오고가면서 의중계 살아왔고 임진왜란 때는 부산의 동래산에서 봉화가 울려지면 연이어 무산과 웅기에서 타올라 온 겨레가 화적치는 싸움에 떨쳐 나서곤 했다"고 회상, 이러한 민족은 외세에게 국권이 강탈당한 친일세력이 생겨 민족대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대국 때문에 분단된 이후 47년간을 남남처럼 격폐되어 살아오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서로 오해, 불신, 적대시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수단"

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에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통일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세에 명줄을 건 일부 세력이 미국의 이간정책에 편승하여 민족 내부에 대결을 고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민족대단결이란 "한 겨레로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 화해하고 단합하여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사상과 이념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단합은 조국통일과 민족적 관련되는데 "자주적, 평화적으로 외세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 7천만 겨레가 힘을 합쳐야"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민족내부에서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자 곧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합의서는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서약한 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화해조항은 그 자체가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불가침 조항과 협력,교류조항도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남침과 북침에 대한 위구심을 없애고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가능성'이지 '현실'은 아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은 과제를 가지는데 7천만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민족대단결에 앞장서서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드럽고 다감하며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은 것으로 하여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소질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분단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슬픈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바라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상과 이념은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이익을 첫자리에 놓았던 전통들을 열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실현된 것도 여성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는 숭고한 역사이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단결할 수 있다는 확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호소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힘이 있으니 자주 만나자고 제언, "우리 여성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나는 것으로 된다"고 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형제도 남이 되지 않는가고 반문하며 운겨레의 마음 속에서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3. 통일에 대한 남북여성의 인식의 차이

3-1. 여성이 통일의 주체라는 인식의 근거문제

통일운동에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북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는 대체로 남측은 "생명을 잉태하고 가족생명도 보존하는 특성"(도쿄에서 이효재)이나 모성성(이우정)을 내세우고 있고 북측은 분단으로 제일 고통받고 불행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라고(정명순, 강춘금)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남측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서는 정현백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성역할 고착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남성을 지배, 착취의 정복의 심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성차별을 반대하는 남성이나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는 남성들과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만들거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3-2 여성현실에 대한 이해

남측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층적 억압과 차별화에 있는 여성들의 한(恨)을 설명하며 분단극복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부장문화나 군사주의 문화, 이원론적 가치관의 영향 하의 여성현실을 토론회 때마다 언급, 이에 따른 여성운동의 발전을 설명했다.

북측은 도쿄부터 평양까지 일관하여 여성들의 해방된 현실을 내세웠다. 도쿄에서 이연화 대표는 "남조선여성들의 자주, 민주, 여성을 위한 운동은 외세로부터 여성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허덕이는 현실을 변혁하고 여성의 참된 해방을 이루려는 투쟁"이라고 전제하면서 "공화국의 여성들은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등에서 해방되었고 여성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여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공화국 여성들은 정치적으로도 동등한 권리를 얻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채용이나 고용에서 평등하며 임신부나 모성차별은 금지되고 있고 사회진출에 대한 모든 조건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보육과 교육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고 전국에 6만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거미줄같이 퍼져있고 사회적 평가도 남녀평등하게 받고 있는데 농장관리위원장 900여명, 여성영

을 200명, 5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가 보장되고 100% 임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이러한 평등한 권리부여와 보장이 여성운동을 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정명순 대표는 같은 논조로 공화국의 여성운동은 특수한 여성문제가 해결된 바탕에서 일반적 운동 즉 민족통일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3-3. 통일방안의 문제

남측은 이경숙 교수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방안, 하나의 제도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방안을 선명하게 그려내지는 못했다.

북측은 3회에 걸쳐 연방제안을 설득력 있게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남측의 합리적이고도 비판적인 토론을 기다리는 태세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50년대까지의 자주적 총선안, 60년대의 과도기적 연방제안, 70년대의 고려연방예안, 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제안 등으로 변화해 왔다. 연방제안이란 남한의 “두개의 한국” 정책에 대응하여 “하나의 조선”을 내세우는 방안이며 군사문제 해결을 통일정책의 주요전제로 삼고 있다.

1990년 5월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조정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제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군사문제해결과 양쪽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여성의 방안제시는 북측정부의 방안 제그자체 뿐이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협상의 용이”라는 개방성은 있다고 하니 남측의 합의를 속히 도출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3-4. 민족이해의 문제

남측은 47년간의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로 내세우며 사회주의 교육과 자본주의 교육을 받아온 “이질화된 민족”이 서로 신뢰회복하고 닮은 꼴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원사회와 공존공동체라는 말은 하면서도 언어의 이질화나 이념의 차이가 있는 민족이해가 깔려있다. 이질화가 없어야 민족성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은 “이질화는 없다”고 부인한다(정명순). 다만 오해와 편견이 있을 뿐이고 47년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었으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성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을 우위에 두고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통일의 기본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중요시하며 민족을 사회적 생명체, 체제는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5. 평화이해의 문제

남측은 평화의 반대를 폭력개념으로 설명하는 편이다. 핵이나 군축문제도 언급하나 전쟁위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 폭력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북측은 평화의 문제를 “전쟁반대”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도쿄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미군기지의 철수 핵무기 철수로 비핵화하자는 것, 틱스피릿과 같은 외국군과의 위험적 군사연습 반대, 그리고 서울과 평양 두번에 걸쳐서 “군사경계선에서의 어느 병사의 사고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홍선옥, 조승조). 조승조는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초점을 전쟁반대, 대결반대, 무장충돌 반대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조선반도는 현재 대비된 군대수가 무장력에 있어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거대한 무력대치로 대두”되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방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병사의 실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첨예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이 중지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3-6. 구체적 실천의 문제

남측은 평화교육, 민주화, 군축운동, 국보법 폐지, 통일인사 석방운동, 교류, 상대방을 올바르게 알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북측은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평화구축, 군비의 단계적 축소, 한반도 비핵화, 군사훈련 중지운동, 교류와 연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의 과제와 전망

이상과 같이 3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과 인식의 차이를 간추려 보았다. 여기서 앞으로의 통일운동과 토론회를 위하여 우리 남측여성운동의 합의가 어느정도는 도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토론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보충, 수정되었으면 한다.

4-1. 합의도출의 과제

진보적 여성운동의 합의로서 통일방안이나 이에 따른 정책적 기초를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연방제 방안을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여성의 삶을 위한 사회건설의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장, 관철하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연적 당위성이나 분단분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의 합의된 통일방안에 따른 실천항목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4-2. 남측 국내토론회의 확산

합의된 여성들의 통일방안 초안이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등을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통일운동인식을 확산하며 통일에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참여민주주의 여성운동의 연대모델이 될 수 있다.

4-3. 구체적 실천

- 1) 앞으로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활용
 - 남북여성의 합의된 통일방안을 위한 도출
 - 서로를 서로의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 중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남북여성이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안의 발국과 연대 운동
 - 다양한 계층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동
- 2) 양측 정부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효있게 대응하며 운동으로 전개
- 3) 반전반핵,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 전개
- 4) 북한사회 바로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기타

▶ 여성과 통일 -2000년 전여대협 통일교양자료집 발체

1.분단으로 인한 여성현실

1999년은 남북 분단 52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여성의 전쟁경험은 아마도 ‘일본군중군위안부’의 경우인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지 지배때부터가 가장 분명하게 여성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독립지사의 가족들의 고통, 농토를 빼앗겨서 만주벌판으로 피난갔던 농민가정의 고통, 감옥에 갇힌 31운동의 여성들이나 가족들의 고통 등 우리는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당해왔다. 말도 이롭고 빼앗기고 식민지문화정책으로 교육도 낮은 수준에서 현 모양처럼 순종형 여성교육을 받아왔고 세뇌되었다.

여성은 경제적 빈곤의 최하층에 속해왔고 구조적 성차별은 여성에게 이중적인 명예를 걸머지게 했다. 농민 노동자여성의 노동조건은 식민지특성을 드러내고 있었고 전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법제도 등 억압적 구조들에도 일본적 관습제도까지 적용되었던 최악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제2차대전종결은 민족적으로도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지만 여성들에게도 해방을 가져오지 않았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이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강대국간의 군사적 편의주의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할된데서 시작되었고 분단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6.25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치명적인 물질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둔 적대적식은 정권들에 의해 사회속에 내재화 되어 규정력을 갖는 이데올로기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사회통합의 기초로 활용함으로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주의사회를 형성하는 토대를 닦았다. 군사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과 착취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은 일제시대의 경험과는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여성억압의 기제는 군사주의문화로서 사회에 전반적으로 잔존한다.

그 이후 국민들에게 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했던 7·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국 정치집단의 내부통치 강화용임이 증명되면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은 비공개 지하운동의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1980년 5월 민주항쟁이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밝혀지면서 5월 민주항쟁 이후 평화통일운동은 반미 자주화운동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띄게 된다. 80년대를 통한 민주화 투쟁은 마침내 집권세력으로부터 1988년 7·7선언을 이끌어 낸다.

7·7 선언은 반북 적대관계로 일관해오던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남북교류와 교역을 통한 민족공동체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도록 만든 의미를 지닌다.

이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군축문제, 미군철수운동, 반핵평화운동으로 영역도 확대되고 남북민간단체의 인적교류도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91년도 9월 남북은 UN에 동시 가입하고 92년도 1월 비핵화 공동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각종 형태의 남북 교역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통일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1992년 2월 남북정권 당국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계속되고 있고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1)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들

1) 이념의 희생자들

분단사회의 피해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가 된 남편과 자녀들 및 그 자신인 여성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해방 직후부터 과열된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 그와 연결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좌익으로 낙인찍힌 사람들, 6·25 동란을 통해 보복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희생당하며 사상적 입장을 강요당해 자진 월북한 남편이나 아들을 둔 여성들의 고통은, 단순히

월남이나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산가족의 경우는 그들의 이산 원인이 사상적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의 현 체제 속에서 남편과 자녀 및 본인들이 좌익사상가로 낙인찍혔다거나 그 입장에서 활동한 좌익사범으로 정치당한 경우는 그들의 고통을 공개하여 호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피해인 것이다.

2) 전쟁의 피해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동족상잔의 전쟁은 막대한 병력 손실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깊은 상처와 손실을 남겼다. 남한의 경우만도 사상 24만 5천, 실종 30만, 부상 23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살당한 자의 수를 13만으로, 그리고 납치당한 수를 8만 5천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 30만에 가까운 전쟁미망인, 33만의 전쟁부상자, 10만의 고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용군에 강제징집된 남한 젊은이들의 수만도 약 20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당하며 남북으로 이동해감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쟁경험과 전쟁피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남김으로써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3)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및 손자 등의 직계 가족관계와 숙질간 및 4촌 이내의 방계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한 민족주권의 강탈, 분단 및 전쟁 등의 민족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고 분단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가족이 자의에 의하여 헤어지거나 흔히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분열되는 소위 ‘결손가족’의 경우가 있으나, ‘이산가족’의 경우는 어떤 개별 가족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족국가적 입장에서 당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결과된 것이다. 이 시대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 강점시대로부터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2차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의 분열이 고정화됨으로써 가족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분단이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한에서의 이산가족을 1,000만 인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객관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가족이 모두 남한한 경우보다는 남자들만 왔거나 가족의 일부만이 월남해 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의 일부를 남기고 온 이산가족이다. 따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들 이산가족들의 혈육을 모두 합치게 되면 그 수는 1,000만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이산가족’이라 부르는 수치의 근거를 해방 후 6·25 전까지 월남한 피난민 350만 명, 6·25 후 1·4후퇴 때 피난해 온 100만 명, 6·25 당시 피납된 인사 8만 4천명, 6·25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 30만3천명, 반공 포로 2만7천명, 사할린 동포 4만 명, 재일 북송동포 10만 명, 1953~83년 사이 어선납치 등으로 인한 납치인사 3,600여 명 중 아직도 억류된 440여 명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합치면 근 500만 명이고 따라서 헤어진 사람과 찾는 사람들 동시에 생각할 때 이산의 아픔을 당하는 가족은 1,000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월남한 사람들과 가족 및 근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남한 인구 4,450만명(96년)과 북한인구 2,300만명(94년)을 합쳐 6,750만명으로 볼 때,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분단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과 분단구조

1)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분단 이데올로기의 영향

현재 총인구 44,851천명 중 여성 인구는 22,27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며, 남성 100명당 여성은 98.7명이다. 평균수명은 여성은 76.8세 남성은 72.8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성사망율(출생 10만 명당 임신부 사망자수)은 30명 수준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 보면 출산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에서의 남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출생성비는 1994년 현재 115.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의 강한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8.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여성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업체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2.7%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9%에 불과하다.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은 9명으로 전체 의석 중 3%에 불과하며 97년 1월 UN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세계 139위이다. 지방의회 의원 1,56%, 광역의회 의원 5,76%, 여성장관은 23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정부 내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청은 이러한 한국 여성의 상황을 근거로 세계 116개국과 비교한 한국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 78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한국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분단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불평등은 남녀를 분할지배하여 최고의 이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단 현실은 여성들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념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해 왔고, 우리 사회 전체를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로 구조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예컨대 70년대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운동은 불온한 운동으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노동자의 권익운동은 좌익적 운동으로 규정 지워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문화는 군사문화와 상통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분단현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경제적 지위형성에 원인이 되어온 것이다.

2) 낮은 복지 수준과 높은 국방비

남한의 국방예산은 14조3천5백억 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6.2%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교역 11위를 자랑하는 남한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이다. 남한의 경우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희생이 막심하다. 예를들면 외국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방글라데시가 12.3%, 독일이 47%, 스위스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단적으로 복지수준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은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데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전력증강비, 군운 영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의 78%(2조4,560억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전력증강을 이유로 대미 무기 구입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탈냉전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3) 군대와 성상품화, 성폭력

한국사회 구속구속까지 밀집해 있는 향락업소는 대략 4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만 개의 향락퇴폐업소에 종사하는 일명 '호스티스' 혹은 겸업 매춘여성은 약 120~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젊은 여성인구 620만 명(15~29세)의 약 1/5에 해당된다.

한국사회 율락산업의 확산 이유는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율락부인이 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군대, 그리고 외국군의 주둔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율락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군대 밀집 지역하고 겹쳐 있다. 군대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군대 옆에 으레 매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단구조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경제적 이유이다. 70~80년대 독재 정권이 3S 정책이라는 우민화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폄파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는 스포츠, 그리고 Sex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었다. 언론을 통제합하면서 신문사에 주간지를 하나씩 발간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성상품화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투자 또한 성상품화 중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투자보다는 이윤이 많이 나는 3차 산업 부문에 특히 자본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정치자금과 우중화의 목적 때문에 퇴폐향락업 증가를 용인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다음 구조적인 원인과 더불어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행의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다움의 과시를 정복한 여성의 수로 가능하는 의식과 관행이 문제이다. 한국은 이상적인 남성상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그런 것을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의식, 이것이 결국은 성을 폭력으로 지배하게 되는 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맘대로 부리는 상품화된 성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2위이다. 한국사회 성폭력의 특성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거의 남성이다. 피해자의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0%를 차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70%를 차지한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은 10대에서 70대까지이며 학력, 계층과 무관하다. 또 가해자 중 정신병자나 범법자는 매우 적은 숫자이며 정상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치는 일반 여성들의 스트레스 1위 요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을 발생,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과 전반적 폭력문화의 지배에 있다. 한국 폭력문화를 자본주의 문화와 군사문화의 결합으로 볼 때,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희생당하는 것은 분단 구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여성에게 6.15공동선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이행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2001년 6.15 공동선언과 여성 토론회 전여대협 발제문

1항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주한미군 범죄를 통해서 민족이 자주권을 잃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전 민족이 대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고 민족대단결의 선봉에 서야 한다. 전민족 대단결을 위해서는 남북해의 여성민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연합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남 내 여성의 연대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남 내에서 여성민중들과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연대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통일의 상을 밝힌 항으로써 장차 우리가 살아갈 통일조국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 통일 세상은 남녀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이 된 세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민중들은 장차 통일조국의 상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데 여성의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4항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에 대한 것으로써 직접 만남으로써 민족대단결 의식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남북의 여성들은 여성 정책과 여성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통일 조국을 준비하고 또 앞당기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

6월13-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온 국민을 흥분으로 몰아넣은 만큼이나 역사적 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지나는 의미는 첫째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구도가 '북-미 축'에서 '남-북 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는 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북한 역시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였다. 북의 대미외교와 관련된 사안을 상당 부분 한국정부에 일임하려는 미국의 태도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김정일 체제의 개방의욕 등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과거의 남북관계 변화는 대부분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나 정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번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셋째로, 정상회담은 그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가 이제 상호협력적 공생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창출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점은 후속회담이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전쟁 방지와 평화구축, 군비축소,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의 방지책과 같은 군사적 문제가 경제교류에 못지 않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초두부터 군축과 같은 정치적 사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후속회담을 결렬시키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되, 당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간의 외교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 문제의 분리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산가족문제와 '북한동포 돕기'는 조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간의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상황에서는 남측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고, 반드시 지원한 만큼을 그대로, 당장에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상호주의'가 주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일이슈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남한 사회 내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남남대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군사주의 문화 제거가 없는 진정한 내적 통합을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에서도 드러나듯이, 평화주의 실현이 없는 통일은 항상 내부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내적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2 왜 여성에게 통일이 중요한가?

앞에서 제기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어보면서, 여러 복잡한 상념들이 떠오른다. 이 정상회담은 과연 여성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상기한 일련의 논의들이 왜 여성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1999년 남한의 국방비는 1년 예산의 22%인데 비해, 복지 예산은 1996년의 경우 4.03%에 불과하였다.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여 국방비를 줄인다면, 이 엄청난 돈은 여성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2조원이 넘는 돈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사이에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미군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재판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살해나 폭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춘천, 동두천,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에서 독성 폐기를 불법 매립, 각종 오·폐수의 무단방출 등이 자행되고 있고, 매항리 주민처럼 미군사격장의 소음과 오폐수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분단된 남한 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 등의 각 방면에서 군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분단은 전투에서 폭력적이도록 훈련된 남성성을 옹호하고 폭력성을 일상적인 남성성으로 구성해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 "남자는 그저 군대 갔다와야지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군대는 남성을 어른으로 키우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남성들은 군대에서 남성 우월의식, 힘의 논리와 권위주의에 적응과 복종을 배우고 가족부양자로서 책임을 지는 강한 남자가 되는 것을 집단적으로 재교육받게 된다. 또한 고된 훈련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을 도구화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매매춘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성에 대한 상품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부장적 문화를 익히게 된다. 일상생활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일상화, 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군 가산점과 여성이 겪는 피해 그리고 일상화된 매매춘... 이런 것들 모두가 분단 및 그가 낳은 군사주의 문화와 빼놓을 수 없는 연관을 지니는 것이며, 이는 여성들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여성이 처한 열악한 현실들이 통일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다.

또한 지금도 남한에는 분단과 가족의 이별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767만 명으로, 이중 이산 1세대가 123만 명, 고령 이산가족 수를 약 6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단은 남북한 통틀어 1천여 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은 셈이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휴전협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는 한반도가 준 전시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바로 이산가족의 엄청난 숫자 속에 가족과 생이별한 어머니와 누이의 한이 서려 있지 않은가?

우리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 통일이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여성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리고 경각심

을 일깨워주었다.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들은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통일 후 과거 동독여성의 50%가 실업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탁아소비용이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여성들이 월급을 상회하는 탁아비 때문에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근간에 독일의 자살자중 80%가 동독출신이며, 이들 중 9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일 통일의 경우, 가장 상처를 입은 집단은 동독출신의 여성이었다. 통일이후 옛 동독인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였는데, 이러한 내부 식민지의 중층구조에서 가장 하단을 차지한 것은 여성이었다. 많은 동독여성들이 해고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또 많은 여성들은 별안간 자본주의 경영으로 바뀌면서 급등한 탁아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장을 떠났다. 이런 끔찍한 현실은 우리 여성운동에게도 통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통일이 여성의 삶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군축이 진행되면, 축소된 국방비는 사회복지비로 전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당장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여성들은 북한의 남성노동력과 경쟁을 해야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은 일자리에선 축출될 염려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여성의 임박한 실천과제

통일 후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통일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함께 침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이 지금부터라도 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성평등적인 통일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제반 분야에 여성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우선 여성들은 정부의 통일관련 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정상회담 이후의 실무회담,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 내에 여성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통일이나 남북교류와 연계된 여성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민간교류는 자칫 남성교류나 돈가진 사람들의 교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과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들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이나 북한 물자지원을 할 경우 보조금(matching fund)을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정상회담이후 진행될 후속과정에서 여성의제가 제기되고, 여성에 대한 배려와 우대조치를 남북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남북교류는, 특히 경제지원을 통해서 가속화될 전망인바, 우리 여성들은 국제공용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증이나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여성경제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한다.

2)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 실종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은 여성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성통일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성운동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북한여성 돕기'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당장 굶주리고 있는 우리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이자, 남한 여성들 사이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수 있는 중요지점이다.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그간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투쟁을 알차게 전개시켜왔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만큼 모금활동에는 많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자연히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북한동포돕기가 추진되었고, 종교단체에서는 여성들이 모금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것이 여성의 이름으로 지정기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여성의 노력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여성단체의 이름으로 지정기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북한 내 여성단체들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단체연합은 1991년이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에 걸친 남/북/일본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역사적 성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열렸던 3차 토론회는 분단이후 판문점 경계선을 넘은 최초의 민간교류였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북한여성 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매애를 다시 과시하고, 이런 성과를 토대로 1994년 이후 끊어진 제5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속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화>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시급한 과제는 통일교육의 확산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과거의 반공교육과 대비하여 큰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 어느 평범한 어머니가 묻는 질문, "나는 김정일을 괴수라고 우리 아이에게 설명하였는데, 다시 물으면 이제 무어라고 대답하지요?"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일이 통일교육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행·불행이 어떻게 분단극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통일과정과 통일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운동은 남성들이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통일의 과제를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실현과 관련시켜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통일운동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통일 후 미래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지닌 사회가 되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토론과제>

- 1) 여성에게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 2) 6.15 공동선언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 3) 여성이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한국 반미운동사 조명해 본다.>

▶1946년 첫 반미항전

한국인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날부터 벌어졌다.

당시의 세대였던 한양대 김승복교수는 말했다.

「8·15광복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일본을 대신하여 식민지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 일어서서 싸우자고 외치면서 반미항전에 분기해 나선 겁니다.」

1946년 6월 19일 미군정은 교육행정기관들을 완전히 거머쥐고 교육을 더욱 식민지예속화할 목적 밑에 「국립서울대학교안」(국대안)을 조작했다.

「국대안」은 발표되자마자 청년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청년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국대안」을 반대한다!」, 「학원을 민주화하라!」, 「미국인총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 동맹휴학 등 각종 투쟁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국대안」 내용을 일부 뜯어고치고 대학총장과 이사직에 들어앉았던 미국인을 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 대표적 투쟁이 1946년 8월 광주화순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해 8월15일 새벽 3시 1천여명의 화순탄광노동자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8·15해방 1돌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광주로 떠났다.

미군정은 노동자대열을 해산시키기 위해 군용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운 미군기동부대까지 동원했다.

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자 폭격기 6대의 엄호밑에 미군과 경찰대는 노동자들을 총칼로 탄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조직되고 단결된 역량으로 미국놈들의 야수적 탄압과 폭행을 물리치고 광주에서 열린 8·15해방한들기념행사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들과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은 비열하게도 시위를 끝마치고 귀환하는 노동자들을 매복습격하여 30여명을 학살하고 5백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했다.

이것은 더 큰 반미투쟁의 폭발을 가져오게 했다.

1946년 8월 하의도 농민들은 미군정에 맞서 빼앗긴 토지를 반환할 것과 소작료납부, 「하곡수집」을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돌맹이와 곡괭이를 들고 집단적으로 무장경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이렇듯 각 계층 애국민중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시기부터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긴 민중은 싸워야 한다는 것, 싸우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인 것이다.

▶제주도 4.3 봉기

「경애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 4월 3일 오늘 여러분의 아들딸 형제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함께 조국과 민중이 이끄는 길로 결연히 떨쳐 일어서 행진합시다.」

1948년 4월 3일 애국적인 제주도민들을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부른 호소문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이남에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이 땅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목적밑에 오래 전부터 키워낸 이승만 일당으로 단독정부를 조작하려고 했다.

4월 3일 새벽 2시 5·10단선을 반대하여 제주도민들이 분기했다.

봉기자들은 「이승만 단독선거 결사반대」, 「주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고 외치며 한라산을 무대로 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무기로 토벌에 나선 경찰과 맞서 싸웠고 밤마다 경찰서와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선거등록서류와 투표함, 투표용지를 불태워 버렸다.

무장봉기에는 제주도주둔 국방경비대의 애국적 장병들까지 합세하여 전체 도민의 86%가 참여했다.

결국 제주도에 5·10단선은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미군고문을 제주도에 파견하고 수많은 군대와 경찰, 군함, 비행기까지 동원해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살육을 감행했다.

이 살육만행으로 당시 도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7만여명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제주도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전이었다.

저 서귀포 바닷가에서, 한리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듯 싶은 메아리 「미국의 지배와 식민지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승리할 때까지 싸우라!」 오늘의 우리 민중을 각성시키며 투쟁으로 부르는 그날의 절규이다.

▶ 반미구국투쟁 10월민중항쟁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반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미군정을 타도하라!」,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1946년 10월민중항쟁의 그날에 우리 민중이 외쳤던 구호들이다.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시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영웅적인 10월민중항쟁은 대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 대한 무장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발포를 계기로 발단되었다.

10월1일 대구시민 1만여명이 시청으로 모여들어 「쌀을 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무장경찰은 시위군중을 향해 마구 발포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월2일 분노한 대구시민들은 총탄에 맞아 쓰러진 희생자들의 시체를 메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대구시민들의 격렬한 시위투쟁에 질겁한 미군정청과 친미주구배들은 탱크까지 내몰아 무차별 총포사격으로 수많은 시위군중들을 또다시 사살했다.

시위군중의 분노는 극도에 달했다.

그들은 대구경찰서와 파출소들을 기습, 점거하고 폭동으로 넘어갔다.

급해맞은 미군정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탄탄압소동을 벌였으나 항쟁의 불길은 삼시에 경향 각지로 확산되었다.

영남과 호남, 중부지방과 제주도 등 전역에 확대된 10월민중항쟁은 11월에도 힘차게 벌어졌다.

항쟁자들은 경찰서를 습격, 파괴하고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구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고 친미주구배들을 처단했다.

11월1일 나주에서는 1만여명의 항쟁자들이 10여개의 경찰파출소들을 습격했고 11월7일에는 보성일대의 항쟁군중들이 악질관리를 처단한 것을 비롯해 각지에서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10월민중항쟁은 대구와 서울, 부산과 목포를 비롯한 73개 시, 군들에서 벌어졌고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시민 등 무려 2백30만명에 달하는 각 계층 민중이 참여했다.

참으로 10월민중항쟁은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쇼폭압을 반대한 반미구국항전이었으며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기개를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

▶ 2.7 구국투쟁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결정하는데 이어 1948년 1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이 땅에 끌어들이고 그 감시하에 단독선거를 강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꾀했다.

미국의 이러한 분열주의적 책동에 맞서 각 계층 애국민중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국과 망국단선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섰다.

1948년 1월 8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자 이날 서울의 여러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1월 19일에는 경성전기회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는 애국민중의 투쟁은 마침내 경향 각지로 확대됐다.

2월 7일 서울, 인천, 대전, 목포,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철도노동자들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물러가라!」,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이남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밑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투쟁은 삼시에 40여개의 도시를 포함한 경향 각지를 휩쓸었고 철도, 체신을 비롯한 각부문에 걸쳐 수백개의 공장, 업체 노동자들의 참가하에 대규모적인 동맹파업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날 전라북도 완주군 농민들도 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의 탄압만행에 격분하여 경찰지서를 들이쳤다. 합천, 김제를 비롯한 각지의 농민들은 시위와 헛불투쟁 등을 벌였다.

2월 13일 청년학생들은 서울 탑골공원 앞과 종로 네거리, 남대문 거리들에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투쟁참가자들은 33개소의 경찰기관을 습격하고 47명의 악질경찰들을 살상했으며 68개소의 전선을 끊어버리고 39대의 기관차와 5개소의 철길과 도로를 파괴해 버렸다.

이 투쟁으로 이남 전역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었고 대부분의 공장, 기업체들에서 생산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27구국투쟁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가혹한 폭압 속에서도 3개월 가까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무려 2백여만에 달하는 각 계층 애국민중이 참여했다.
참으로 27국투쟁은 민족의 분열을 막고 통일독립된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중의 굳센 의지를 내외에 널리 과시한 애국적 반미구국투쟁이었다.

<자료를 통해 본 한국침략사>

▶갑신정변과 미국

1884년 12월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봉괴에 직면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조아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세력인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에 의해 지도된 개화파운동은 당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있던 미국의 중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개화파들이 선진자본주의열강을 동경하면서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개화파들을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당시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일본에 가서 운동자금획득에 분망하고 있던 김옥균을 포용하려고 획책했다. 일본주재 미국공사가 김옥균을 만나 3백만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 나라의 전체 광물자원을 장악하려고 꾀한 사실이라는 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모르스의 「미국무역회사」가 김옥균과의 3차에 걸치는 차관교섭을 통해 울릉도에서 50만달러에 해당하는 목재를 벌목하려고 책동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결탁해 개화파정권의 수립을 통해 저들의 침략을 확대강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기 시작했다.

1884년에 들어서면서 청, 불전쟁이 터지고 내외의 사정이 청국과 수구파에 불리하게 조성된 것을 본 미국은 일본과 공모해 개화파들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키도록 추동했다.

동년 10월이후 미국공사관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화파들에게 정변준비를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보증했다.

역사기록에는 당시 개화파들은 「정변에 앞서 모든 거사계획을 미국공사 푸트와 상담했다」고 씌어져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수구파와 청군의 반격으로 「3일천하」로 실패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국의 파렴치한 배신행위 때문이었다.

청일양군의 교전에서 개화파에게 정세가 불리하게 되자 미국공사는 약속을 배반하고 애당초 아무런 원조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사는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화파와 미국간에 아무런 연계도 가진 일이 없는 듯이 꾸며냈다.

그후 일본침략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구실을 붙여 「갑신정변」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지불을 우리 나라에 요구하는 「한성조약」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 조약설계지중의 한사람이 바로 일본정부고문으로서 일본대표의 수원으로 온 미국인 스티븐스였고 「중개조정」이라는 명색하에 우리 정부에 조약의 접수를 강요한 자가 바로 미국공사 푸트였다.

이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해온 흉악한 침략자이며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근대적 발전을 방해한 간악한 원수이다.

▶신미양요

역사에 「신미양요」라고 기록된 1871년 미국의 무력침공은 우리 나라에 예속적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목적밑에 감행되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의 조약체결에 대한 전권을 북경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주었다.

로우의 미국아시아함대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코로라도」호를 이끌고 우리 나라에 기어들었다.

미국함대는 5척의 군함과 포 80여문을 가진 1천2백30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되었다.

5월 30일 강화도 남방의 물치도에 정박한 미국함대는 경기도 연안 일대의 해역에 대한 측량을 비법적으로 진행했다.

6월 1일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위한 군사적 도발사건을 조작했다.

이날 침략군은 「모노카시」호, 「팔로스」호와 4척의 소정으로 소위 「측량함대」를 조직하고 강화해협과 한강을 「측량」하려고 했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목적밑에 진행된 고의적인 도발이었다.

물치도 근거지를 출발한 「측량」함대는 강화해협을 지나 북상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요새지인 손돌목을 향해 전진했다.

손돌목은 내외 공사선을 막론하고 통행증이 없는 선박은 일체 통과를 불허하는 지점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를 만재한 6척의 미국함선의 손돌목침입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발포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함대는 우리 포대를 향해 대응 포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타격을 받은 미국함선들은 우리 포대를 진입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손돌목전투 이후 정부에서는 미국함대의 대규모적 무력침공을 예견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본격적인 무력침공준비를 완료한 미국함대는 6월 10일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이날 침략군 7백50명은 강화도 초지진 남방에 상륙해 그 일대를 점령했으나 어둠이 깃들자 일시 후퇴했던 우리 군의 아습으로 쓰디쓴 참패를 당했다.

초지진 부근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군은 11일에는 광성진을 점령하려고 했다.

미군은 광성진을 수륙양면으로 포위하고 기술적, 양적 우세를 이용해 공격을 감행했다.

광성진수비대는 무장에 있어서 뿐 아니라 숫적으로도 우세한 미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미군은 광성진수비대의 영웅적 항거에 부딪쳐 황급히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강화도전투는 미군의 결정적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미군은 광성진전투에서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를 크게 파괴당했고 수십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는 등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강화도패전 이후에도 침략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새로운 희유와 위협공갈로 이루어보려고 우리 정부에 수처에 걸쳐 서신을 보냈다.

놈들은 「귀정부는 속히 현명한 방책을 세움으로써 금후의 분쟁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뻔뻔스러운 경고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우리 민중은 이것을 단호히 일축해 버렸다.

결국 미국함대는 7월 3일 물처도 근거지를 떠나 도주했다.

참으로 1871년 「신미양요」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성을 드러내보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 「한일합병」과 미국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중에게 많은 원한을 남겼으며 죄악의 산을 높이도 쌓았다.

그 많은 죄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나라를 강제합병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책동을 적극 지지하고 비호해준 것이다.

미국은 자기들의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하는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 일본을 우리 나라 강제합병으로 적극 부추겨주는 범죄적 책동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신문 「아트루크」는 우리 민중이 일본의 통치밑에 들어 가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기뻐하면서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라」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한국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의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바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독하였다.

이 시기 한국봉건정부의 「외부고문」으로 있었던 스티븐스도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에 유익한 것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심지어 미국은 1907년 9월 미국군장관 타프트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 수상 사이온지와 우리 나라의 중국적 처리에 대해 자기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며 미국은 중전처럼 「일본의 벗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며 「선행자들(가츠라와 타프트)에 의해 표명된 의견을 확고하게 시인」한다는데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온지-타프트 비밀합의로 지난날 「가츠라-타프트협정」으로 강도적인 「을사보호조약」의 조약을 담보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본의 우리 나라 강제합병을 담보해 주었다.

이러한 비밀합의에 기초해 미국은 「한일합병조약」 초안에 대해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기도 전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합병에 대하여서는 각국이 모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담보를 받은 일본은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했으며 우리 민중의 반항이 두려워 「합병조약」 체결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8월 29일에야 공포했다.

그후 일본의 「강제합병」소식에 접하자 미국은 「한국은 금후 일본통치하에서 급속히 진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사람의 행복인 동시에 또한 열강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드는 것을 극력 찬양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노예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악랄하게 책동하여 온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과 세계>

사람중심의 철학 사람과 세계 김경식 지음

목 차

머리말

1. 철학이란 무엇인가

1)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이다.

2) 철학의 근본문제

2. 세계란 무엇인가?

1) 세계의 근원은 물질이다.

- 2) 세상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 3) 세계의 사물현상은 상호연관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3. 사람을 살펴본다.
 - 1) 사람은 이렇게 생겨났다
 - 2)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주성을 갖는다
 사람은 창조성을 갖는다
 사람은 의식성을 갖는다
 - 3)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4.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 1)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 2)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5. 참된 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
 - 1)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세계는 사람에게 의해 지배된다
 세계는 사람에게 의해 개조된다
 - 2)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한생을 존엄있고 빛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생을 존엄있고 값있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누릴 만한 풍부한 정신적 자양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하고 참 뜻을 지켜 어려움을 헤치면서 자기를 이끌만한 정직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양분과 마음가짐 또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꾸준한 수련과 교양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긴요한 것의 하나가 철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들이 다 사람에게 바람직한 정신적 자양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정신적 양식을 얻고자 하면 부지런한 농민들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좋은 땅에 우수품종의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철학을 선택하여 그것을 깊이 익혀 자기의 정신적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민중을 위한 참된 철학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철학은 있어도 힘과 지혜를 주고 마음의 감옥을 열어주는 참된 민중의 철학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탁류처럼 범람하는 철학들은 모두 우리의 민족정신을 무너뜨리는 남의 나라 철학인 수입철학뿐이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기동으로 삼을 만한 정신적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필자도 오랫동안 참된 삶의 방식을 얻고자 수많은 서점과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철학을 접해 보았으나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덧없이 시간만 소비했습니다.

인류역사는 그 발생 이래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는 당해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과 이념이 있었고 그 사상이념의 작용아래 역사가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시대의 특징은 자주성에 있습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근로민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현대역사, 현시대의 기본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추세와 선량한 인류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은 인간해방, 인간긍정의 참다운 이념의 출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사람과 세계의 의미를 뚜렷이 밝혀 주고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이바지하게 하도록 참된 실천기준을 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입니다.

이 책에 담긴 철학은 우리 민중에게 참된 삶의 지혜와 정신적 자양분을 안겨 주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자주의 길을 밝혀 주는 이념의 밝은 등불이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철학은 참과 거짓, 정과 부정을 헤아려보고 옳은 것과 새것을 익혀서 행위의 참된 지침을 구하게 하는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민중의 철학을 배워 우리 민중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를 건지고자 이에 대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의 원리와 그에 바탕한 세계관을 기본 주제로 삼아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필자 자신이 아직 참된 철학의 깊은 뜻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고 있어 미숙한 점이 많으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1989년 8월 필자

1.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지성적인 판단력과 지혜, 가치있는 이념과 사상의 소유는 오직 참된 철학적 사고에서 가능한 것이고 철학의 길잡이 없이는 자기와 세계 그리고 자기 운명에 대해 아는 일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각을 잡기에 앞서 참된 철학을 찾게 됩니다.

하다면 그 철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철학을 논할 때마다 몹사람들이 제일먼저 내놓은 공통의 질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합리적인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주려고 자기의 학식과 사색을 아낌없이 동원해 온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학자는 철학이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학문이라 하여 《애지학》이라 이름하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과 인생문제를 논하는 《인간학》이 바로 철학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철학이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을 뜻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관광모험》이나 《바보의 화랑》이 철학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철학에 대한 의미를 달리 규정한 실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철학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학자마다 견해와 주장이 달라 다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단순히 《애지학》이나 《인간학》은 아니고 또 《관광모험》이나 《바보의 화랑》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철학의 참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제목을 설정하고 간명하게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의 근본문제》입니다.

1)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과 재난을 세상형편과 곧잘 결부시킵니다. 살림이 풍족하고 심신이 편안하면 우리 세상이 제일이라고 하고 불행과 화가 잦아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세상이 왜 이다지도 모진 가고 불행합니다. 사람의 이런 상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삶이란 주어진 환경 요건에 주위세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현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호강하면서 오래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생동안 힘겹게 일하면서도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일찍이 죽습니다. 세상에는 평등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한국과 같이 불평등한 사회가 있고 자연은 그것대로 모진 태풍을 몰아오기도 하고 온화한 기후로 풍성한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불행의 원인을 밝히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걸어온 유구한 역사는 세계를 탐구하고 개조하기 위한 끈기있는 투쟁의 노정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틔어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이리저리러한 견해와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관이란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는 까닭에 자연과 사회의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개별적 견해와 자세가 곧 세계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관이 되려면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와 자세가 세워져야 합니다.

* 견해 — 사물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뜻합니다.

** 관점 —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하게 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게 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 혹은 그에 대한 입장을 뜻합니다.

*** 입장 — 사상, 견해, 행동 등이 의거하고 있는 바탕 또는 행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해 전 충청남도 은산 지방에서 있었던 사실을 하나 들어보기를 합시다. 이상기후현상으로 이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농사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데다가 마을에 전염병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노인장들은 이 고장에서 제일 높은 산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상서롭지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했고 또 다른 젊은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공연한 짓이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강물을 퍼올려 논밭에 물을 대는 한편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방역에 손을 써서 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가물과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노인들의 생각은 세상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천신》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재해를 방지하려고 한 젊은이들의 주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신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에 놓여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관점, 입장이 세계관으로 되겠습니다.

세계관에는 사람들의 일정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담겨지게 되고 사람들의 그 요구와 이해관계는 그들의 사회계급적 처지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처지가 다르게 되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 역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요구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고 대합니다.

예컨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金門橋)라는 다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이 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금문교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라고 자랑하고 있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이 다리를 서글픔을 자아내는 《죽음의 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난으로 살길이 막힌 수백 명의 빈민들이 이 다리에서 투신자살하여 그런 대명사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년 시청에서는 몰상식한 가난뱅이들이 유명한 다리에 허물을 남긴다면 서 곳곳에 《뛰어내리지 말라》는 쫓말까지 세워 놓았으니 근로자들의 눈에 그 다리가 어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그 비극적인 참상에 하등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보는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노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되고 자본가계급의 이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보는 견해와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자본가계급의 세계관으로 됩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사람들의 처지와 요구,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세계관을 논하면서 한두 가지 명심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착취계급이 아니라고 하여 저절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 그 하나입니다. 피착취계급이라 하여도 그릇된 사상을 따르면 착취계급의 속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쉽게도 애꾸눈이 되어 현실의 한쪽만을 보고 다른 쪽을 못 보거나 옳고 그른 것을 전혀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거짓 선전에 말려들어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게 제 정신을 잃게 되면 자기 운명을 옳바로 운전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가지고 근로대중을 위해 한생을 값있게 바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생존환경인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사색과 탐구의 힘을 기울여 오는 과정에서 세계관을 주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를테면 철학은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세계관을 준다는 점에서 개별과학과 구별됩니다. 물론 수학, 물리학, 화학, 문학을 비롯한 사람의 인식활동에 의해 생겨난 모든 학문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의 운명문제의 해결에 관계하게 됩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연과학은 세상만물을 사람의 생존에 유익하게 인식, 개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정치생활과 인격도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과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준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다.

철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사람의 운명문제를 해명하는 데 주력하지만 개별과학은 세계의 한 부분이나 자연의 개별적 대상에 대한 이치해명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과학은 세계의 개별적 분야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세계의 전체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주지 못하며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예컨대 물리학은 물질운동의 양상과 그것들의 상호전환에 대한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나 거기서 직접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고 또 역사학은 여러 가지 옛 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익혀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사람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오직 철학만이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밝혀 줍니다.

참된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 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인류철학사에서는 여러 갈래의 철학유파들이 있었지만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은 그 어느 때에도 없었습니다. 철학사상 처음으로 보게 된 이런 세계관은 오직 참된 철학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철학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에 의해 스스로 해명됩니다.

참된 철학은 사람 위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문제는 사람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문제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옳바로 개척해 주어진 한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과정을 통해 개척됩니다.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데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세계를 바로 보고 옳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보고 대하는 견해와 관점, 입장은 무엇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과학성과 허위성, 혁명성과 보수성이 갈라지게 됩니다.

참된 철학은 《신》이나 물질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는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인간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철학이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고 사람의 운명개척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사명으로 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인간운명의 참된 길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철학의 근본문제

철학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려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발전하는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회란 무엇이고 사회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자연과 사회, 사람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세계관을 주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꼭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철학이 밝혀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리켜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합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이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철학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전개하는 데서 출발점으로, 그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철학의 성격과 내용 그 과학성과 진리성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러면 먼저 종래의 철학들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종래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 물질 - 사람의 의식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 즉 사람의 머리 속에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로 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의식 - 사람의 뇌수기능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현상을 뜻합니다. 사람은 이런 정신의 도움으로 일정한 사상, 세계관을 갖고 사물현상을 인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 존재 - 사람의 의식과 구별되면서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사유 - 사람이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이치 등을 알아내는 생각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종래의 철학이 내세운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주로 이 양자의 선후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물질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의식이 생겨났는가 아니면 의식이 먼저 있고 그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에서 먼저 생겨난 것이 무엇이나 하는 세계의 시원 문제로 됩니다. 2천여 년의 철학사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저마다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물질이 정신보다 먼

저 있어 거기에서 정신이 생겨났다고 보았고 다른 철학자들은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 있어 거기에서 물질세계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이 선차적이고 기본이라고 주장한 견해는 유물론을 이루고 반대로 정신이 선차적이고 기본이라고 주장한 견해는 관념론으로 되었습니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는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심각한 논쟁거리로 되어 온 물질과 의식의 관계 문제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철학에 의해 옹결 해결되었습니다. 노동계급의 철학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해 세상만물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근로민중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려면 무엇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철학에 의해 비로소 제기되고 또 명백히 해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노동계급의 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이전 철학과는 달리 사람을 위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람을 위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세계의 상호관계문제가 왜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선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풀어야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고 자기 운명을 올바로 개척할 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척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자연과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어디서나 사람이 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참된 철학이 내세우는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위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가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리고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근본방도를 이치적으로 찾게 합니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는 것은 또한 이 문제를 해명해야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세계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는 오직 자연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운동법칙을 좇아 자연발생적으로 변화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현실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세계의 발전은 주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세계가 개조되고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어야 이러한 현실세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옳은 자세로 세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철학의 근본문제는 현대인류의 철학적 사유가 제기한 가장 훌륭한 과제이며 완성된 세계관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하는 철학의 대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세계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세계라는 말이 그만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도 쓰이고 넓은 의미로도 씁니다.

좁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세계라는 말과 같이 지구의 일정한 분야를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하늘, 땅, 바다, 천체 등 우주의 모든 것을 세계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철학에서 세계라고 할 때에는 생물과 무생물, 사람과 사회,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와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한 이상 일단 여기서는 사람 밖의 외부세계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그 밖의 외부세계 가운데서 어느 것을 먼저 밝혀야 인간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 하는 목적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세계를 연구하고 해석하지는 까닭도 사람을 위한 세계로 만들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에 대한 해석의 선후차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본질과 변화발전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본질적 특성을 어느 만큼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명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양자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중시하는 견지에서 사람 밖의 외부세계를 먼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계 즉 물질세계가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 변화발전의 특출한 산물로써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 세계의 근원은 물질이다.

사람 밖의 주위세계는 천태만상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만 살펴봐도 다양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한 폭의 거대한 그림처럼 눈앞에 안겨옵니다. 수심이 울창한 산들과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광막한 들판, 사시정철 출렁이는 망망대해와 흰구름이 유유히 흐르는 푸른 하늘이 돋보입니다. 또 한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일고 낮에는 태양이 빛나다가 밤이 되면 무수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참으로 세계는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미립자가 있는가 하면 지구보다도 몇십 몇백 만 배나 더 큰 거대한 천체들도 있습니다. 금강석과 같이 굳은 고체들도 있고 물이나 기름과 같이 낮은 끓음 찾아 흐르는 액체도 있으며 공기와 같이 지구를 휘감고 있는 기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도 있고 돌이나 광물처럼 숨통이 없는 비생명체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체라도 종량, 색깔, 모양, 경도들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밖의 주위 세계는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 천차만별한 사물현상의 근저에는 또 무엇이 놓여져 있는 것인가?

오래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거대하고 조화로운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세계의 이 다양한 자연현상은 신비스러운 《조물주》의 숨씨가 아니고서는 이 가지가지의 조화를 설명할 수 없다 하여 세계를 이루고 있는 만물의 근원은 절

대적인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종교에서도 세계의 근원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종교철학자들은 신비스러운 《신》의 《의지》나 《영혼》, 《정령》을 우주와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세상만물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요컨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최초의 물질도 《신》이나 《영혼》에 바탕하고 세계의 모든 실체들도 다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념은 종교에 의해 널리 선전되어 오래 전부터 하나의 사회적인 의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물질세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존재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의지》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견해입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의 두뇌를 지배해 온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 대한 관념이 바로 그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고 종교적인 《학설》이나 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들도 있어 오랫동안 덧없는 환상이 사회를 풍미하여 왔었습니다. 먼저 신화적인 한두 가지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옛날 그리스의 사람들은 올림퍼스*에 거처했다는 제우스라는 최고신이 다른 신들을 낳아 그것들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뒤이어 대지, 태양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신화에 의하면 어떤 신비로운 용(龍)이 알을 낳아 거기서 나온 파네스라는 존재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의 처음이요, 하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창조했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한 구절입니다.

* 올림퍼스 -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거처했다는 그리스 최고의 산 이름입니다.

종교에서 주장하는 《세계창조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론》이나 《교리》로 다듬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상의 세계》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나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는 그 어떤 《극락세계》나 《천당》과 같은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것은 신비한 존재, 절대자에 의해 지배되고 그의 심리나 질서 밑에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길흉화복도 신이나 하느님의 뜻이므로 그에게 은총을 빌면 죽어서라도 극락세계에 가서 지극히 안락한 생활을 하게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세계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의 적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 종신토록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복종과 청빈을 지키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저녁과 밤에도 이 종소리와 더불어 먹고 자면서 하늘을 향해 삽니다.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사람들의 넋을 짓밟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종교와는 달리 세계가 사람 밖에 있는 《절대정신》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또는 《감각》에 의해 생겨났다는 다른 관념론의 견해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절대이념》의 외화(外化)가 세계의 근원이라고 보는 그 한가지 견해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어디엔가 존재하는 절대이념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발전하여 자연으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의 모든 것으로 높이 발전했다가 본래의 자기 자태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천상의 세계에 있는 그 절대이념이 지상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신화나 종교적인 우주개념설과 꼭 같은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을 파고 들어보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 관한 종교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나 관념론과는 반대로 유물론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의 보편적 기초는 오직 물질이고 세상만물은 물질의 각이한 형태라고 봅니다. 물질에 대한 유물론의 견해도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볼란서의 라스코동굴이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원시사회의 그림들을 보면 벌써 이 시기 사람들 속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 흔적들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아톰*이라는 가장 작은 물질이 작용하여 세상만물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흙, 물, 불, 공기와 같은 물질들이 세계의 근원이라 하고 여기서 천차만별한 사물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 아톰(원자) - 모양, 크기, 배치를 달리한다는 최후의 작은 존재로서 결합, 분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중세 말과 근세에 이르러 유물론자들은 여러 가지 대상, 현상의 기초에는 물질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근원적인 물질적 실체는 변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이상 더 쪼갤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적 실체는 근본적으로 보아 변화발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 유물론을 이룸하여 기계적 유물론 혹은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세계에 대한 견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폴란드의 물리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오래전에 지동설을 통해 천상계가 지상계를 돈다는 종교적인 견해를 타파했고 뒤이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그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굴절천체망원경을 제도하여 달 표면의 산과 계곡, 태양의 흑점 그리고 은하수가 무수한 별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주공간의 모든 천체들이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비스러운 비물질적인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종교의 사상, 상식을 과학적으로 부정했다는 이유로 교회권력의 가혹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에 대한 이해는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자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불변의 입자로 보았지만 자연과학은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운행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은 핵을 분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도 더 작은 미립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적 존재하는 이론이 파산되게 되었습니다.

유물변증법은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과의 도움을 받아 세계는 본래부터 물질로 되어있고 사람 밖의 현실적인 세계는 참 실재인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는 어떤 외부의 보충도 없이 물질로 된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세상만물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사람의 정신이나 의식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참 실재가 물질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학원소는 107개인데 그중 천연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97개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지체로 얻은 것입니다. 이 화학원소들이 결합하여 100만개 이상의 분자를 구성하고 그 분자들이 다시 재결합하여 천차만별한 자연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즉 무기체와 유기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기체만 보아도 대단히 다종다양합니다. 금, 은, 동, 탄소와 같이 하나의 원소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쇳물, 흙, 화강암, 금강석, 소금, 무기산들처럼 여러개의 원소로 결합된 것도

있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도 있고 크와르크와 같이 원자핵보다 더 작은 미립자와 거대한 천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무기체와 함께 유기체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은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활능력을 가진 것은 다 유기체를 이룹니다. 예컨대 지구를 뒤덮고 있는 50만종의 유핵*, 무핵**식물들과 150여만 종을 헤아리는 척추, 무척추동물들이 다 물질적인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 * 유핵물질 - 세포막, 원형질, 엽록소와 함께 핵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 ** 무핵식물 - 핵과 엽록소가 없고 세포막과 원형질로 된 하등식물입니다.

특히 놀랍게 발전한 현대과학은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세계의 물질성을 여지없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많은 우주비행기들이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불리는 우주비행선을 타고 행성의 주위를 끊임없이 돌면서 넓은 우주공간을 깊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어디서도 신을 만나보았거나 천당을 구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최신기계들의 힘을 빌어 땅 속을 아무리 깊이 파 보아도 염마(閻魔)가 있다는 지옥을 발견하지 못했고 5대양의 바닥을 살살이 탐사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용궁의 세계>는 없습니다. 지상의 세계나 천상의 세계를 비롯한 모든 우주창조설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 * 염마 -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존의 선악을 다스려 악을 방지한다는 환상적인 열라대왕을 이르는 말

더구나 물질세계가 <정신>이나 <의식> <감각>의 산물이라고 보는 당치않은 견해는 물질로부터 사유를 분리시키는 황당한 이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 정신이나 의식은 고급한 물질인 뇌수의 기능이며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자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200여만년 전에 지구 위에 생겨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아득히 70억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세계는 <정신>이나 <의식>의 배설물로 될 수 없고 그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신비스러운 <존재>가 자리잡고 있는 <천상의 세계>나 그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세계>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 뿐입니다.

사람은 이 물질세계의 장구한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세계의 발전을 대표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으며 물질은 세계의 본질을 이룹니다. 물질로서 통일된 세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또 내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2) 세상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물질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세상만물은 끊임없는 운동속에 존재합니다. 운동은 물질의 기본존재방식입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영원히 정지하고 있는 사물이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넓은 우주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물은 다 운동합니다. 물론 이것은 운동의 기본 의미는 아니나 아무튼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란 없습니다. 산중턱의 큰 바위들도 겉보기에는 흐르는 세월과 무관하게 영원히 한 상태에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내막이 조용치 않습니다. 맹렬한 운동,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물의 생태현상을 살펴보면 그 운동의 양상은 더욱 미묘하고 그 차원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자유운동*, 자극운동**, 자발적 운동***, 물리적 운동****, 원형질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생명활동은 최신자동기계공장 이상으로 매우 조화로운 운동을 합니다. 뿌리는 체관부를 통해 물과 영양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잎에서는 햇빛을 받아 그것을 공기와 합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전분, 당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을 만들어 다시 줄기와 뿌리, 열매에 공급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식물을 자양식물, 다시 말하면 영양물질을 스스로 만드는 식물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등식물들만 해도 5천여 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러니 일들을 식물이 하고 있으니 그 운동세계야말로 미묘복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 자유운동 - 일부 식물들이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운동입니다.
- ** 자극운동 - 외부의 자극을 받아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식물체 내의 운동을 뜻합니다.
- *** 자발적 운동 -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진행오디는 식물체 내의 운동을 말합니다.
- **** 물리적 운동 - 식물 자체에 의하여 꽃가루, 씨앗, 포자가 뿌려지고 체내의 물기가 증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 원형질 운동 - 세포의 원형질이 움직이면서 생식, 포식 등을 하는 운동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작고 작은 미시세계의 원자, 전자, 핵들도 맹렬히 운동하고 상상적 어려운 거시세계의 큰 천체들도 다 운동합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태양은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돌면서 다 운동합니다. 예컨대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큰 태양은 초당 15.3킬로미터의 속도로 25,000년 동안에 한 바퀴씩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돈다고 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사회도 운동합니다. 사람들이 상호 접촉하고 배우며 협력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나 무산계급이 힘을 모아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 운동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만물은 예외없이 다 운동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운동은 물질의 기본존재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또 언제나 운동없는 물질이란 있는 일이 없고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없는 물질이란 물질없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만물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성질입니다. 물질이 발전하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역학적 운동, 물리적 운동, 화학적 운동, 생물학적 운동, 사회적 운동들이 그 형태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운동형태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높은 운동형태는 낮은 운동형태들을 온통 자체 내에 안고 있습니다. 자연개조를 위한 사람의 사회적 운동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고 집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자면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기계수단에 의한 역학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 몸 안에서는 소화, 흡수, 배설과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형태들이 사람의 사회적 운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은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냥대신 두 개의 각목판때기를 마찰시켜 불을 얻곤 했는데 바로 이 단순한 행위에도 여러 가지 운동형태들이 이행한 결과 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만물은 운동과 분리할 수 없고 물질세계는 영원한 운동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난 사물의 존재와 운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체구 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한생의 긴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공간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시간의 내막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시간은 세상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 줍니다. 한번 흘러보내면 되찾을 수도 없고 뒤주나 창고에 장만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꺼내어 쓸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용자의 것이라 하고 자못 중요한 것이라 일컬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에서 쓰는 시간의 의미는 이와 다릅니다. 철학에서는 시간을 물질의 존재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세상만물은 시간 속에서 변화발전하며 존재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세상만물은 어떤 조건에서나 변하는 순간과 변하지 않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계기성이라 하고 또 사물의 상태가 한 순간이나 일정한 기간 유지되는 것을 시간의 지속성이라 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변부동의 사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만물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하여 시간을 실재 일반의 가장 보편적인 존재형식이라 합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이 시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전 일본 수상이었던 도오조는 태평양전쟁의 도발자로서 1945년 8월에 패한 후 1948년 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단두대 위에 선 이 수감전범자는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최악의 피문은 양심을 씻어 보려는 듯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내치 앞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은 그로 하여금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오조는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생명의 값을 치르지 못하고 시간이 명하는 대로 황천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과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계도한 인생행각을 피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나라, 제민족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처사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해도 제때에 반성하고 앞날을 참되게 사는 자가 현명한 사람으로 됩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참된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미래방향적이라 하여 만물의 과거까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과거를 가집니다.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있는 뱀이나 새보다 먼저 생겨났고 노예사회나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사회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시간적으로 먼저 있던 사물의 존재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성은 시간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됩니다.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사물이 영원무궁토록 변화발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영원성과도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간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더 살펴봅시다.

물질세계는 시간과 더불어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아무런 모양과 크기도 없고 일정한 장소와 위치도 없이 존재하는 실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일정한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갖고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2만여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2,750미터의 높이를 가진 백두산입니다. 우리나라 영해까지 합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만물이 넓이, 길이, 높이, 용적, 위치, 형태 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간이라 하여 그것을 위치와 연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물질의 존재형식이라 합니다.

공간은 무한합니다. 어디로나 막힌 데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천문학 연구계에서는 1초동안에 30만 킬로미터씩 가는 빛의 속도로 100억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새로운 항성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빛의 속도로 180억년 동안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아득히 먼 거리에서 굉장히 큰 하늘색 빛 뭉음을 발견했는데 그것 역시 항성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항성계들이 300억개 이상이나 공간에 널려있다고 보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공간의 무한성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영원하든, 공간이 무한하든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쓸데없는 것을 문제삼아 공연한 입씨름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공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제 시공의 세계에 대한 관념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념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 사유의 선형*적》 형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식이나 정신의 발자취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관념론자들도 시간의 계속성이나 공간의 제한없는 확장에 대해 말하지만 종당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데로부터 시공의 밖에서 《신》이나 《절대정신》같은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그 신비스러운 존재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없는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시간은 영원하고 공간은 무한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운동하는 물질의 객관적 존재형식입니다.

* 선형- 경험에 앞선다는 말인데 주관관념론에서는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 인식은 실재하는 것과 관련없이 선천적으로 즉 미리 주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3) 세계의 사물현상은 상호연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우리는 앞에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세상만물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운동은 상호관련이 없이 고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운동, 변화발전은 밀접한 연관속에서 진행됩니다. 연관이란 사물이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연관에는 직접적인 연관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제도는 사람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이룹니다. 자본주의제도는 착취계급에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체휼하고 있는 바이지만 기아임금, 시간외의 노동, 체불임금, 물가고, 저곡가 등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으로 흑심한 민생파탄을 빚어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제도와 경제생활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생활과 자연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물론 사람은 자연을 정복해야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생산물은 직접 근로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나 회사, 혹은 통치기관의 관할 하에 그

일부만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과 자연간의 관계는 사회제도를 거쳐서만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연관입니다.

또한 개별은 일반과, 부분은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과 계곡간의 물줄기들이 많이 모여야 넓고 깊은 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근로대중이 한뜻으로 뭉쳐야 강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단결된 힘은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물은 공간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집이 있어야 높은 집을 헤아릴 수 있고 먼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야 가까이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일정한 위치와 장소를 차지하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가리켜 공간적 연관이라 합니다.

사물은 시간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진보적인 정신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 겨레의 정신적 향상을 바랄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면 훌륭한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물질적인 수단들과 가치있는 재부를 토대로 오늘의 성장이 마련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쌓고 있는 물질정신적인 재부들이 확실성있는 장래발전을 위해 소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사물현상에 이런 관계를 맺어 준다고 하여 철학에서는 이것을 시간상의 연관이라 합니다.

사물현상은 연관과 그 상호작용하에 끊임없이 변화발전합니다. 세상만물의 변화발전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을 쫓아 변화발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양과 질 다 갖고 있습니다. 양만 있고 질이 없는 사물이 없고 질만 있고 양이 없는 사물도 없습니다. 양이란 사물의 크기와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상태를 뜻하고 질이라고 하면 그 사물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 그 속성을 의미합니다.

세상만물의 변화발전은 그 양과 질의 변화과정을 통해 이룩됩니다. 어떤 실체든지 양이 변하면 잇따라 질이 변하게 됩니다. 예컨대 물의 조성에 산소원자 한 개를 더 첨가하면 과산화수소가 되는데 이것은 물의 성질과 판이한 산성물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민중이 굳게 뭉쳐 들고일어나 식민과소체제를 뒤집어엎고 정권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면 우리 사회는 민중을 위한 새 사회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물의 질은 실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양과 그 결합구조에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변화에 질의 변화가 따르게 되지만 질은 양을 제약합니다. 말하자면 사물의 질은 그 양의 한정 없는 증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에 의해 양이 규정되고 자기의 존재방식도 규정됩니다.

질량의 상호통일도 질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져 사물의 상대적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의 변화는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고 질의 근본변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 사물의 피할 수 없는 변화발전의 법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정상기압상태에서 100도에 도달해야 끓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분자의 운동이 강화되고 원자의 상호 배치와 간격이 변하기는 하나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갑자기 분자운동이 맹렬해지면서 끓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질의 융점이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철은 1,520도 아연은 419도, 유리는 800-1,400도에서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고 알코올은 영하 114도, 수은은 영하 38.9도, 에테르는 영하 123.6도에서 액체가 변해 기체로 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이 자기의 융점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과정에 분자운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물체의 양적 변화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단 한계온도에 이르면 순간적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병을 고치자고 할 때 왜 약을 일정 양만 먹어야 하겠습니까?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아니하고 더 많은 양을 쓰면 오히려 병을 더 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독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양의 변화가 해로운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왜 사물의 변화발전이 양적 변화과정과 질적 변화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 까닭은 사물이 갖고 있는 안정성과 관련됩니다. 일단 질적 변화를 거쳐 자기 고유의 조직, 구조, 성질을 갖춘 사물은 일정한 기간 외부의 작용을 극복하고 자체를 보존하게 됩니다. 만물이 저마다 제 모양, 제 성질, 제 수명을 갖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물이 이 안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양적 축적이 진행되다가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일으켜 다른 사물로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질량법칙의 주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의 변화발전은 긍정과 부정간의 투쟁을 통해서도 진행됩니다. 이것은 사물발전의 기본형식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반드시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긍정과 부정을 정반비례적으로 옹계 결부시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은 서로 반대되는 두 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만물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예컨대 이는 더하기와 빼기, 양극과 음극, 작용과 반작용,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 생산과 소비,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 공격과 방어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런 대립되는 양면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습니다. 세상만물은 이 대립되는 양면의 통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개의 전지가 있습니다.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그 중 한쪽을 없애면 벌써 그것은 전지가 아니게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할 수없이 생산에 종사합니다. 이 관계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 양면의 대립은 투쟁을 낳습니다. 1977년 9월에 있던 서울평화시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행행사의 이유를 <결사선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권력자들에게도 거저싸만콤의 양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눈물어린 호소도 하고 소리치며 통곡도 했으나 주어진 것은 배반과 폭력과 기만뿐이었다...>

우리는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어만 갈 수 없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희망과 권리를 빼앗긴 우리 노동자는 죽음이다. 놈들은 제2의 전태일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 사람이 뒤이어 쓰러지는 죽음의 항쟁을 선언한다.>

결국 약질기업주와 노동자들간의 대립이 투쟁을 낳았습니다. 이런 투쟁은 누가 싸우라고 시켜서 싸우거나 기업주와 관리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끝날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그 대립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기업주와 그들을 옹호하는 착취제도를 영영 무너뜨리고 근로자들을 위해 새 사회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모순을 적대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사회에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교양, 개조와 같은 순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모순도 있습니다. 착취자, 억압자들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때려엎을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진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뒤진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적 측면을 이겨 나갑니다. 이런 것을 비적대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투쟁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립물의 이 양자 사이에 왜 투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발전하고자 하는 사물 자체의 성질에 근원합니다. 어떤 사물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긍정적 측면의 요소들이 증대되어 높은 차원의 결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발전하려면 상대방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되도록 많이 끌어다가 자기와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질이 다른 요소들로는 공고한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기의 구성요소를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배척합니다.

이럴테면 저항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만 저항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운동하는 만물의 밑바닥에는 이런 대립하는 양면간의 투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온갖 사물의 변화발전이 운동과 투쟁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변화가 다 발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지만 발전없는 변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실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뉘나 할 것 없이 많이 보이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집권자들이 바뀌거나 여당과 《국회》의 빈번한 기구개편이 진행되고 합니다. 이때마다 어떤 이들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발전이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이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발전의 의미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태는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발전은 아닙니다. 발전이 되자면 정권과 제도의 성질이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발전은 사물의 단순한 자리바꿈이나 같은 물질의 상태변화가 아니라 진보, 새 것의 출현, 성장 등 높은 차원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사물발전의 일반적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식물은 원생대 단세포식물로부터 은화식물로 발전했습니다. 은화식물이라는 것은 수술과 암술의 구별이 없고 포자로 번식하는 저급한 식물입니다. 그것은 다시 꽃으로 생식기관을 삼고 있는 현화식물로 발전했습니다. 동물 역시 원생아메바로부터 연체동물, 척추동물, 포유류를 거쳐 인간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원시공통체사회로부터 여러 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 사회주의 사회에까지 이른 사회발전의 이 실상도 그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만물은 이렇게 변화발전합니다.

낮은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은 사물발전의 중요법칙의 하나입니다.

새 것과 진보적인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구적으로 보면 어느 때에 가서는 승리하는 것이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낮은 것은 반드시 새 것에 의해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낮은 것과 새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현존상태를 부정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려는 사물의 한 면이고 낮은 것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물의 다른 한 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것은 사물의 변화발전하는 과정에 낮은 바탕에서 생겨나 이미 있던 것과 대립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모양을 띠니다. 그러나 새 것은 변화될 환경과 조건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므로 그 요소는 계속 자리나 나중에는 낮은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 새 것의 운동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낮은 것은 이전의 환경과 조건에서 생겨난 요소들이므로 새로운 환경에 조응할 운동능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은 새 것에 자리를 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새것은 성장하여 승리하고 낮은 것은 쇠퇴하여 망하게 됩니다. 새 것이 승리하고 낮은 것이 망하는 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

3. 사람을 살펴본다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를 올바르게 풀고 사람의 운명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을 밝히자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해명해야 합니다. 철학사는 외부세계에 대해서만 알고 인간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완성된 견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새로운 철학은 지금까지 그 어느 철학도 밝히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을 뚜렷이 해명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상호관계문제를 올바르게 풀어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다른 또 하나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기원했으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1) 사람은 이렇게 생겨났다

인간에 대해 알고자 하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견해와 학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서로 제 나름의 주장을 세우고 그 옳음을 증명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그 주장들을 모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의 경우는 신이나 정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의 경우는 자연계의 생물이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먼저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몇 가지 주장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이 흙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은 세상 최초의 남자이고 이브는 아담의 가슴뼈에서 생겨난 인류의 첫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신의 명을 받고 에덴동산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만 뱀의 유혹에 이끌리어 뉘도 다칠 수 없는 금단의 과실을 따먹은 죄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

이 바로 인간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도에는 인간창조에 대한 야마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적 존재인 이 야마에게는 분신 즉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야미라는 쌍둥이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질을 다 갖고 있던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겨나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창조 신 제페라의 눈물로부터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오르피코스의 인간발생론은 하늘의 신 제우스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은 땅의 아들 티타네스를 전광으로 죽였는데 그 타버린 재로부터 인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신에 의한 인간발생론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발생론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해 그 허위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자연 자체발전의 결과라고 보면서 포유류에 속하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의 견해를 주로 인정하는데 공통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가 생겨 70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무기계의 다양한 사물이 복잡한 발전단계를 거쳐 천태만상의 생명계를 이룬 것처럼 사람도 다종다양한 동물계에서 나온 원숭이의 한 갈래로부터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 알기 위해 먼저 지구 위에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합니다. 형성 당시 지구 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화산분출이 그칠 사이 없고 하늘에는 두터운 구름 층이 뒤덮여 늘 번개와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는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억년 전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시기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구름 층이 폭우가 되어 땅 위에 쏟아져 일시에 원시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구름 층에 있던 수소, 질소, 탄소,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원소들은 원시바다 속에서 강한 번개와 방사선 그리고 바다의 조석현상의 영향을 받아 장차 생명체로 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와 꼭 같은 후대를 낳을 수 있는 유전물질인 데핵산(DNA)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유기촉매 즉 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원시바다 속에서 복잡한 화합물로 결합된 유기물질은 그후 태양을 비롯한 외계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유전물질인 데옥시리보핵산을 낳았고 그것은 다시 단백질과 결합하여 온전한 세포를 이룬 최초의 생명체로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생명체의 기원을 수십억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시바다 속에서 살아오던 이 생명체들은 각이한 진화단계를 거쳐 바다동물과 바다식물로 갈라지고 중생대 말기에 와서는 그중 많은 생명체들이 수중생활로부터 수상생활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척추동물인 물고기가 많이 나타나고 뒤이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와 파충류가 성행했습니다. 또 곤충과 조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포유류 동물이 생겼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시 여러 갈래로 분화되면서 더 발전하였는데 약 5천-3천5백만 년 전에는 이 포유류들 가운데서 장차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인원이 나왔습니다.

유인원들은 오랫동안 무더운 남방지대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한가로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중생대 말기에 남방대륙을 휩쓴 큰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이 지대에 우거졌던 열대수림이 거의 전멸되고 그대신 여러 가지 다른 관목들과 수풀이 넓은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무리지어 살아오던 유인원들은 할 수없이 먹이원천을 찾아 땅으로 내려와 두발걸음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짐승들에 비해 상당히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던 유인원들은 몽둥이나 돌맹이로 나무열매를 따기도 하고 맹수와 싸워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과정에 앞발은 노동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지고 또 손의 발달은 다리, 허리, 목, 머리를 비롯해서 신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른 한편 노동의 발전은 서로 돕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그런 사정은 의사교환의 수단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동물들은 언어라는 수단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집단을 이루고 자연의 온갖 구속을 이겨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정은 달랐습니다. 상호교제의 필요성은 언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언어는 생활상 대단히 이로웠습니다. 마음대로 교제, 접촉하면서 상호 의사와 경험을 거침없이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수단의 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비록 유지하기 짝이 없으나 의식적인 창조활동으로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은 일컬어 학자들은 원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100만-200만 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부터 인류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익히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진화단계를 거쳐 고인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종들은 원인들과는 달리 집게, 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동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심지어 짐승의 뼈와 뿔을 가공하여 장식품까지 만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종에게 이르러 인공적으로 불을 일으켜 사용하게 된 것은 인간의 진화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자연 속에서 생긴 불을 사용해 왔지만 이때의 고인종들은 자체로 불을 일으켜 추위와 맹수들의 침습을 막고 생식으로부터 화식으로 바꾸어 음식맛을 돋구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 원자력의 이용과 비교할 수 있으리만큼 고인의 생활과 체질 구조에는 물론 인류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들의 사회적 유대도 전에 비해 상당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상호 협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밀접한 인간관계가 전에 없이 더욱 강화되고 공동의 지혜와 힘을 모아 큰 맹수들도 쫓아내며 잡아들이는 것이 예상사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활동상의 차이가 확연해져 남자는 사냥을 전문으로 여자는 채집활동을 도맡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식상태가 발전한 고인들의 뇌수용적은 거의 현대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그들이 자연의 맹목적인 위협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쫓기우기만 하던 도망자가 아니라 지구상의 그 무엇도 당할 자 없는 최강자로, 세계의 지배자로 바뀌어져 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인들이 발전된 현대인의 완전한 체모를 갖추자면 아직 생존방식에서나 육체구조면에서 자기를 더욱더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용물을 더 얻어야 했고 자연에 대한 지배영역을 더 넓혀 여하한 풍토에서도 지장없이 살 수 있는 기교와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고인들은 집단적인 사냥과 채집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여러 가지 성질을 깊이 터득하게 되고 점차 순한 동물을 키워 육식의 원천을 얻거나 식물을 지배하여 필요한 양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시작한 최초의 농업과 목축업인 것입니다. 고인들의 창조적인 노동활동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은 사회적 진보를 비상히 촉진시켰고 그 귀중한 유산들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만-4만 년 전에 이르러 고인종들은 비로소 현대인에 가까운 사람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사람을 가리켜 학계에서는 신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인들의 생활은 원인, 고인들의 분산적인 무리생활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혈연적 관계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 넓은 사회관계 속에서 집단의 일정한 질서 밑에 진행되었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노동생활도 상당한 수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신인들이 자연의 발전 법칙에 전적으로 얽매어 살아오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역사의 창조자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고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적 자료들과 특히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발굴된 화석유물들은 인간이 특이한 원숭이의 한 갈래로부터 유인원으로, 유인원으로부터 원인, 고인, 신인을 거쳐 기원하였음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기원 이래 인간은 놀랄 만큼 장하게 자랐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에 의해 일어난 세계의 변화상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그 힘과 재량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 세상만물과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의 그 근본성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 탐구에 많은 사색을 바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실례를 더듬어 보기로 합시다.

옛날 어느 한 철학자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하여 사람을 세상이치를 알기 위해 애써 생각하는 동물이라 했고 다른 한 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까. 또 다른 학자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다》라고 하여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만의 진리를 구하는 존재라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가지로 사람의 특성을 밝힌 사실들이 없지 않지만 위에서 본 것이 대표적인 실례들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에 귀착됩니다. 인간의 특성을 이루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특별한 존재 이룰테면 동물이나 식물의 차원을 넘어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반성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 대한 그들의 견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밝히자면 왜 사람은 생각하고 무엇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나, 바로 이런 문제에 뚜렷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 근본성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철학자들도 사람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정확한 규정이 못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사람은 그 자신 자연물이며 자연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인간은 자연 속에서 나왔고 그 터전에서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인간을 자연물이라고 규정하여 놓으면 사람이 어떤 지경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자연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예컨대 생존경쟁의 법칙에 따라 인간사회가 나아가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입니까, 이처럼 이론상의 자그마한 착오나 실수가 실천상의 큰 오류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중엽까지 인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거의 왜곡된 상태에서 논의되어 왔고 따라서 그것은 의연히 미해명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사를 오류의 역사라고 비평했는데 아마 철학의 이런 허물을 비꼬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 다른 철학자들은 《사람이란 언어를 가진 존재》 《노동하는 존재》 《사회관계의 총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견해는 인간에 대한 종래의 그릇된 이론들을 이치적으로 반박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도 결코 부족점이 없지 않습니다. 어쩌하여 인간은 노동과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언어를 가지게 되는가, 왜 경제관계*를 위주로 한 넓은 사회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궁극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그렸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절대적 지위, 역할, 가치, 품위 일체를 규정지을 수 있는 근본속성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 경제관계-공장이나 땅을 비롯한 생산수단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규정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 사회관계-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맺게 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관계를 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를 당하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사이의 모순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사이의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룹니다.

그러면 사람이 꼭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근본특성 이룰테면 생각, 사유, 탐구, 반성, 노동, 사회관계 그 모든 특성들을 규정하는 사람의 근본특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은 사람의 그 성질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갖는다

참된 철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임을 역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혔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주적인 존재로 됩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정의들에 따라 자주성의 의미를 새겨 봅시다. 자주성이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의 이 속성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는 성질로서의 특징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복무하게 만들려는 성질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각기 따로 작용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는 성질이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성질은 다같이 인간의 자주적 속성으로서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성질은 인간의 생존방식과 동물의 생존방식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동물의 기본 생존방식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개구리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여름에 청초우거진 풀밭이나 개울가에 가면 담삼색 또는 녹색 바탕에 흑색반문이

등가죽에 덮인 자그마한 청개구리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빛을 보호색으로 잘 변화시키는 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색을 갖게 되는 것은 적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색을 가지는 동물들은 비단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그 예를 무수히 들 수 있으나 삼가겠습니다.

또 동물들은 생존환경에 맞게 자기의 몸 구조와 기능을 재치있게 변화시켰습니다. 실례로 새 매는 작은 동물들을 재빨리 덮칠 수 있는 길고 역센 날개와 앙칼진 부리, 그리고 예리한 발톱을 잘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깥환경에 자기를 순응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더 말할 것 없겠습니다. 추운 지방의 식물은 그곳에 순화되어 더운 지방에서 살 수 없고 더운 지방에 적응된 식물은 추운 지방에서 살 수 없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활동은 결국 주위환경과의 싸움인데 동식물은 이렇게 외계에 얽매어 순응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강한 늑이라도 환경에 얽매인 영원한 노예요, 순종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계의 환경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피동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 대처해 외계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면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대립하고 있는 자연은 맹목적인 힘으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그 구속을 용납치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나갑니다. 메마른 땅을 개간하여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범람하는 강들을 막아 큰 저수지로 전환시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이겨냅니다. 또 저수지의 물을 공업용수, 음료수로도 이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원천으로도 씁니다. 해변가와 벌거숭이 언덕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피해를 막고 사람이 모여 사는 도회지나 마을에는 곳곳에 녹지와 공원을 만들어 생활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합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국토를 보호하며 공장과 집을 짓고 항구와 철도를 건설하여 훌륭한 생활조건, 생존수단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의 맹목적인 간섭과 구속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게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의 이 성질, 자주성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자주적인 요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남의 노예가 되어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라와 재부의 주인이 되고 정권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중은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외래침략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미국을 믿지 말라>는 자주의 함성이 잠자는 민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대중의 행동으로 번져서 1980년 12월에는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터지고 뒤이어 1982년 3월에는 부산 미문화원이 불타고 또 1983년 9월에는 대구 미문화원이 폭탄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중이 어찌서 그들에게 연거푸 이런 징벌을 가하게 되었습니까?

그 까닭을 애써 설명하느니보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구속자 일동>의 이름으로 낸 -우리의 행동과 주장-을 상기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국민 특히 광주시민의 대량학살 위에 선 한국의 현 군사정권을 두둔하고 국민에게 살인마로서 지탄받고 있는 전두환을 초청, 격려한 것 그리고 금년 2월16일 한국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을 가리켜 <버릇없는 애새끼들>이라고 한 주한미국대사 워커의 모욕적인 발언, 광주사태 직후인 80년 8월 8일 워킹 주한미군 사령관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민을 가리켜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따를 것>이라고 표현한 것...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족의 이름으로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올바른 정권 같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리들의 거사는 미국이 우방인가에 대한 한국국민의 의문의 제기로서 제시된 것이며 광주사태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미국에 대한 한국국민의 분노의 표시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촉구를 위한 한국국민의 경고이며 일련의 한국과 한국국민 그리고 민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민족의식의 표시이다.>

보십시오. 문부식, 김현장, 심은숙 선생을 위시한 22명의 애국 인사들이 단행한 거사이유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자유, 정의, 민주민권을 부르짖는 우리 형제들을 헤친 미침략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사람의 땀과 피를 미국인의 것으로 바꾼 전두환을 심판하려 한 것입니다. 반미만이 민족의 생명과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자각했던 것입니다. 남에게 예속되고 지배당하고 강제와 구속 아래 남의 향락의 수단이 되어 남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과 옥고를 각오하고 혼연히 반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을 일컬어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자주성과 그 바탕에서 흘러나오는 자주적 요구는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의 근원으로 됩니다. 이 자주적인 성질과 요구로부터 사람의 행동좌표가 정해지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됩니다. 자주성이 없는 사람의 어떤 활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참된 철학은 처음으로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자주성이라는 다른 하나의 생명을 가집니다.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뜻합니다. 육체적 생명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사회의 집단으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동물은 생물학적 존재인 까닭에 모두 육체적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람처럼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오직 사람에게만 고유한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개인에게 한정된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생명은 개인과 더불어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과 더불어 무한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은 자기 보존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물건의 질서나 동물의 차원을 넘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생명이 사회정치적 생명보다 귀중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정치적 생명 즉 자주성이 없는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침략자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민중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낫, 권리, 요구, 신념을 모두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잃으면 민족의 생명이나 사람들 각자의 생명은 사실상 죽은목숨과 같습니다. 침략자, 착취자들에게 빼앗긴 인권이 자기의 권리로 될 수 없고 남의 지배, 남의 손아귀에 든 목숨은 자기의 생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을 해야 하고 살아도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원한이 서린 광주의 참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지배 밑에 우리 민족집단의 생명이 가혹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침략자들의 지배와 예속 아래 인권이 억눌리고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자주성이야말로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회적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주성의 이런 중요함을 뜻하여 일명 그것을 사회정치적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갖는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이라는 다른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은 내용적으로 두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성의 특징은 우성, 목적의식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갖고 있어 행위에 앞서 자기 활동을 설계하고 구상하게 됩니다. 행동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과 자기 밖에 있는 대상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또 자기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요합니다. 행동계획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행동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행동수단을 올바르게 규정하며 행동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행위과정은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결과의 외계에 대한 파악된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람의 이런 행위는 창조성을 갖고 있어 가능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외적 상대에 대한 동물들의 활용은 그것이 아무리 재치있고 세밀하고 경탄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활동으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설계도 구상도 계획도 없으며 따라서 본질상 맹목적이고 본능·적이며 비창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본능·동물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연습도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에 잘 적응된 성질을 뜻합니다. 예컨대 누가 배워 주지 않아도 먹고 자고 또 적수를 만나면 달아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여 장만하는 동물들의 행위를 일컬어 본능이라 합니다.

사람의 성질인 창조성은 또한 외부세계를 개조변형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다같이 외부환경의 여러 조건들을 이용하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의 형태나 방법, 수준에서는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또 생긴 그 상태로 이용합니다. 물론 사람도 자연물을 기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과일이나 열매들을 생채로 먹기도 하고 가공되지 않은 나무나 돌을 노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며 극히 적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연물을 개조하고 변형시켜 이용합니다. 뛰어난 재기와 기교로써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낚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자입니다. 지구가 넓어 자그마치 5억 2천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고 그 넓은 땅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새 것을 만들어 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얼마 전에 철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게 준 대답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제비나 산새, 혹은 벌레들이 동지를 틀고 새끼를 치면서 사는데 그것은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 다람쥐, 벌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먹이를 날라다가 썩지 않게 저장하면서 제법 겨울나이준비까지 하고 있는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는 동물의 이런 행위를 창조활동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세웠습니다. 학생의 설명이 비록 틀리는 것이지만 생각이 기특하여 한참동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한 이야기를 요지로 적어 보고자 합니다.

《학생의 탐구심이 기특하다. 그러나 동물의 그런 행위는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창조란 글자 그대로 새 것을 제조한다는 뜻인데 날새들이 동지를 틀거나 벌레들이 먹이저장을 할 줄 아는 것은 그 재주가 여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창조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창고가 되려면 여러 가지 새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동물들은 이런 짓을 전혀 못하고 오직 한가지 행위만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집을 짓고 먹이를 마련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습성 이룰테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타고 난 성질에 따른 것이다. 학생도 알고 있겠지만 침팬지나 고릴라는 술을 잘 마실 줄 알지만 술을 빚지는 못하고 또 담배를 즐겨 피우나 만들지는 못하지 않느냐.

제비나 개미, 원숭이를 비롯해서 동물들은 다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영원히 자연에 매여 사는 불행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구별되는 근본 차이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학생은 저의 말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면 동물은 자기 한계 내에서 외곽으로 행동하는 일종의 움직임은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계나 수단으로 될 수 없는 존재가 삶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수단의 제조자이고 새 것의 창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부들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용한 생활필수품만 해도 자그마치 2-여만 종이 나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조리한 국가기구와 사회제도를 폭파해 버리고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성질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에게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능력이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공들여 쌓은 과학 지식과 경험, 기술기능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력도 그 능력의 하나로 됩니다. 인간은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고심 참담한 노력의 대가로 이 힘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이 창조력은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학적 힘이나 물리화학적 힘을 비롯한 자연의 여러 가지 힘은 서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것이지만 사람의 힘은 사상의식의 관할 하에 일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

고 통일적으로 세계에 작용하는 높은 차원의 힘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힘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엇 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창조에 일점을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그 성질에 있어서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뚜렷한 좌표와 방향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이는 것이 곧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대합니다.

창조적 능력은 사람의 활동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커지면 사람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사람의 이 창조적 능력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진보하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이 창조적 능력은 자주적 요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사람의 힘이라면 자주적인 요구는 사람의 창조적 활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역겨운 고달픔도 이겨내고 대로는 피도 흘리면서 자연과 사회를 상대로 창조적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몸이 힘이 생겨나고 자기의 뜻대로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생겼습니다. 창조적 능력은 사람의 활동을 보장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면 더 높은 자주적인 요구를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미루어 보아 자주성과 창조성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성이 세계의 지배자로 되게 하는 사람의 특성이려면 창조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의 개조자로 되게 하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

부연하건대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람이 자기의 품위를 바로 갖추 수 없고 또 자주성이 부여한 지상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근본성질의 하나가 창조성입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갖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아득히 넘어서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외에도 의식성을 갖기 때문인데, 이때 의식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존재,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은 고유한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성의 표징은 첫째로,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의 실현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물질 일반의 생명활동은 다만 생명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진행되며 따라서 거기에는 의식된 목적이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인식과 실천 활동에는 의식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적인 요구와 자기의 이해관계의 실현을 목적하지 않는 인식과 실천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며,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지 못한 인식과 실천 활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며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언제나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척도로 하여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또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의식성의 표징은 둘째로,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발휘하는 사람의 의지와 창조적 힘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썩은 고깃덩이에 달려드는 쉬파리를 보면 아무리 쫓아도 또다시 달려들며 잡아서 날개를 뜯어 버려도 기어서 또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이를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고깃덩이로 달려드는 쉬파리의 이러한 완강성, 집요성, 인내성은 개체보존, 종족보존의 본능의 발현에 불과한 것으로 무의식적, 맹목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내성과 용감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창조적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합니다.

인식과 실천 활동의 성과는 사람이 발휘하는 창조적 힘에 의하여 담보되며 창조적 힘은 강한 의지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만 높이 발휘되어 부딪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애국적 민중들이 군부 독재자들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꺾이지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곧 의식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인 의식성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성질입니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기관 가운데서 가장 발달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입니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지휘합니다.

동물도 물론 뇌수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의 뇌수 역시 동물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뇌수활동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색깔, 모양, 냄새, 맛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감성적 반영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감각은 외부세계의 직접적 자극 외에도 언어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이 땅의 민중들은 《최루탄》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좁아지고 눈물이 나오려 하며 코가 매캐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같이 사람은 언어에 의한 자극에 의하여 감성적 인식과 함께 사물현상의 본질을 갈라내고 운동발전의 법칙을 이끌어 내는 분석과 종합, 추상화와 보편화의 능력, 즉 사유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감성적 인식이 언제나 사물의 외적인, 개별적인 성질과 자기의 생물학적 요구만을 반영함으로써 동물의 활동을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무의식적 활동으로 근거 짓는다면 인간의 활동은 감성적 인식과 함께 사유기능을 갖춘 뇌수의 기능, 즉 의식으로 인하여 세계와 자기 자신을 개변하는 목적의식적, 창조적 활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성은 본능적 요구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생명물질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성질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성질인 의식성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생명보존과 종족보존의 요구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성질은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거북이는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깊숙이 파고 그 속에 또 작은 구멍을 파며 거기에 알을 낳고는 구덩이를 메우는데 거북이가 알을 낳은 후 구덩이를 메우기 전에 쫓아 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구덩이를 메우는 동작을 하고야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나, 닭이 알을 품을 때에 알 대신 자갈 같은 것을 주어도 그냥 안고 굴리는 것은 다 의식이 없이 본능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행위를 무조건반사의 단순한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동물과 달리 의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능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크게 지식과 사상의식으로 구분됩니다. 의식은 물질세계의 반영이므로 우선 사물현상의 성질과 그 운동법칙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식이라 합니다. 지식은 외계의 상태를 어떻게 머리 속에 새기는가에 따라 허위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은 허위적인 지식이고 그것보다 후에 나온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지구중심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아니하며 모든 천체 모든 공간은 지구의 주위를 영원히 돈다고 틀리게 이해한 확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지동설이라고 하면 지구가 스스로 제돌이를 하면서 태양의 두리를 공전한다는 확실입니다. 일명 태양중심우주체계학설이라고도 합니다. 현대과학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타원형으로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됩니다. 사람은 의식의 힘을 빌어 대상의 상태, 성질, 구조, 연관을 비롯해서 사물현상의 본질은 물론이고 자기의 성질과 능력까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 지식입니다. 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이런 지식의 힘으로 식기를 만들고 불을 일으키고 털옷으로 빙하시대를 이겨냈습니다. 또 세포를 발견하고 기관차와 비행기를 만들어 내고 오늘의 우주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한 면은 사상의식입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그와 관련된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담은 의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사상의식은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요구와 이해 관계를 반영한 의식은 노동계급의 사상의식으로 되고 자본가, 지주, 특권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은 착취계급의 사상의식으로 됩니다. 이처럼 의식은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의식성과 의식의 상호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의식작용은 의식성에 의해 발현되고 의식성은 의식의 작용으로 생기게 됩니다. 의식성이 사람의 성질이라면 의식은 뇌수의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성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의식은 물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신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세계의 사물과 현상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과 투쟁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계획, 설계하게 하는 것도 의식성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역시 의식성입니다. 의식성은 사람의 활동을 이렇게 규제합니다.

의식성은 자주성, 창조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고 또 그에 의해 담보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의 귀중함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깨닫게 되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 활동도 의식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람에게 의식성이 없으면 어떤 자주적인 요구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세계개조를 위한 활동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은 단순히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이 근본성질을 해명한 것은 인간탐구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해명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절대적 존재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3)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사회 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하나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사회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라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회와 동떨어지고 고립무원하게 사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일정한 질서 밑에 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집단을 사회라 합니다. 그러하다면 동물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개미사회》요 《벌사회》요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표현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유별난 무리생활을 인간사회와 비교하여 그 특징적인 면을 가리킨 것이지 사회의 고유한 의미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이루자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과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의식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많은 무리를 이루고 강한 질서 아래 살아가는다고 해도 그것은 군거본능(群居本能) 즉 떼를 지어 살아가는 타고난 성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맹목적인 결합의 한계를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뜻을 모아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한데 모여 목적없이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인 경우에 그것은 어떤 놀이든 예외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를 형성합니다. 사회와 인간은 상호 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고 사회를 떠난 인간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회는 인간이 자연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유래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사람이 자연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와 떨어져 살 수 있는냐고 하는데 그것은 논의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분리라는 말은 주위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단독으로 사람이 떨어져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물질 발전의 최고산물이라는 의미에서 벌써 자연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자연과 대립해서 그보다 높은 지위에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위에 태어난 초기 원시인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심한 구속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우, 화산, 지진, 빙하, 맹수침해, 질병을 비롯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무서운 재해를 입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고 살아가지자 자기의 대립물인 자연의 횡포와 맞서 고달프게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생존조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리한 두뇌와 발달된 육체를 동원케 했습니다. 생활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은 여럿이 한데 모여 힘과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은 미묘해서 급기야 큰 힘과 오묘한 지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천재지변들을 용의주도하게 이겨 나갔고 그 과정에 사람의 사회적 공동체는 더욱 굳게 다져졌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된 사람의 공동체, 그 집단이 곧 자연의 질서와 다른 고유한 의미의 사회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가 바로 사람이므로 그들을 가리켜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힘으로 엄청난 재부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의 정신적 재부, 물질적 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애써 세계를 탐구하고 지식을 닦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거대한 정신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 등이 그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책에 담아 사회의 재부로 만들어 후손들까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회의 정신적 재부라고 합니다.

정신영역의 이러한 성과는 사람의 역할을 부쩍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도구와 생산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인간능력의 강화는 자연정복의 영역을 유례없이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을 입어 쓸모있게 개조된 자연의 모든 것을 사회의 물질적 재부라고 합니다. 동물은 재부와 유산이 없이 살아가는 알몸이지만 사람은 거대한 물질정신적 재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동물과 다른 점, 즉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되는 또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자기를 키워오는 과정에 자기의 고유한 사회적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장과정을 보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갓난아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유아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키운다고 생각할 때 그 애들에게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흥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1920년 인도의 <고타루리>마을 가까이 숲속에서 늑대와 함께 살던 여자아이가 그보다 더 어린 여자아리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처음에 이들의 성질은 늑대와 똑 같았습니다. 음식은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뜯어먹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지 2년 후에도 죽은 닭을 보고는 숲속에 가지고 가서 뜯어먹으며, 5년이 지나서야 두 발로 서게 되고 두세 마디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낳은 사람임에 틀림 없었지만 사회와 단절되어 살았던 까닭에 사회적 속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의 그 성질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 사람의 성질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 속성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성질은 물론 오랜 진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특수한 육체적 기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고도로 발달된 뇌수와 정교한 손을 비롯한 발전된 육체적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특유한 사유기능과 노동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그 고유한 성질이 사람의 육체기관이 진화발전하는 과정에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은 사회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싹도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달된 유기체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 수 있는 생리적 바탕으로는 되지만 거기에서 직접 사람의 사회적 성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질은 사람들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속성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이 요람 속에서 사람들은 집단의 힘으로 자연의 구속을 이겨왔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서 사람들은 세계의 주인으로 되려는 자주적 요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통제하는 사상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생겨난 것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입니다. 그것은 역사와 더불어 사람의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본질적 특성은 새로운 사회적 실천투쟁에 토대하여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부연컨대 세상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이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4.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지금까지 우리는 책의 둘째 부분에서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어떻게 운동,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고 셋째부분에서는 인간의 발생과정과 그 본성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고찰하였습니다. 세계에 대한 고찰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세계이며 거기에는 그 어떤 <신>이나 절대자도 없고 <천상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적 존재라는 귀중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된 철학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인 세계와 인간의 상호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풀이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는 문제를 풀이해 보기로 합시다.

1)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참된 철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임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과 세계와의 상호관계 즉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해명된 것이 바로 철학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수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됩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자

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유일한 창조자로 됩니다.

참된 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개조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데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들은 흔히 주인이라고 하면 무슨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자를 생각합니다.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땅의 임자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이라고 하면 그 집의 소유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세계의 소유자, 그 모든 것의 임자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철학에서 쓰는 주인이라는 말은 그것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반대로 세상만물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존재, 다시 말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자연과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주재하고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우선 자연의 주인, 자연의 지배자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얽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온갖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에는 천태만상의 사물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도 있고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존재하는 사물도 많습니다. 특히 동물을 가운데는 사람에 비할 바 없이 힘이 세고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된 짐승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무리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도 자연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존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성질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런 성질과 기능이 없습니다. 예컨대 곰, 개구리, 벌레들은 겨울이 오면 밖에서 살지 못하고 서늘러 땅속이나 동굴, 구세먹은 나무 속에 들어가 동면하고 또 제비나 두견새를 비롯한 후조들은 철따라 이역만리를 왕복하면서 힘겹게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처럼 생존환경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슨 궁리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또 동물은 아무리 영리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새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동물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재간있는 것 같아도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짐승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견이 없고 설계가 없고 개선이 없습니다. 행동이 직선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생존환경을 저들의 요구대로 개변하기 위한 활동상의 전진이 없고 발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법이 매양 변화와 발전이 없고 또 그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문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동물적 본능과는 달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해 진행됩니다. 목적, 타산, 분업, 기계수단의 이용, 환경개조, 문화창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과 사회의 총체를 의식으로 환산하여 자기에게 이롭도록 무단히 개조하고 지배해 나갑니다. 짐승의 생물학적 활동이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행동형이라면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목적의식적인 능동형, 창조형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에게 복종되고 얽매이게 됩니다. 사람은 영리한 동물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합니다.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돌고래를 식용이나 공업용 원료로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 물고기에 대한 이용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돌고래는 물고기와 같이 생겼지만 폐로 호흡하는 바다짐승인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숭이보다 더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청각이 특별히 발달된 돌고래의 귀에 음향중복기를 설치하여 함선들의 내왕을 정찰하고 있고 그것을 더 잘 훈련시키면 배의 항해까지 안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다른 예를 더 들어봅시다. 지금 사람들은 수산업을 발전시켜 바다, 강, 호수 등에서 산업에 가치있는 수산자원을 수없이 개발이 용하고 있고 또 땅위에서는 광물자원, 수력자원, 식물자원, 동물자원들을 널리 연구개발하여 유익한 재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사람이 자연의 본질을 밝혀 내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 이용,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자연 속의 비밀을 밝혀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냅니다. 자연의 부질없는 횡포는 미리 막아내고 쓸데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대신 유용하고 이로운 것은 적극 조장, 발전시켜 풍요한 생활환경을 꾸려 나갑니다. 참으로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으뜸가는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배자의 《왕좌》에 있는 주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끝없이 넓은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주에는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생명체들처럼 외계에 얽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간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세계를 여러 방면으로 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또한 사회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 역시 사회를 관할하고 발전시키며 지배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사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입니다. 인간생활의 터전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동의 요람이 사회입니다. 사회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관할하고 지배합니까?

사람은 사회와 온갖 재부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재부는 사람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를 좇아 공장과 집을 짓고 자연자원을 일구어 생활에 필요한 기계, 원료, 물건들을 비롯한 사회의 재부를 창조하고 대를 이어 그것을 관리하며 이용합니다.

사람은 물질적 재부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부도 창조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이용하고 누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회의 어느 영역, 어느 구석에도 사람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사람을 떠나서 사회의 정신문화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사회관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맺게 되는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 여하에 따라서 사회제도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한 정치제도, 경제제도들을 없애버리고 자주적 요구에 맞게 새 사회제도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를 관할하는 권리의 소유자, 그 지배자로 됩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인의 몫입니다. 바로 그 권리의 소유자가 사회의 주

인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사회성을 거부할 수 없듯이 사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민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이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이유없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야 하고 또 그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를 비롯한 착취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무시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친미적인 예속자본가, 악덕지주, 파쇼관료배들이 정권과 생산수단들을 모조리 거머쥐고 민중의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있으므로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자유와 권리를 잃고 극소수 착취자, 억압자들에게 무한정 뜯기우고 멸시당하면서 서글픔을 되씹게 되는 까닭이 이에 근원합니다.

요컨대 민중의 원칙적인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의 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순을 없애 버리고 민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이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의 존엄과 위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의 장한 역할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계개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재주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다른 사물이 견줄 수 없는 활동을 하면서 주동적으로 세계의 개조를 가속화하는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변화가 다 사람에게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계의 운동변화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태고연한 밀림 속에서 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이 무성하게 번식하는 것이나 하늘에서 구름이 날고 눈비가 내리는 것은 다 사람의 영향밖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운동변화입니다.

사람의 힘이 세계개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외부세계의 여러 가지 힘 가운데서 외부세계의 힘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결정적으로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개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원만히 개조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을 잘 조성해야 하며 물질적 수단들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개조에 작용하는 객관적 여건에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개조에서 자연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 환경의 변화, 동식물의 분포상태, 기상기후의 변화등 자연지리적 환경은 사람의 세계개조활동을 보다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작용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지리적 조건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데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되지 못합니다.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일어난 지상의 변화가 그 사실을 잘 보여 줍니다. 이 기간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거대한 산업시설들과 대도시, 복잡한 철도간선들과 대운하를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지상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 눈부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연 자체의 변화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지리적 환경은 수십 년 전은 고사하고 수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자태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수 백 년 동안에도 별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자연의 힘이 몇 십 년 사이에 경이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한 사람의 힘과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연조건과 함께 사회제도가 세계개조에 주는 영향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제도에에서는 사람들의 세계개조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반동적인 사회제도에에서는 사람들의 사회개조활동이 구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어진 여건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리한 여건을 유리한 여건으로 만들고 낡고 반동적인 것을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변혁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 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조건이나 사회제도가 세계개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세계를 개조하자면 물질기술적 수단들도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개조하자면 굴착기, 착정기, 채광기, 채탄기, 자동차, 트랙터를 비롯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계들은 자연개조에서 자못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기술적 수단들은 아무리 능률 높은 기계들이라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작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발전된 현대적인 기술수단이 무엇인양고 물으면 대체로 우주로켓이나 로켓이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의 성과가 이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61년에 처음으로 4.7톤의 무게를 가진 우주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라 지구의위성으로 되었다면 오늘은 그보다 몇 십 배나 더 큰 우주비행선들이 금성에 까지 비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계에 장치된 정밀한 과학기구들은 우주공간의 대전입자 흐름의 분포도, 태양계, 은하계와 우주선의 특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기계들이 제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이 없어 보십시오. 애당초 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사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여도 제 혼자서는 땅으로부터 1미터도 날아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기계수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봇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적 수단들은 과학기술문명의 이기(利器)들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 사람에게 의해 재구성된 자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분리된 기계수단들은 한낱 쇠덩어리나 돌덩어리와 같은 무용지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 수단들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자연을 개조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원래 사회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관계의 담당자로 되어 사회발전도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회를 개변하는 데서도 물질적 조건, 대외적 환경, 무장수단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작용하지만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회개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시켜 사회개조운동을 일으키고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는 당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사물의 운동이치를 알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물의 운동법칙을 파악하고 조절 통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농부들이 계절에 따라 적기에 농사를 짓는 것도 지구나 태양의 운동법칙을 생산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쇠를 깎아 훌륭한 기계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역학 법칙이나 물리적인 운동의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운동법칙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의 힘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유럽의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신》을 발견하고 그에 빌어 행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현명한 자라고 하였지만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물의 운동법칙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세계의 지배자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어느 요인들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참된 철학의 이 원리는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사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 줍니다.

2)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참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세계개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 줍니다.

사람은 우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사람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람의 처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 것이고 반대로 다른 어떤 존재가 사람의 운명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면 어차피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문제는 사람이 자주적인 존재나 아니면 외계의 다른 것에 얽매인 예측적인 존재나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어디에도 사람과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란 없습니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좇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고 사회를 관찰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참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운명을 예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초인간적 존재란 하늘, 땅 그 어디에도 없고 따라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지배자는 오직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뚜렷이 밝혀 줍니다.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근로자들이 애써 일하면서도 가난과 주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팔자》나 《운명》의 탓이라고 합니다. 인간운명에 대한 이러한 그릇되니 관념은 예로부터 오랜 세월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예컨대 옛날 어떤 학자들은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그의 운명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에 추종하여 절대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천(天)에 의해 창조되고 천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며 사람이 부하고 귀한 것도 다 하늘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신》이나 《하느님》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나 기독교의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즉 사람은 힘껏 일해 보다가 모든 불행이나 행복에 당하면 하늘의 명령인 줄 알고 웃어넘겨 버려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미신적 관념은 사람의 운명을 신비스러운 《존재》에 지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그런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이론을 비꼬아 우리 나라 고려시대 학자인 김초는 《부처에게 불공만 많이 드리면 모든 재해가 다 없어지고 사람이 오래 살며 부처가 가리킨 대로하면 지옥을 깨뜨리고 나와서 낙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불공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재해는 소멸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낙토나 지옥을 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물론은 물질위주의 원리로부터 사람의 운명은 그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에 잇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주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념론의 부당한 운명관을 이론적으로 깬 후 물리적 조건과 환경개선의 방법으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은 물질위주의 철학적 원리에 바탕 하였으므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문제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유물론은 사람의 운명이 물질적 여건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는 데서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의 요구에 맞게 물질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입니다.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행복의 처지를 자기의 지혜와 힘과 의지로 개선해 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지배대상이고 사람에 의해 개조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도 자기의 운명을 의탁할 데가 없고 또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운명의 지배자는 오직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인 사람 자신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 못할 진리입니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사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주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면서 되도록 행복하게 살려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개척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이 일을 누가 맡아합니까. 다시 말하여 자연개조와 사회변혁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외에, 사람의 힘 밖에 그 무엇도 이 장한 일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세계를 개조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예는 그만두더라도 최근 시기 자주성을 위한 세계의 여러 나라 민중들의 투쟁실상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던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에 벌써 20여 개 나라들이 식민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섰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말라가시의 낡은 정권이 붕괴되고 모잠비크, 앙골라 등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주의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미 100여 개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고 후진성을 가시기 위한 경제, 문화, 국방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이 나라 사람들은 식민지 억압하에서 수백 년씩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예수》도 그들의 운명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의 힘과 제 손으로 식민지 철책을 끌어버리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비스러운 《존재》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사람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의 원리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참된 철학의 근본원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히 밝힌 참다운 철학적 원리입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 없는 사물의 역할이나 그 강화발전을 생각할 수 없고 사물의 역할을 떠난 그의 지위의 보장이나 향상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까닭에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참된 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사람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놓고 그의 운명을 올바르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참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란 본래부터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최고의 존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민중 위에 다른 특권적인 지배자가 없어야 한다는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 원리에 의해 자기가 차지해야 할 응당한 지위와 그에 상응한 책임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연컨대 우라 민중은 지금까지 착취계급에게 무시당해 온 탓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에 허물이 가게 된 그 전근대적인 열등감, 무력감, 의존감, 굴욕적인 순종과 같은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뚜렷한 권리의식을 굳게 간직하고 참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에 서야 할 위치와 좌표를 뚜렷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개조에서 그가 하는 결정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임을 뚜렷이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이론과 실천의 어느 방면에서나 주체의 원리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란 없고 또 못 해낼 일이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참된 철학적 원리는 인간에 대한 우열의 차별과 착취와 억압을 이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절대화한 인간긍정의 위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인류의 철학사상에는 여러 갈래의 철학적 원리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를 이렇듯 존중시키고 절대시한 원리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적 원리에 의해 새로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5. 참된 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

철학적 원리는 세계관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이 쓰고 사는 집과 비교해 보면 철학적 원리는 그 집의 기초와 같은 것이고 세계관은 그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관은 철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원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위에 서게 되는 세계관의 진부여하가 결정되게 됩니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원리가 과학적이라면 그에 바탕한 세계관은 민중에게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을 세워 주는 참된 세계관으로 될 것이고, 철학적 원리가 비과학적이라면 그 위에 세워진 세계관은 해롭고 그릇된 세계관으로 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적 원리는 가장 올바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혀 줍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 하였습니다.

참된 철학이 밝힌 새로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쫓아 세계의 구석구석을 조망해 본다면 그의 새롭고 참된 면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로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라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계를 여러모로 보게 되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신》이나 《정신》을 비롯한 신비로운 것을 위주로 세계를 보는 종교적인 견해와 관념론적인 견해도 있었고 물질을 위주로 세계를 보는 유물론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세계에 대한 견해는 실로 여러 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종교철학적인 견해나 관념론적인 견해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신비로운 존재 즉 《신》이나 《정신》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고 그의 작용과 질서에 의해 세상만물이 변화 발전한다고 봄으로써 사람을 그 어떤 정신적 추상물의 지배를 받는 운명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를 물질위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자연이나 사회역사를 유물론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생겨 난 이후 세계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물질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위주의 그런 고찰만으로는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의 물질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울 수 있으나 사람이 생겨 난 이후 현실세계의 참다운 모습과 그 변화발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견해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참된 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가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는 사람에게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새로운 견해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사람에게 의해 어떻게 지배되고 개조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세계는 사람에게 의해 지배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참된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의 하나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자주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사람에게 복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사람에 의해 세계가 지배된다고 하여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의 지배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지만 결코 사람은 세계의 본체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 세상만물이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물질세계이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중심이 있어 그에 의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강한 힘과 슬기에 의해 세계가 정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무변광대하고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지배됩니다. 그러면 세계가 사람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었습니까? 그 실상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자연자원이 사람에 의해 개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실감 있으리라고 봅니다. 15세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50여 종의 광물을 개발 이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쇠, 강, 크롬, 구리, 아연, 알루미늄을 비롯한 수백 종의 흑색 및 유색금속 광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70여 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와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것이 다 사람에 의해 지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영해와 민물에는 800여종의 물고기와 100여종의 조개류, 수백 종의 바다풀이 있는데 그중 150여 종의 가치있는 수산자원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상은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증명해 줍니다. 인류역명기에는 아무것도 없던 지구 위에 오늘은 전자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웅장한 생산시설들이 수없이 마련되고 번창한 도시와 아늑한 농촌마을들이 온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갖가지 대형 선박들과 최신식 기관차, 자동차, 비행기들이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1519년에 포르투갈의 마젤란은 2년 11개월 여에 걸쳐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횡단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만 지금은 우주비행선을 타고 한 시간 이내로 지구 상공을 일주하면서 넓은 우주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물질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자주성에 기초한 자주적인 활동과 창조성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 그리고 의식성에 기초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지만 그런 성질과 기능이 없는 외부세계는 어차피 사람에 의해 지배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관찰과 척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진리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 견해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세계를 상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개조된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찰하에 개조됩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다른 하나의 내용을 이룹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사람의 요구에 부합되게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더 이롭게 개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계는 사람의 힘을 입지 않고도 스스로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개조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개조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작용, 이를테면 창조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사람의 요구를 쫓아 변화 발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을 하는 존재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연 속의 사물들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역학적 운동이나 화학적 운동도 하고 또 물리적 운동이나 생물학적 운동도 합니다. 사물의 이러한 운동들의 상호작용은 자연의 다양하고 무쌍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땅과 식물과 기후의 상호작용을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아 따뜻하여 비가 내리면 땅에 물기가 잘 보장되어 수풀이 우거지고 수풀이 무성하면 그것이 멀거름이 되어 땅의 유기질함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의 구조가 변화되어 그 땅은 더욱 기름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운동형태들이 상호작용 하였겠습니까? 비는 역학적 운동과 물리화학적 운동으로 땅에 작용하고 땅은 물리화학적 운동으로 식물에 그리고 식물은 생화학적 운동으로 땅에 작용하여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제각기 일어난 변화이지 비가 땅을 개조하거나 땅이 식물을 개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이고도 자연발생적인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위세계에 작용하는 사람의 운동은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입니다. 세계의 개조발전은 오직 사람의 이런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맹목적인 운동과장에 일어나는 세계의 변화는 개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사물의 운동변화가 사람의 힘을 입어 다시 변화되는 것만이 개조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약 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들소를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고 인도에서는 약 5만 년 전에 야생 닭을 길들여 가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고심 탐험한 연구 끝에 수많은 야생식물들을 재배작물로 개조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은 무려 1,500여 종을 헤아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이 없이 야생짐승이나 식물들이 저절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개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사람에게 더욱더 이롭게 개조되는 것이 바로 현실세계의 참모습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개조발전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일정한 운동법칙에 의해 움직이면서 변화 발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스스로 운동하지만 아무런 법칙도 없이 무질서하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운동발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물이 정상 기압상태에서 100도가 되면 끓고 0도에서는 얼어 고체가 되는 것도 법칙이겠고 공중에 던진 물체가 지구인력에 의해 땅 위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며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법칙을 갖고있지 않거나 법칙 밖에 존재하는 사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 세계가 아무런 법칙이 없이 무질서하게 운동 변화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 세계를 개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칙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법칙의 이 작용조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물의 운동, 변화발전을 조절, 통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운동법칙의 인식, 지배를 떠난 사람의 세계개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유전자의 운동법칙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비루스 항원체를 개조해 그것으로 전염병을 미리 막기도 하고 성장촉진제를

생산하고 품종을 개량하여 유례없는 주곡증산을 보고 있습니다. 역학의 3법칙이라 이름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 비행기와 로켓을 만들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사회발전을 실천에 적용하여 낡은 착취제도를 짓부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상에 쌓아 놓은 모든 재부들은 파악된 법칙을 수단으로 삼아 자연과 사회를 총횡무진으로 개조한 자랑스러운 열매들이라 하겠습니다. 세계는 물질운동과 그 발전법칙의 지배자인 사람의 뛰어난 창조적 활동에 의해 개조되는 세계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개조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조되어 나가느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개조발전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개조의 범위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세계에는 자연의 변화발전 방향과 다른 또 하나의 개조발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세계는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역시 사람의 활동상 특성과 관련됩니다. 사람의 활동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자주성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자연이나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하게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상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사람의 활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키우고 일을 설계하면서 쉬임없이 창조적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그 모든 창조적 활동은 자기의 생활환경인 세계개조를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개조 발전되는 세계는 어차피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자연의 운동과 변화발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사물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상승 발전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자연의 발전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의사는 목적도 없이 자연의 발전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재차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발전도상국들에게서는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주국방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세계개조를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인데 이 투쟁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이 사람의 관할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강화될수록 세계개조를 위한 활동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옛날 원시사회의 사람들은 씨족단위의 좁은 지역에서 간단한 석기나 활을 만들어 사냥을 했습니다. 뒤이어 짐승을 길들여 목축을 하고 또 석기대신 청동이나 철제도구를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자연의 많은 재부를 이용하지 못하고 단순분업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창조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최신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지상과 지하의 모든 자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자기의 생활권 안에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림받던 간석지나 동토대의 광물들까지 다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가지 목적에만 이용하였던 재료들도 열 가지, 백 가지 용도를 가진 귀중한 재부로 전환시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넓고 깊이 입체적으로 개발되어 사람에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세계의 지배영역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창조적 능력은 자주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강화됩니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지식을 닦고 지혜를 키우고 새로운 기계수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자라면 사람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높아지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적극화되면 자연의 더 많은 운동형태들이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기생산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의 역학적 운동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얻는다면 그 다음에는 석탄이나 원유를 연료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증기에 의해 물리적 운동으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자에너지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화학적 운동에 의한 전기생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여러 가지 운동형태들이 더 많이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세계개조의 발전과정은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주위세계는 사람에 의해 개조 발전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무관한 세계개조발전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는 사람이야말로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고 지배자, 개조자라는 것을 더욱 뚜렷이 밝혀 줍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참된 세계관은 사람이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세계를 대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실천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나 하는 것을 밝혀 줍니다.

2)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밝혀 줄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 줍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가 세계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라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계를 대해야 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지만 세계에 대한 견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우기 위한 전제로 되지만 사람들에게 세계개조를 위한 행동의 원칙과 방향은 밝혀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완전한 것으로 되자면 세계에 대한 견해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바탕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참된 노동계급의 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라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일반적인 지침을 뜻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은 이전 철학들이 내놓은 세계에 대한 관점, 입장과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념론철학이나 종교철학은 세계란 그 어떤 신비스러운 《절대자》에 의해 생겨나 그의 질서 밑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견해로부터 어차피 사람은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노동계급의 철학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스스로 변화발전한다는 견해로부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면서 그 객관적 이치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인 관점과 입장은 긍정적이고 또 사람을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물질중심의 관점이나 입장과는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때 대한 관점과 입장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참된 노동계급의 철학이 밝힌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우선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사물현상을 접할 때 우선 사람을 첫 자리에 놓고 사람의 이익에 건주어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를테면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대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해로우냐, 이로우냐, 이로우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없애고 이로운 것으로 만들어 이로운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유용한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는 자세에서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참다운 자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이익에 맞게 인식과 개조 활동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며 다음으로는 모든 사물을 사람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옮겨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인식과 개조 활동의 목적을 사람의 이익에 맞게 세워야 세계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적인》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부단히 투쟁한다고 하여 《실천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목적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 토대하여 그것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세워 놓은 사람의 투쟁좌표 이겠습니다. 목적은 실천행위에 선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목적의 총체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목적은 어떤 경우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사람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됩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개조를 위한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식과 실천활동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은 서로 달라집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에 기초한 기술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민중을 거두고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할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민중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 즉 기술개발문제는 근로대중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평등과 복리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8.15 광복 직후 있었던 《폭파된 원철로》라고 알려진 역사적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사례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경영하던 함경북도 성진 제강소에는 높이 2미터, 길이 10미터의 원철로가 있었는데 절연장치가 불비한 이 용광로에 3천3백 볼트의 고압전기를 넣어 선철을 녹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압전류가 누전되어 쇠붙이에 몸이 닿기만 해도 목숨을 잃었으며 비오는 날엔 습기가 찬 지하의 고압선에서 소철레 일예까지 전기가 흘러들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고 살아갈 길이 막혔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칫하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공포의 일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제시기 성진 고주파 공장 원철로에는 매일 수많은 조선노동자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어떤 날에는 하루에 무려 38명이 생죽음을 당한 일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회사는 아무런 노동안전시설과 대책도 없이 조선인 노동자들은 원철로에 내몰았으며 《사망통지서》를 수백 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합니다. 이 원철로는 참으로 광복 전 조선노동자들의 원한이 사무친 마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비인간적인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민중은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고 새 나라 건설에 감철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노동자들의 귀중한 목숨과 바꿀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생산한 강철을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천만금의 원철로를 폭파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기술개발의 목적을 다르게 세웁니다. 1984년 현재 미국에는 근 2천 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는데 그 대다수가 전자계통에 의한 생산의 자동화로 공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에도 미국에서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질 때마다 근로자들의 생존의 자유와 권리 축소라는 악몽 같은 현실을 빚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과학과 기술이 민중의 이익을 해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나라의 정신 위생학자들이 뉴욕시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정신상태를 진단했는데 매 22명당 한 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고뇌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이익보다 독점자본가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목적 밑에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근원합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하지 않는 관점과 입장에 서면 민중에게 이런 재난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개조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할 때 대한 관점과 입장은 모든 것을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또다른 하나의 내용을 밝혀 줍니다. 요컨대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필요하나 필요치 않느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고 사람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선택하여 생활권에 배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추하고 해롭고 자주성을 저해하는 타기할 대상으로 됩니다.

이 가치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원리에서 나옵니다. 만물의 등차관계에서 보면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는 역할도 역시 그 무엇도 따르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힘과 지혜를 갖고 세상만물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는 강하고 슬기로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세계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물은 있어도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 사물의 가치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만물은 쓸모 있는 재부의 원천, 가치의 대상으로 됩니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도외시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겠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에게 소용되겠지만 그것들은 자연조건이 저들의 생존환경이라는 것을 도무지 모릅니다. 자연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므로 관리도 못하고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있으면 먹고 흡수하고 번식하다 일단 환경이 불리해져 그에 순응하지 못하면 사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식물은 영원히 자연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세계의 유용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개조, 이용하는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됩니다. 세계의 주인이고 지배자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복무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만물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되자면 사람의 이익에 맞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이 사물현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지 않는 관점과 입장에 선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재산》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것을 가치관념이 거꾸로 섰다고 하는데 《돈》이나 《물건》을 사람보다 더 우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매판자본가들과 워킹자들이 공해산업을 끌어들여 강토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나 미국당국자들이 그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비만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익보다도 돈벌이나 재부악탈을 더 중시하는 그릇된 관점과 입장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1984년 미국의 군사비는 2,653억 달러입니다. 빈민 구제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침략전쟁준비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간반역행위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할 데 대한 참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은 이처럼 그릇된 가치관념의 부당성을 밝히는 정확한 척도로 됩니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도 맞습니다. 세계는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발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익에 맞게 대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세계를 더욱 빨리 개조발전시켜 나가게 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이 밝힌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다음으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 데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삼아 세계를 개조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에서 자연의 힘이나 기계수단들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기본으로 보고 언제나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한다는 이 관점과 입장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원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고 세계를 개조하는 결정적 요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으로 능동자재하게 세계를 개조해 나갑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물질적 수단들도 세계를 개조 발전시키는 데 참가합니다. 전자현미경이나 전자계사기들을 비롯한 정밀기계들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 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또 자동차, 트랙터, 볼토저, 굴삭기 같은 큰 기계들은 사람의 힘을 대신하여 자연개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현대는 주로 최신기계수단들의 힘을 빌어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의 생산을 진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본주의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기술수단의 현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로 되고 사회가 위험천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태를 빚는 것은 기술수단을 착취와 억압에 악용하는 자본주의제도의 모순된 질서에 기인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게 이용되는 기술수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런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개조에서 사람보다도 기계수단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물질기술적 수단이라 해도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발전시키는 데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따르지 못합니다. 과학과 기계수단들이 발전하고 그 역할이 커진 것은 그만큼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수단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낳은 것이고 사람의 활동을 도와줄 따름입니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의 창조력입니다. 사람의 이 우수한 힘의 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 창조적 활동이라 합니다. 사람은 이 창조적 활동으로 세계를 웅이하게 개조발전시킵니다. 세계에 대한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이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한다고 가르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개조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도맡아 실현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도 여기서 구하고 복지국가의 질서와 한생의 행복도 세계 속에서 창조합니다. 애당초 세계가 없으면 사람도 그의 요구도 있을 수 없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 활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요구의 대상은 세계입니다. 세계 속에서 자주적인 요구가 인식과 개조활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계의 이치에 따라 땅을 가꾸고 산과 강을 다스렸고 근래에는 해저와 우주까지 정복해 나가면서 생활의 만년 기틀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그 주체가 사람이고 주위 세계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좇아 세계를 상대로 인식과 개조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주적 요구가 없는 사람의 활동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활동을 떠난 자주적 요구의 실현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를 무시하면 세계개조를 위한 사람의 창의를 분발시킬 수 없고 사람의 창조력이 약해지면 인식과 개조활동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를 대해야 사람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창조력을 동원하여 세계개조를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사람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개조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참된 이론적 무기로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관점과 입장을 지침으로 이 사회의 현실을 살피면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온갖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과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풀어 나가는 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된 노동계급의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바탕해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뚜렷한 관점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참된 지침을 밝혀 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실천행위의 원리와 참된 삶의 방식을 밝힌 것으로 됩니다. 참으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의 나침반이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매장할 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한국 현실을 깊이 파헤쳐 보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사상이론적 무기입니다.

<근현대 한국여성운동사>

▶ 식민지시대의 여성해방운동사(1910-1945)

여성학 연구팀(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던 3·1운동 이후, 여성들의 조직활동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여 여성해방운동으로 자리잡아 갔다. 일제가 표방한 개량적인 문화정치라는 공간 속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양적 팽창은 조선 여성해방운동론 정립의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여성으로 구성된 비밀결사 조직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몽운동의 수준에서 전개되던 여성 조직활동은 사회 구조적 인식을 갖게 되고,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해방운동은 질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3·1운동이라는 정치적 투쟁의 경험이 여성대중의 정치 의식화를 고무시켰으며, 동시에 민중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조직활동에 있어, 기존의 양반층 여성 대신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동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남녀동등주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20년대 초에는 민족주의 의식을 내재한 체 교육계몽의 방법을 통해서 여성의 자각을 일깨우고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기독교계 여성중심의 조직운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계 중심의 교육계몽운동은, 여성 노동자층의 확대와 민중운동의 고양에 따른 운동적 전망과 정치적 지도의 부재로 인한 이념적 한계에 봉착한다. 이러한 때, 새로운 운동의 이념으로 도입된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여성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운동을 전체운동의 부분운동으로 위치 지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여성해방운동론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성해방운동전망의 모호함과 고양되어가고 있는 민중운동에 대한 운동방침의 부재로 인해 벽에 부딪힌 기존 여성해방운동론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결성된 여성동우회는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한 여성운동가들에 의한 최초의 사회주의단체였다. 여성동우회는 이후 2~3년 동안 각 분파들 간의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반제항일투쟁과 여성해방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기독교계와의 세력결집을 모색하여 대중성 확보와 민족협동전선을 위한 근우회로 발전하게 된다.

근우회는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여성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전국적 여성대중조직이었다. 근우회 건설이후 3~4년 간은 식민지 여성해방운동론의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민족해방의 과제와 더불어 봉건적인 여성대중의 의식화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근우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1931년 해소되고 만다.

근우회 해소이후 여성의 대중조직운동은 지하화되거나 개량·친일화되며, 산발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이후 해방을 맞이까지 여성해방운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3·1운동이후 해방 전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한애국부인회 건설 이후 많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여성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1919~1927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전체 운동의 양적 발전에 따라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이 분파로 표출되면서 민족협동전선에의 요구가 고양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협동전선에서의 요구가 구체화된 1927년부터 내부 운동론의 변화와 일제의 파쇼적 탄압에 의해 협동전선이 붕괴되었던 1931년까지를 다시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여성해방운동은 근우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여성해방운동론을 정립하면서 전국적 여성대중조직을 건설하였던, 여성해방운동의 고양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1년 근우회 해소이후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십 수년 간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국내의 전체 운동이 침체화(또는 지하

화되고 개량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기독교계 여성단체의 친일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3·1운동 이후의 여성해방운동

1. 시대적 배경

3·1운동은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으로서 민족적 역량과 시와 대중 정치의식의 고양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졌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 민족적인 3·1독립운동에 직면하여 큰 타격을 받은 일본제국주의는, 종래와 같은 노골적인 무단통치를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하여 표면상 그 지배를 완화시킨다. 일제는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걸은 후, 육·해군대장에 한정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 임용에 관한 제한을 없애고 문관에게도 임용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실제로 총독은 1945년까지 일관해서 육군대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으나, 경찰력은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헌병·군대로 계속 존재했다. 교육정책에서도 일본에 준거한 교육을 보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이름 아래 조선인을 일본인에게 동화시키고, 일제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의 신문과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가 조선어로 간행되었지만 검열·삭제·압수·벌금·정간·폐간 등을 일상적으로 행함으로써 사상탄압을 가하였다.

또한 조선의 식민지체제로의 완전한 편입과 경제적 수탈 증대를 위해 본격적 식민지 경제정책이 수행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산미증식계획과 회사령 철폐이다. 1920년부터 시작한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가 표방한 '조선에서의 식량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조선농가경제의 향상과 진흥을 원하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1차대전 후의 일본에서 발생한 쌀 파동의 해결책으로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산미증식계획은 토지조사사업 후 조선 농촌 사회에 대한 자본의 침투와 농촌 자급자족경제의 화폐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일제가 원하는 식민지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회사령 철폐는 일제 독점자본의 본격적인 자본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자본의 진출과 함께 민족기업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들 민족 자본가들은 이후 일제에 의해 예측적으로 편성되면서 민족해방운동에 적대세력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정책 아래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했던 농민들은 한층 더 곤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들은 농촌 빈민, 화전민, 토막민으로, 또 도시의 공업노동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년대에는 농민들에 의한 소작쟁의가 빈발했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급증했다. 일제에 의해 장려되었던 방직·고무·선미·연초공장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층이 형성되었는데, 그들의 양적 성장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성적 학대에 저항하여 집단적·조직적 움직임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민족해방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 수탈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유입·보급되면서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운동이 자리잡게 된다.

20년대 초반의 부르주아 민족운동은 그 내부의 친일지향적 타협세력과 반일적 비타협 세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의 사회운동 범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소위 '실력양성론'이라는 민족개량주의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문화정치가 의도한 분열통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목적아래 대중을 결집할 수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확고한 지도이념이 갈망되는 속에서 20년대 초의 국내외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2년경부터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년대 초의 여성해방운동도 대체로 이같은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 아래서 여성단체는 개량주의적인 기독교계 중심의 여성단체는 개량주의적인 기독교계 중심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하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와 여성해방의식의 제기

1919년 3월경에 서울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인 반일국구운동을 벌여나갔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결성직후부터 집행위원의 거듭되는 체포와 투옥, 고문에 의하여 탄압을 받으면서도 21년 7월에는 조직을 재우, 통신, 교육, 출판, 선전, 강연, 복지, 사회 등 8부로 확장하고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은 상해임시정부와의 비밀 정보·자금의 전달, 문서의 배포 등 목숨을 건 활동이었다.

또한 1922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제국근로부인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표 김원경의 보고문에 의하면 전투적 비밀결사인 혈성단(血誠丹)이나 결사대, 문화적 대중계몽운동을 전개한 여자교육회, 여자청년연맹등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의 지부였다고 한다. 또 그 보고서에 의하면 22년 1월 현재 이러한 지부를 포함해서 총 회원 수는 3천 여명이었는데, 입회자의 계층구성은 기독교가정의 학생이나 부인이 약 4할, 나머지 2할이 상류층여성이라고 한다.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이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활동의 이념면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념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여성의 활동은 현재는 민족전체를 일본제국주의의 굴레, 자본주의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여성을 최후적으로 해방하는 생각은 방지하지 않는다……. 민족의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어도 조선여성 자신과 그 형제에 있어서는 활동이 끝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은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하여 조선여성의 완전한 해방, 남녀양성의 완전한 동권을 달성해야 한다.”

즉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미 인식하고 여성해방의 과제를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풀어나가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흡수한 회원과 종교적으로 개량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회원 등, 이시기의 사상적 혼재 상태를 반영 하면서 다양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여성해방운동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1920년 3월 창간된 「신여자」지를 시초로 하는 소위 「신여성」의 등장이다. 신여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거의 다 「민족적 관점을 결여한 여권주의」나 혹은 「성해방을 주장한 일탈자」라는 식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니헤석, 김일엽, 김원주 등 소위 신여성은 일본유학을 통하여 서구나 일본의 여성해방사상에 접하고 이것을 조선에 소개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의 자각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족, 사회, 민족과의 연관 속에서 주장한 김일엽의 글을 보더라도 신여성들이 사회적 관점을 결여한 여성해방만을 외친 것은 아니었다. 대한애국부인회의 이념과 신여성들의 등장은 일제의 강점 이후 단절되었던 여성해방사상의 재기를 의미한다. 비록 이들의 이념이 추상적이거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2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었다.

3. 기독교계 여성단체 활동의 전개

기독교계 여성들은 근대적인 지식과 교회조직을 바탕으로 1920년대부터 여자토론회, 여자청년강연회, 순회강연, 지방여자야학 등을 통하여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에 기독교 지식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야학을 세워 취학기를 상실한 가정부인에게 보통 상식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부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식, 문명사회에 합당한 각종 사상을 소개할 목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거나 여성친목을 도모한 사교적 활동 등을 하였다. 또한 보주·마산·밀양 의 각 여자청년회에서는 자작회(自作會)를 조직하여 토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토산애용을 추진시키기 위한 부인회도 각지에 설립하고, 실력양성주의에 입각한 민족운동을 벌였다. 1922년에 들면서 사회의 지적 분위기가 사회주의로 급변하던 시기에 기독교 여성계에서는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YWCA)」가, 다음해에는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조직되었다.

YWCA는 사회의 기독교화를 도모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품성 개발과 종교적 봉사정신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김활란, 김필례가 주도한 「하영회」를 기초로 신용우와 호주의 여자 선교사의 협조를 받아 조직된 단체이다. YWCA의 초기활동은 여성지도자들의 순회 강연 등을 통한 여성계몽과 생활 개선인데 이것은 민족의 자립경제를 위한 부인직업의 필요성·육아법과 가정생활개선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YWCA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복음을 통한 민족해방과 여권향상을 전파하는 한편 농촌계몽운동에도 주도하였다. 또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는 표면에 여성의 지위와 권익옹호를 내세웠지만, 기독교 윤리의 실천 운동적 성격이 보다 강했다. 이들 단체에서는 금주, 금연, 축첩제도 폐지, 공창 폐지, 폐풍일소, 오락 금지 등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통하여 애국적인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기회가 전무한 여성들을 각성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여성단체들은 비교적 온건한 교화 및 계몽운동을 통해 신앙심을 위한 교화로써 점진적인 사회의식 개조를 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여성을 가정으로부터 교회 내지 사회로 이끌어내는 데는 기여했으나, 일제 통치구조 청산, 민족주권 획득,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지 못했으며,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생활개선, 문자해독을 통한 여성들의 의식자각으로 활동의 방향과 영역을 한정시켰다.

4. 사회주의 이념의 도입과 운동의 전개

192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 사상을 흡수한 지식인 여성운동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산당이 조직되는데, 1922년 국내 부인당원도 약 30명이 있었고 부인당원 후보가 약 50명 있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계 여성해방운동은 「조선여자 고학생 상조회」를 단초로 하여, 여자 고학생들 간의 상부상조뿐만 아니라 여성계몽을 위해 전국순회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1923년 7월 경성고무 여공 파업 등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에 자극을 받아 정종명을 위시한 정철성, 오수덕 등이 1923년 말경부터 여성해방단체를 위한 조직활동을 벌여나갔다. 이들의 준비작업은 여타 사회주의 단체의 여성운동가들과의 연계 속에서, 1924년 5월에 박원희, 정종명, 주세죽,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 여성해방 운동단체인 「여성동우회」로 집결되었다.

「여성동우회」는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이념을 공유한 진보적 여성들이 종래의 미온적인 여성해방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여성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력을 확보하려 결성한 최초의 여성단체라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여성동우회는 최초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에 대한 연결고리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무산여성의 해방을 내세움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의 계급 운동적 성격을 표방하였다.

“여성의 해방은 결국 경제적 독립에 있다. 현재의 경제조직하에서 경제적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남자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운동은 무산계급 해방운동과 같은 것이며 현재의 제국주의 경제조직을 새로운 경제조직으로 변혁하는 운동이 아니면 안된다.”

동시에 「여성동우회」는 여성의 성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노예화에 대한 자각과 주체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권리 없는 의무만을 지켜오던 여성대중도 인류역사의 발달에 따라 어느때까지든지 그와 같은 굴욕과 학대만을 감수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게 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우리는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성의 압박, 노예가 되고 말았다. 저 무리한 남성은 우리가 가졌던 온갖 권리를 박탈하였고...우리도 잃었던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겠다.”

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동우회」는 보수적 인습과 체제가 온존하는 사회 속에서 식민지 경제구조의 타파와 여성(무산여성)의 해방을 표방하고, 재정난과 악전고투하면서 각 지방에 40여 개의 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교양에 주력하여 순회강연과 토론, 강좌 등으로 여성해방운동의 이념을

선전하며 신문·잡지 등 언론기관을 빌어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여자 중에도 특히 약한 자의 동료가 되어 여성노동자들을 방문하여 위안 음악회 등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독립, 여성해방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주체적 각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신사회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의 관계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무산계급의 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에 대한 투쟁의식도 「선언문」에서 보이지듯이 다분히 감정적이어서 과학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정립했다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여성동우회가 조직된 이후 화요회, 북풍회의 지도·후원아래 허정숙·주세죽 주도로 '경성여자 청년동맹'이 조직되었고 이와 대치되는 서울회 계통의 '경성여자 청년회'가 여성동우회와는 별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의 병립은 20년대 초 조선 사회주의 운동권의 정치적·이념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유입되었다는 초기적 혼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는 조직적 대립과 이념투쟁을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의 대중적 전개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민족협동전선론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III. 근우회운동-협동전선론의 수용

1. 근우회의 건설과 성격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분열, 사회주의계 내부의 분립 등에 따른 운동노선의 혼란은, 반제국주의 협동전선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시켰다. 더구나 코민테른의 '민족테제'와 중국의 국공합작에 영향 받은 국내 사회주의계는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민족협동전선론을 발전시켰다.

여성운동권에서는 1926년 3월에, 여성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운동 통일에 관한 건」이 결의사항으로 제출되는 등 여성해방운동의 통일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1926년 12월 경성여자 청년회와 경성여자 청년동맹의 합동총회가 열리고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의 통일조직으로 「중앙여자 청년동맹」이 설립되었다. 협동을 이룬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에서는 민족주의계 여성들과의 협동을 모색하였고, 1927년 2월 신간회 창립에 고무된 범 여성계는 드디어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계기로 근우회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김활란, 유각경을 비롯한 기독교계 16명, 황신덕, 이현경을 비롯한 사회주의계 10명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근우회의 이념과 조직을 구체화하여, 1927년 5월 27일 YWCA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로써(1)여성의 공고한 단결(2)조선 여자의 지위향상을 강령으로 하는 최초의 전국적 여성조직인 근우회가 건설된 것이었다.

민족협동전선론을 여성운동계가 수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건설된 근우회는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 여성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동전선적 여성대중조직이었다. 사회주의계는 도시 지식인 중심의 관념적 한계를 반봉건과제를 통해 극복, 대중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계의 내적 요구는 방향전환론 수용과 더불어, 사회주의계가 근우회 건설을 주도하게 한 동력이었다. 한편 기독교 중심의 여성단체들은 20년대 초반의 다양한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고양된 민중운동에 대응할 이념적 전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지방의 여성조직에 있어 심각한 침체 상태를 가져왔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간회 건설과 민족좌파의 신간회 참여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근우회 건설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여성운동계의 내적 요구가 전체 협동전선운동과 맞물려 근우회가 결성된다.

근우회는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차별 철폐 (2) 봉건인습과 미신타파, (3) 조혼폐지 및 결혼자유 (4)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5) 농촌여성의 경제적 이익 옹호 (6) 여성 노동임금 차별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지불 (7) 여성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 및 야업 금지를 포함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근우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929년 전국대회에서 다시 10개조 행동강령으로 수정된다. 첨가된 항목은 -교육의 성적차별 철폐 및 여성의 보통교육 확장 -노동자·농민 의료기관 및 탁아소 재정 확립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듯, 근우회는 여성운동의 당면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반봉건 과제가 여성운동에 있어 주요한 실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근우회가 여성동우회의 이념적 급진성-무산계급 해방과 여성해방의 동일시-를 극복하고 조선의 주·객관적 조건에 입각한 운동노선을 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당시 여성운동계가 협동전선론을 수용함에 있어 해결해야 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근우회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에 서울할 대략 네 가지 정도의 과제들은 사회주의계가 방향전환론을 수용하면서부터 고민되기 시작하여, 29년 「근우」지가 발간되기까지 점차적으로 완성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이념적 주도를 한 것은 사회주의계인데 이는 계몽적, 비정치적 운동에 주력했던 기독교계 여성단체에서 뚜렷한 이념적 제시를 할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먼저 사회주의계에 협동전선론이 대두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협동의 범위와 운동과제 설정의 문제였다. 「근우」지에 실린, '근우회 선언'에 따르면.

“.....여성의 각 층에 공통되는 당면의 과제가 발견되고 운동방침이 결정된다.....모든 분열정신을 극복...하는 것이 조선 여성의 의무이다. 조선여성에게 일그러져 있는 각종 불합리는...봉건적 유물과 현대적 모순이니...조선여성의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을 리 없다. 오직 반동층 여성만이.....낙오할 것이다.”

라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즉, 여성대중조직인 근우회 건설에 있어, 반동층 여성을 제외한 각계 각층 여성의 대동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당시 전체운동의 입장을 반영하였지만 한편 1926년 현재, 1만8천 여 명에 불과한 여공의 수와 전 여성의 8할을 차지하는 농촌여성이라는 현실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무산여성의 대부분인 농촌여성 대다수는 무의식 미조직 상태에 있었으며, 오히려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던 기독교 여성단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 있어 '봉건적 유물과 현대적 모순의 양 시대적 불합리'중 특히 봉건적 유물의 타파는 여성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근우회는 반동층을 제외한 전 여성이 반제반봉건 연합전선으로 단결 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전체 협동전선운동내 여성운동의 위상과 구체적인 조직형태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성별조직'으로서의 근우회 건설의 논리를 「근우」지에 실린 허정숙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조선사회의 객관적 조건이나 여성 주체적 조건에 있어...여성의 성별적 조직, 즉 성적 차별문제 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대중의 사회적 의식의 각성과 그 조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조선 여성운동의 사회적 조건이다. ...근우회는 원시적이며 자연생장적인 여성계몽운동을 표어로 한 조직체로서...출현하게 된 것이다.”

즉, 봉건잔재 속에서 여성대중의 낮은 의식수준은, 여성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화시키는 특수한 과제를 수행할 여성들만의 대중조직을 ‘과도적’이나마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몽을 표어로 하고 성차별 문제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로서의 근우회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여성대중조직의 독립문제는 당시 쉽게 합의를 본 부분이지만 이후 근우회의 해소가 논의되면서 노동·농민조합 여성부로의 편입이 주장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다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성별조직’ 독립에 부수한 신간회와의 관계 성정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우회의 입장은 1928년 전국대회에 인건에 잘 나타나 있다.

“.....동일한 목표 하에 단순히 고간의 사회적 조건의 상이 때문에 분열 조직된 근우회는 신간회와 직접 관계를 급속히 맺지.....신간회 내에 여자부 설치를 주장.....근우회 회원 전부가 신간회원이 되어.....근우회는 조선여성의 최고 기관으로 신간회에 단체적으로 가입.....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1. 근우회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 2. 비판의 자유를 가질 것.”

이처럼 조선여성의 후진성에 의해 성별조직으로 독립해 존재했었으나 동일한 목표를 가진 신간회 운동의 한 부분운동으로서 근우회를 설정했다. 따라서 신간회 내에 여자부를 설치하고, 독자성과 비판의 자유를 갖고 단체적으로 가입한 근우회와 조직적 연결을 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신간회나 근우회 자체의 역량상 실현되지 못한 채 해소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근우회 간부 또는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신간회에서 활동을 하여 근우회와 신간회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이념적·인적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우회가 민족협동전선이라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여성단체들의 처리문제였다. 이는 곧 전국적 여성 대중조직인 근우회의 지회 조직방식 문제와 연결된다. 실제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근우회 지회가 결성된 후 흡수되거나, 일반단체의 여자부로 편입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 특히 여자청년회의 해체문제는 지방에 따라 심각한 분류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제 반봉건 협동전선으로서 건설된 근우회의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근우회가 내건 활동방침은 “여성계몽운동”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여성의 주체적 조건에 입각한 현실적 과제로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계몽운동이란 용어는 각파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했으며 입장차이는 실제활동을 통해 점차 표출되어 갔다. 즉, 기독교계 중심의 단체들은 단순계몽운동 차원에서 머물기를 희망한 반면 사회주의계는 정치적 투쟁과의 병행을 요구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현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두었다. 이러한 이념적 통일의 부재는 이후 근우회 해소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이후 과제로 남기겠다.

이상에서, 근우회 건설과정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 근우회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근우회는 20년대 후반 사회주의계에 의해 주도된 협동전선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체 사회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 이는 반제 민족해방, 반봉건 민주주의의 과제를 신간회와 공유하면서 여성의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성별조직으로서 모든 여성의 단결을 표방한 전국적 차원의 여성조직 운동이었다.

2. 근우회의 조직 및 활동

근우회는 크게 본부와 지회들로 구성된다. 근우회는 위원회체제를 채택하여 매년 지회의 세력을 반영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고 기관인 전국대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본부였으며, 더 좁게는 서울에 머물면서 일상적인 부서 활동을 수행하는 중앙상무위원회를 본부와 칭한다. 따라서, 근우회 활동을 살피에 있어, 중앙상무위원회의 일상적인 부서 활동 내용을 몸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인적구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전국 조직인 근우회가 매년 지회의 세력을 반영하여 본부를 재구성하였고 지회의 성격과 중앙 진출은 근우회 활동의 성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무척 유의미하다.

먼저, 좁은 의미의 본부인 중앙상무위원회는 4개 부서로 이루어졌다.

첫째, 「선전조직부」는 근우회 결성 초기에 특히 중요하였는데, 매달 15일을 선전 일로 정하여 근우회 홍보와 재정상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초기 활동 이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교양부」로서, 근우회가 “여성계몽운동”을 표방한 만큼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회원간의 간담회나 쟁점이 되는 문제-예를 들어, 여성해방을 위해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나, 지식향상이 우선이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부인들의 지식 향상을 위한 부인 강좌 등을 개설하였다. 또한 초기 근우회가 주력한 지회의 건설을 돕기 위하여 「전국순회강연단」을 조직, 지회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29년 5월에는 「근우」지가 정철성에 의해 발행되었다.

셋째, 「조사부」는 근우회 운동 후기에 갈수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여공들의 생활실태와 파업진상, 각급 학교의 맹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근우회는 초기에 있어 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조직사업과 진상규명, 항의서 발표와 비판연설회 개최, 방문단 조직과 격려·지원활동은 근우회의 주요한 활동중 하나였다. 특히, 근우회가 정치운동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여학생운동이었다.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학생운동에 있어, 여학생들의 맹휴를 지원하고 지지·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여학생 맹휴에 대한 지원은 근우회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1930년 경성여보·진명 여학교의 만세시위 사건과 관계된 소위 ‘근우회’ 사건은 근우회 간부가 대거 검거·기소되어, 본부 활동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넷째, 「정치연구부」가 있었는데, 근우회의 정치적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인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근우회 1930년 현재, 46개의 지회로 구성된 전국 대중조직인 만큼 근우회 활동을 살피에 있어, 각 지회의 결성과정과 성격, 활동내용은 근우회 활동 전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서 근우회 성격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우회가 창립될 당시에는 서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본부를 구성하였고 협동전선적 배려를 하여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있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8년 지방 지회들이 급격히 결성되면서(28년 말 현재 36개 지회결성) 제2대 중앙집행위원 23명 중 52%인 12명이 지방 지회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78%인 18명이 사회주의계 인사로서, 초기의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 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좌파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성격변화는 첫째, 사회주의계의 영향력이 강한 지방지회들의 기반을 반영하는 것이며, 둘째, 기독교계 여성진영의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운동자세와 소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 김활란 등 몇 명의 기독교계 인사가 근우회에서 탈퇴하였으나, 입장 표명이나 방향 제시가 없는 개인적 탈퇴였다는 점에서, 협동전선으로서의 근우회의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29년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60여 개의 지회가 구성됨으로써, 지회구성에 집중되던 역량이 자기 운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모아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본부는 사회주의계가 압도하여, 본부 구성의 3/4를 차지했다. 따라서 제2회 전국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조약들이 결정되어, 29년~30년 초까지 근우회 활동은 최고조기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본부의 지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회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도연합회 건설과, 농촌 대중조직으로서 지회산하의 '반'조직이 건설되는데, 이것은 '본부-도 연합회-지회-반'이라는 조직구도로서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을 동시에 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상무위원회를 개편하여 농노 여성의 계몽과 조직을 담당할 '노농부'와 여학생운동을 지원할 '학생부'를 설립하였다. 이는 운동주체에 대한 자각과 함께, 당면 정치과제에 깊이 관여하여 투쟁성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여성계몽이라는 본래 목적의 강화를 위한 선전계몽활동을 강화, 선전부의 제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근우회 내 인식통일을 위해 「근우」지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한 번밖에 발행되지 못한 기관지 「근우」가 보여주듯, 이러한 시도들과 활동들은 30년대 초반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근우회는 침체상태에 빠진다. 그 후 근우회는 해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유아무야 해소되어지고 말았다.

3. 근우회 해소와 역사적 의미

30년대를 전후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파소화는, 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의계에 대한 '공산주의 사냥'은 당시 고양된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적극 참여한 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봉을 일으켰다. 여성해방운동계 역시 전술한 '근우회 사건'(30년 1월)과 관련하여, 중앙의 사회주의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되고 근우회 활동은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0년 12월 확대중앙집행위원회는 평양지회의 조선성을 비롯한 기독교계 여성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근우회 활동이 정치적 성격을 띄어 일제의 탄압대상이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체제내에서 여권확장을 꾀하는 개량주의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 탄압에 의한 운동의 침체와 본부의 성격변화와 더불어 좌익계의 운동노선 변화는 근우회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와 「9월 테제」에 영향 받은 국내 좌익계에 의해, 이미 개량주의적 색채를 노골화하고 있는 협동전선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었다. 신간회는 소부르주아 운동으로 비판되어 혁명적 노농조합운동을 위해, 1931년 5월 15일 전국대회에서 433으로 해소를 결의, 해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우회 역시 지회들을 중심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개량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해소론이 대두되었으며, 31년 4월 간도·용정지회와 신의주지회에서 먼저 근우회 해소를 결정하였다. 이후 해소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4차 전국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지회의 불참으로 개최되지 못한 채, 근우회는 해소에 대한 입장이나 이후 운동에 대한 전망 제시도 없이 해체되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근우회 해소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일차적인 원인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정책에 있지만, 운동주도 세력의 노선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근우회가 해소된 이후, 일제의 가중된 탄압은 국내의 공개조직운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좌익계는 해외의 독립운동에 합류하거나 지하화한다. 또한 기독교계를 비롯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점차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여 여성운동의 전개에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된다.

한국 여성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전국적 대중조직으로 반제 반봉건의 이념을 여성의 특수 과제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근우회 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여성 주체적 해방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초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전국적인 공개대중조직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근우회가 해체되자 이후 여성해방운동은 이념성, 조직성, 대중적 실천이 상호결합되지 못하는 침체기로 들어가게 된다.

IV. 전반적인 운동의 침체와 기독교계의 친일화

1. 30년대의 주·객관적 정세변화

1929년 세계공황으로 국내시장이 협소한 일본은 어느 자본주의 열강보다도 더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일본의 지배계급은 급격히 파소화하면서 경제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외전쟁 뿐이라고 간주했다. 일본의 파소화에 대응하여 일제는 한국에서도 파소테러 통치체제를 구축·강화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해외침략을 강화하기 시작한 일제는 후방기지인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이래의 문화정책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준)전시체제로 통치방식을 바꾸었다. 군사·경찰력의 증강을 비롯하여 일제는 고등경찰을 강화하였는데 이들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기존체제에 대한 변혁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가했던 최고 10년 징역을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하도록 바꾸었다. 신치안유지법이야말로 1930년대 조선 민중의 민족해방을 탄압한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또한 일제는 1931년 9월 총독부내에 '사법 법규개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압통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법령을 개악하였다.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 '사상범 보호 관찰령' 등은 국내의 모든 민족해방운동가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특히 사회주의 세력을 궤멸시키려는 의도였다. 일제는 파소테러통치를 가하는 한편 조선을 일본 독점자본의 약탈장으로 만들어 갔다. 세계공황으로 타개하기 위해 독점자본의 주도 하에 생산·판매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조업이 단축되었다. 여기서 발생한 일본의 유흥자본은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노동력이 있는 조선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1930년에는 노꾸지 재벌계의 흥남질소비료 공장이 건설·가동되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일본의 방직·제사부문 자본의 조선 진출이 현저하여 기존 공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1933년 동양방직 인천공장, 1935년 중연방직 광주공장, 1936년 중연방직 서울 공장이 신설되었다. 이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대조선 진출에 따라 1930~36년 사이의 조선에서의 공업 생산량은 2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개시되면서 그전과는 비교가 안될 파쇼테러통치가 자행되었다. 1936년 8월 총독으로 부임한 이나미는 황민화 정책과 대륙병참 기지화 정책을 기축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노동력의 국가통제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쟁의를 완전히 금지하고, 중학생은 물론 국민학생까지도 군사시설공사에 동원시키는 등 한국민 전체를 그들의 전쟁수행에 이용하였다. 전쟁 막바지에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만들어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자 수 십만 명을 강제 징집하여 일본과 조선내의 군수공장에 일하게 하거나 남양지방의 일선지구에 보내어 군인을 접대하는 위안부 노릇을 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황민화 정책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결성을 시발로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장기 게양, 천황에 대한 배려,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 반공방첩, 애국저금 등을 강요하여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연속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전개되었다. 30년대 민중운동은 직·간접적으로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비합법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코민테른 12월 테제의 방침에 따라 대거 공장과 광산, 농장, 어촌으로 침투해 들어간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농민을 의식화시켜 파업투쟁과 소작쟁의 등을 일으켰다. 또한 이들의 침투는 기존의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성격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생존권 요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급이익과 민족해방을 쟁취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각종 대중단체에서도 민족개량주의자이나 소부르주아지·부농·중요인들이 점차 축출되고 노동자·농민이 주력을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혁명적 대중운동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파쇼통치와 세계정세의 변동에 따라 더욱 지하화되거나 민족해방투쟁의 근거지를 옮기는 등 잠복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들은 잠복기를 통하여 민족해방을 항일투쟁과 지하조직활동의 두 측면에서 준비해 들어간다.

2. 민족해방운동세력으로서의 민중의 부각

1930년대 노동자계급은 일제의 군수정책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의식이나 민족의식이 크게 고양되었다. 공장·광산노동자들에게 있어서의 의식고양은 노동자의 집단화 증대, 독자적 조직건설에 기인하지만 1930년 이후 세계공황에 따른 임금인하, 작업단축에 대한 저항과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급진전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온몸을 마모시키는 장시간의 기아임금, 민족차별, 노동운동에 대한 파쇼적 탄압은 자본가와 일제통치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격분을 야기시켰다. 이것이 1930년대 조선인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일제와 타협하는 온갖 기회주의적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족해방운동의 선두그룹에 나서게 하는 객관적 조건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이 지하화하고 노동탄압이 심해지면서 노동쟁의 숫자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노동운동이 전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파쇼체제의 엄격한 탄압·단속강화로 오히려 표면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부산 조선방직·신흥 장풍탄광·평양 고무노동자 파업 외에도 같은 시기에 소규모의 파업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성·완강성·단결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노동자들은 규찰대 조직·파업기금·식량 비축 등의 합법 투쟁뿐만 아니라 시위·공장습격·농성 등의 비합법투쟁도 감행했으나 일제경찰·자본가 측의 탄압을 받아 대부분의 파업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여성노동자들도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반일 반자본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갔다.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고양과 투쟁의 조직성 및 전개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1930년 벽두에 여성노동자 운동 중 가장 획기적인 동맹파업은 부산조선방직 여공들의 파업이었다. 1929년 가을 조선 방직 공장 기숙사 남공들이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상락회'를 조직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무산시키려 했다. 회사측이 강제적으로 이 모임에 참가할 것을 서명토록 하자, 1천여 남녀 노동자들도 이를 거부하면서 ①민족적 차별 대우폐지 ②식사개선 ③남녀소년 아업 폐지 ④8시간 노동제 실시 ⑤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⑥직공들의 임금을 청부제로 할 것 ⑦벌금 제도 폐지 ⑧최저임금은 80전으로 할 것 ⑨임금인상 ⑩기숙사 직공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것 등의 13개조 요구조건을 내걸은 파업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 연설중 경찰이 들어와 서류를 압수하고 주모자 8명을 구속하자 이에 격분한 900여 여직공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으나 일제 경찰의 공세로 후퇴하였다. 이때 회사측과 경찰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여공들을 감금하였다. 11에, 감금당한 여공들은 ①구속된 동지의 석방 ②요구조건 수락을 다시 내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경찰에 빼앗긴 요구서를 다시 써서 회사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회사측은 경찰과 짜고 주동급 45명을 급료를 준 뒤 강제 귀향토록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려했다. 16일에 구속자가 석방되고 다시 요구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고 여직공 중 통근자 300명은 남자 파업단 사무소와 별도로 파업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구전을 각오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경찰과 함께 파업단 타도에 총동원되어 18일에는 주동 여직공 24명을 해고시키고 조업을 강요하였다. 19에도 여직공 16명이 해고되고 900여명은 계속해서 투쟁을 결의하였다. 20일에도 많은 해고자가 나왔고 거의 300명이나 되었다.

파업은 L장기화로 부산일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되자 부산 번영회가 중재를 나서서 직공들을 취업시켰다. 결국 21, 22일 계속 많은 직공들이 복귀하였으나, 그들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관철된 것 없이 패배로 끝났다.

1931년 강주룡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던 평양 평원고무 여공파업때는 800여 여공들이 조직적 투쟁성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이 파업투쟁에서 강주룡을 죽음을 각오하고 울밀대에 올라가는 단호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강주룡은 울밀대 위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성차별 임금과 민족차별 임금에 대해서 일제 자본가를 비난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이 울밀대 투쟁은 체공시간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 없는 최장시간이었다.

1931년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쟁의, 인천 직야 정미소, 평양 고무공장쟁의 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산당원의 지도 하에 전개되었다는 것과 공장점령, 단식투쟁, 옥상데모, 전차방해 등 신파업 기술의 등장이었다. 1932년 메이데이에 인천 조선성냥공장 남녀직공 365명이 임금 5할 이상의 인상과 8시간 노동제 실시, 경찰의 간섭반대 등 7개항을 회사에 요구하며 파업을 감행하였고, 1933년 5월 부산 조선방직회사 400명이 동료여공 수명이 불은격은 살포혐의로 구속된 것에 항의하여 동정파업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33년 7월에는 평양대동고무공장에서 작업단축에 반대한 직공 98명이 해고통지를 받은 데 대한 반대 파업이 있었고 10월에는 충남 제사회사 여공 260명이 부식불량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감행했고 식기와 음식물을 버렸다고 하며 11월에는 부산소재 6개

고무공장 800여 직공들의 임금인하 반대 총파업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전반기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첫째, 일본자본에 대한 조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 둘째, 일제의 탄압이 심한 만큼 대항에 있어서도 임금인상·처우개선 요구정도의 소극적 항쟁이 민족차별·경찰간섭폐지·검속자 석방·8시간 노동제 실시 등 노동자의 계급의식 발달로 적극적 항쟁으로 전화한 점, 셋째, 공장습격·자동차 파괴·자동차 앞에 드러눕기·경찰서에 물려가 구속자 석방 요구 등 다양한 파업전술 구사, 넷째, 1920년대부터 산발적이거나 몇몇 사업장에서 제기되었던 감독의 여공 능욕에 대한 해고요구·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반대·벌금제 폐지·소년공의 야업 금지 등 미흡하나마 일정정도의 여성해방의식을 담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격렬한 양상을 띠면서 고양되었으나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제의 탄압강화와 전시체제의 돌입으로 현격한 감소현상을 보인다.

3. 기독교계 여성단체의 친일화

교육·산업진흥에 의해서 민족의 실력을 향상하는 문화운동과 계몽선도의 성격을 가진 개량주의운동은 여성운동계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데, 일제 침략정책의 변화로 국내는 비상상태로 돌입하여 국내에서는 일제의 단체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취미와 친목을 위주로 하는 일부 활동만이 명맥을 유지하거나 종교나 계몽 및 친목위주로 운영되는 일부 친일단체만 남는다. 근우회 해소후 일제에 의해 검거되지 않은 여성들은 -김활란, 이숙중, 송금선, 유각경, 조기홍, 박순천, 황신덕 등-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기존단체를 폐합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친일을 보인다.

또한 조선 부인문제연구회, 부인서구 강연회, 애국금체회, 학병권유 부인 돌려반등을 결성하고 반사회, 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 여성근로보국대 등을 통하여 전쟁의식을 고취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미화하고, 창씨개명과 징병 및 학도병으로 출병을 권유하는 등 황국신민의 선전대로서의 활동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일제에 의해 지도자가 된 이들은 소위 일본의 국체를 인식시켜 신민된 자격을 갖게 하자는 국민정신작흥 운동에 앞장서는 친일 어용단체를 조직했다. 친일화된 여성단체를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여성운동의 대표격인 YWCA가 있다. YWCA는 초기에는 농촌계몽 등의 비정치적인 사업에 주력했으나 중일전쟁 발발후는 친일화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조선 YWCA는 세계연맹에 독자적으로 가입한 단체였으나, 38년 6월 세계연맹에서 자진탈퇴하여 일본 YWCA의 지부로 새롭게 가맹하였으며 황국 신민서사와 황거요배를 행하고 황국위문 등의 친일활동을 자행했다. 이외에도 친일 어용단체로는 대일본 애국부인회와의 연계아래 부인수양,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선문제 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을 제정하고 일제의 전쟁수행에 협조하기 위한 물자절약, 근조보국을 강요하며 시국강연, 순회 강연반을 통해 친일망국 사상을 주입하였다.

1937년 8월에는 애국금체회에서 금비녀, 금가락지까지 일제의 국방비로 환납하자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이들 단체 외에도 총후부인부대, 경성중등 여학교동창회 연맹 등의 친일 여성조직이 다수 존재했다. 이 사실은 여성해방운동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기와 그 후의 독재기를 거치면서 줄곧 관제성과 어용성을 갖게되는 시초였다.

V.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3·1운동 이후 해방전까지의 시기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부르주아지 민권운동에서부터 사회 변혁적 여성해방운동까지 각각의 여성해방운동이 나올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이념적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제반 사회운동의 이념·조직적 발전이 여성해방운동의 발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사회운동의 부분운동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독자적인 여성대중조직이 봉건제적 가부장적 굴레에 묶여 있는 여성대중을 의식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민족해방과 더불어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을 타파하려는 특수과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을 근우회 운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근우회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게 평가했다.

첫째, 기존의 연구가 근우회를 신간회의 단순한 자매단체 정도로 밖에 보지 않은 채 창립·해체과정도 신간회 결정 방향을 답습했다는 식으로 근우회를 잘못 평가했다. 그러나 근우회는 반제·반봉건의 이념을 여성의 특수 과제 속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수행했던 최초의 전국적 여성대중운동으로, 협동전선론에 입각한 조직운동임과 동시에 주체적 여성해방운동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근우회가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양자 연합이거나 기독교계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근우회는 초기부터 사회주의계 여성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결성의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기독교계는 여기에 호응하여 근우회에 가입하였다. 협동전선론적 배려에 의해 초기에 균형을 가졌던 본부의 중앙집행위는, 후기로 갈수록 사회주의계에 의해 주도되었던 지회세력을 반영하면서 사회주의계가 우위를 점하였다. 1930년대 초 근우회사건으로 본부의 사회주의계 여성지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본부에 계속 남아 있던 기독교계 여성지도자들의 개량화 노선에 대하여 지회의 반대 세력화 및 불신확산은 근우회 해체의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근우회 해소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강제된 면도 있으나 사회주의계의 운동노선변화와 지회의 주체적 대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근우회 해소이후 30년대 운동이 대부분 일제의 탄압 속에서 지하로 잠적해 들어갔고 사회주의계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노동자·농민과 결합되어 민중운동을 벌여나갔는지는 아직 사료 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우회 해체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적 평가는 후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 글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계급·민족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의식과도 관련하여 보았다. 이것은 첫째, 여성노동자의 양산이 일본자본주의 침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모순타파, 즉 민족해방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이것은 20년대 후반 30년대 전반 여성노동운동의 대일본(독점자본) 투쟁의 고양에서 확인된다). 둘째, 여성 노동자 내에서 민족적 차별반대와 더불어 남녀차별 임금·여공을 수행한 감독의 파면요구 등 산발적이거나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성차별 조항을 요구조건에 넣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역량성숙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각종 여성해방운동단체 창립은 1923년 경성 여자고무공장파업 등 여성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에 대해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념적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배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제 하 여성해방운동은 그 당시까지 강하게 남아 있던 봉건적 잔재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3·1 운동이후 질적으로 발전하여 대중운동의 확산과 여성해방이념의 정립 등 일정한 성숙을 보였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1)

- 해방이후 여성문제(1945년~1948년, 미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실태

해방이 되자 일제 하에서 반제 반봉건적 여성운동의 맥을 이어오던 여성운동 세력들은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이라는 중앙집권적인 전국적 조직을 결성한 후 각 도에는 총 지부를, 군·면에는 지부를, 리·동에는 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부총'은 여성해방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차원에서 총체적 해방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제 관계의 변혁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여성해방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반(反)봉건적인 민주개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이의 실현을 위한 정권획득 운동을 벌였다. 따라서 미군정기 여성운동은 곧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또한 '부총'은 조선공산당(남로당)(이하 조공)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여성 대중조직이었으며 좌익 정당과 사회단체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의 산하단체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부총'의 활동은 시기별로 볼 때 '조선공산당의 투쟁노선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총' 여성운동의 전개를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로 해방 이후 '신진술' 채택(1946년 7월) 이전까지의 시기로 여성 대중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고 합법적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 둘째로 1차 미소공위 결렬과 신진술 채택 이후로부터 1947년도는 노골화되는 미군정의 탄압과 부수 세력에 맞서 대중조직을 통한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이는 시기인데 여성운동도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합류하였다. 셋째로 48년 2·7구국투쟁 이후 대중조직을 통한 정치투쟁과 전투소속 중심의 폭력투쟁이 함께 구사되는 배합투쟁기로 들어가는데 여성운동 대중조직이 거의 마비되면서 남로당의 부녀부가 조직적 중심이 되어 단선단정 반대투쟁, 제주도 4·3항쟁, 여순 사건, 이후의 무장유격대 투쟁에 합류하였다. 각 시기별로 여성운동의 과제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대중운동의 활성화 시기

사회운동 전체를 볼 때 1945년 8월 15일부터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신진술을 채택하기 전까지인 1946년 전반기는 각 계급·계층의 대중조직이 결성되고 이 단체들이 '민전'이라는 통일전선체를 결성, 활발한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벌여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정치 세력관계에서 '조공'을 비롯한 좌익세력이 우익세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려고 했다. 좌익진영은 합법적인 투쟁노선을 견지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구를 다양한 대중조직으로 결집시키고 당의 지도와 결합된 다양한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세력을 배제한 통일전선 결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미국에 대해서는 소련과 같은 진보적인 국가로 인식하여 우의적인 관계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미소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미적 우익정권을 세우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복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 실현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부정하였고 1946년 초부터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일상화하였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이 시기 합법투쟁노선에 따르면서 다양하고 활발한 일상활동을 하며 여권단체와도 연대하여 여성권의 확보투쟁을 벌이고 통일전선에 가담하여 좌익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해 운동하였다.

'부총'은 문맹퇴치운동과 더불어 여성해방은 진보적 민주주의국가의 수립으로만 가능하다는 여성해방 이념의 선전·교육과 조직의 확대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여성권의 확보투쟁으로 공사창제 폐지운동, 정치투쟁으로 모스크바삼상회의 지지투쟁을 하였다. 각계각층 여성들의 경우, 여성노동자는 노동운동의 중요역량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농성·파업 등에서 투쟁력을 발휘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가정주부들은 전국 각지에서 쌀 요구 투쟁의 선두에 섰다.

(1) 여성문맹퇴치운동

해방이 되자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여성해방의 열기를 서울에서의 '건국부녀동맹' 결성과 함께 각 지방에서도 부녀동맹 지부나 부녀회 등의 조직 결성으로 수렴되는데 이들 조직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문맹퇴치 등 여성대중에 대한 교육이었다. '부총'도 대내적 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부녀대중의 문맹퇴치와 의식계몽이었다. 창립대회인 '부녀단체대표자대회'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지방에서 각자 강습소를 열고, 중앙은 교재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부총은 순회공연, 강연 등을 활발히 하였고 특히 '부총' 촌극대(홍종희, 문옥선, 남궁희)의 경기지방 순회는 민주주의 선전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계속 파견할 유 세대를 육성하고 지방에서 선출된 지도자를 모아 중앙간부로 육성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며 '부총' 서울지부 제2회 대회(1948.8.6)에서는 부녀교육기관 설치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여성대중에 대한 교육계몽을 위해 빈번히 부녀 시국강연회가 열렸는데 45년 11월 27일부터 '건국부녀동맹' 서울지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부총'도 1946년 1월 11일 "조선민족 통일과 시국에 대한 정당한 견해를 널리 일반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2) 공사창제 폐지운동

1) 이 글은 한국현대 여성운동사(1994, 이승희 지음, 백산서당)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공사창제 폐지운동은 '부총'이 여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한 운동이었다. '부총'은 1946년 3월 6일 하지 장군에게 '공사창제 방지결의문'을 제출했고, 5월 17일 군정법령 70호로 부녀자 매매 또는 매매계약금지가 공포된 후에도 인신매매 금지보다 근본적으로 공창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인신매매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이의 근본적인 폐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인신매매 금지가 실시된 며칠 후인 5월 29일에는 서울의 신정유곽 창기 8백여 명을 대표해 이숙자, 이태순, 김옥희가 '부총'을 방문하여 악덕포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고 더욱이 1946년 5월 28일 미군정 리치 장군이 법령 70호가 노예적 인신매매를 금지한 것이고 공창 폐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자 '부총'은 정당·사회단체·유지·명사 30여 명을 초대하여 공사창제 폐지대책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군정장관 리치에게 '공사창제 철폐요구건의문'을 각계각층 인사, 정당 단체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전 민족적 요구로 제출하였다. 8월 10일에는 '독립노동당' 부인부 발기로 '부총', '여자국민당', '애국부녀동맹', '독립축성애국부인회', 각 종교 부인단체 등 좌우의 여성들이 합동해서 '부녀단체총결속구제연맹'을 만들어 '폐창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입법원에서 1947년 8월 22일 공창폐지법이 통과되어 결국 1948년 2월 14일 공창제가 법률 제7호 발동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창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으므로 해서 창기연맹대표들이 시청에 항의서를 제출하며 후생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948년 1월 대구에서는 유곽의 창기 98명과 25명의 안내원, 28명의 식모 등을 대표한 12명이 경북도를 방문하여 공창 폐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부총'은 폐창운동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나 1947년 이후 활동이 축소되면서 더 관여하지 못했으며 '부총' 외의 폐창연맹 여성단체들은 공창 폐지에 앞서 '공창폐지대책위원회'에서 공창 폐지 후의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사적으로 2천여 명의 창기들의 교화뿐만 아니라 친딸로서 그들을 인도하려는 결의'를 하였을 뿐이다.

(3) 국제부인의 날 기념투쟁

공사창제 폐지운동과 함께 '부총'의 중요한 여성권익 확보투쟁은 국제부인의 날 기념으로 표현되었다. '부총'은 '3월 8일을 조선부녀해방투쟁의 기념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46년과 1947년에 3월 1일에서 8일까지를 부녀해방투쟁 기념주간으로 설정하였다. 1946년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전개하기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각 지부가 주체가 되어 각 우익단체와 합동하여 치르기로 하였으며,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이 주간을 통하여 "1,500만 여성의 정치의식 계몽 향상을 양양시키도록" 전국 각 지부에 지시·명령하였다. 방법은 선전을 위주로 한 전단·포스터·빠라·벽신문을 이용하고 연주·강연·음악회 개최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고, 특히 항일운동가 가족위안회 개최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3·8부인대회는 허기가 나지 않아 부인 위안의 날(3.6), 국제 부인의 날 축하식(3.8)만 거행되었다. 해방 후 처음 갖는 3·8국제부인의 날 기념식에는 참가 부녀 1,000여 명 중 대다수가 근로부인이었다고 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인 유명준은 "민주주의정권 수립 없이 1,500만 부녀의 해방은 없다. 민전 확대·강화를 위해 싸우자"는 개회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로 부녀운동 실천방침으로 "자유, 평화, 평등은 조선부인에게로! 조선부녀는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수많은 미조직 여성이 있는 공장으로 농촌으로 가 두로!"를 제시하였고, 둘째로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재고미를 즉시 배급하고 미국 수입을 인민에게 일임하라는 것이고, 셋째로 정당등록법령 즉시 철회, 넷째로 공사창제 폐지, 다섯째로 학원의 반동 암흑을 방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여성운동도 민전의 강화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대중의 조직화가 여성운동의 과제임을 제시하고 좌익정당을 탄압하는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 쌀 요구 투쟁

1946년 '부총'은 쌀요구 투쟁을 통해 여성대중들을 조직·동원하는 힘을 과시하였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통제와 배급제도에 의해서만 식량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미국식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매매·자유곡기제를 실시하자 각지에서 쌀값이 폭등했고 일반물가는 300%폭등하였다. 미군정은 자체조사로도 전망이 암담하자, 1946년 3월에 원래의 계획을 어느 정도 폐기시키고 미군정 감시에 미국의 수입과 배급제도를 재실시한다는 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그 해 5월에도 일제 하에서 받던 배급의 반박에는 식량배급을 못받게 되자 기아상태가 절정에 달하게 되어 아사자가 속출하자 각 정당은 식량대책안을 발표하였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전국에서 '쌀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부총'은 1946년 3월 27일 주부좌담회를 개최하여 각 동을 대표한 주부들로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서의 쌀배급 데모를 이끌어 미군인 시장실까지 들어가 교섭하기도 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쌀 요구 투쟁에 여성들이 앞장섰다. '부총'은 여타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도시에서는 소시민, 노동자부인, 농촌에서는 농가부녀를 묶어내어 쌀 요구 투쟁을 했으며, 10월 인민항쟁에서는 쌀을 요구하며 앞장서 투쟁하였다.

(5) 여성노동자 투쟁

여성운동의 조직적 구심적이었던 '부총'의 조직 근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각 공장, 직장의 반과 각 지역의 리, 동 분회였다. 즉, 노동여성과 농가, 도시의 부녀가 중요 조직대상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여성운동의 핵심역량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의식이나 조직력, 투쟁력에 있어 타 계층 여성들에 앞서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전평' 조합원의 25%가 여성으로서 전평원 574,475명 중 143,619명이었으며 '전평'은 일반행동강령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불, 산전산후 2개월 유급휴가, 탁아소, 수유소, 환착소 설치"를 포함시켜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했으며 조직적으로는 부인부를 두고 부장에 20년 경력의 여성노동자이며 '부총'의 중앙집행위원인 허균을 임명하였다.

1946년 4월 '전평'의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는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한 부인부 강화와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연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회의는 현 하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부인노동자에 대한 활동이 미약하였음을 지적하고 급후 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개 투쟁에서 부인노동자의 영웅적 진출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그 지위의 중요성을 확인케 하며 전체부인운동에 있어서의 주동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합 각종 기관에 있어서 부인부를 강화하여 부인노동자의 특수한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여 민주주의적 일반 부인운동과 긴밀한 연락 하에 민주주의적 정권 수립에 적극 참가를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을 결정한다.

1946년 8월 '전평' 부녀회장 허균은 '전평'의 여성관계 강령에서 더 진전된 "① 공장주는 부인노동자에게 1개월 1차 월경시에 가제, 솜, 버선감을 무상분배하고 5일간 유급휴가를 실시하라. ② 부인노동자는 산전산후 4개월 간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③ 공장 내의 노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부인병에 대한 의료시설을 완비하라" 는 모성보호에 관한 요구를 강화하였다.

1946년 '전평'이 여성노동자 조직사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더 진전시키는 것은 해방 직후 여성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의 분출과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이 밀받침된 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운동이 고양되면서 생산기관의 점수, 관리와 생활권 보장이 라는 두 가지 문제가 노동운동의 중심과제로 제기되어 '전평'이 결성되기 전에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조선비행기, 경성전기의 경우는 대규모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경성방직의 경우는 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해방 후 가장 먼저 발생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경성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해방이 되자 8월 30일 종업원대회를 거쳐 노동조건 개선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① 야근 철폐, 8시간노동제 실시, ② 직원·공원 간의 물자 차별배급 철폐, ③ 식사개선, ④ 오락· 위생시설 완비, ⑤ 면회 자유, 면회인 숙박사 설치, 기숙사 개선, ⑥ 일년 분의 임금과 상여금 지불과 장차의 생활보장, ⑦ 교육시설 완비, ⑧ 공장관리는 공장관리위원회에 맡기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간부들을 상대로 교섭한 결과 야근 철폐, 8시간노동제 실시 등 몇 가지 조건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장인 김연수는 원료·식량부족을 이유로 하여 공장을 휴업하고 쟁의 지도자 5명을 해고하였고 9월 25일에는 미군 다수가 공장에 투입하여 공포를 발사하고 돌아갔으나 여성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의 운영 하에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자발적 조업에 들어갔다.

경성방직 같은 대공장의 여성노동자들뿐 아니라 1945년 말 영등포 동면섬유 여성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하여 요구조건이 전부 수락되는 승리를 하였다.

① 최저임금제 실시, ② 8시간노동제 실시, ③ 의료·오락·후생시설확충, ④ 성·연령을 불문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획득, ⑤ 매주 공휴일 실시, 임금 전액 획득, ⑥ 여자 생리를 위한 월 5일간 휴가제 실시, ⑦ 상여금 지불, ⑧ 외출·퇴사의 자유, ⑨ 상병 기간 중 임금 전액 지불, ⑩ 18세 이하 노동시간 6시간제 실시, ⑪ 공장 내 사택에 주둔한 미군 즉시 이거 요구(잠시 보류), ⑫ 단체 계약권 획득.

동면섬유의 투쟁은 요구조건을 모두 전취했다는 것 외에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요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리휴가 5일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사 상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946년 5월의 인천 동양방직 쟁의는 "인천동방의 쟁의는 기업가의 태업, 생산파괴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산업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반역이라는 점,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연약한 소년소녀공이라고 할지라도 민족을 위하고 계급을 위해서는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힘을 가졌다는 점, 경인지방에 있어서의 각 공장의 투쟁 중 가장 다수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따라서 '전평'의 적극적 지원뿐 아니라 각 사회운동단체의 성원과 격려가 잇따랐다. 인천평의회는 김인순과 '부총' 인천지부의 김정희는 쟁의단과 침식을 같이하며 지원하였다.

인천동양방직의 8백여 여성노동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도 한 달 쌀값도 안 되는 9백원 정도에 불과한 임금과 외출이 금지된 기숙사에서 수수밥 한 덩이로 연명하는 생활을 참다 못하여 쟁의에 나섰는데 공장장은 14명을 해고하고 트럭으로 실어다 버리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려고 동료들이 트럭을 붙들고 몰며 매달리자 소독약을 물에 타서 30분간이나 펌프로 물을 쏟아 부었으며 5월 1일에는 인천시청에 400여 명의 노동자가 몰려가 호소하자 시청에서도 소방호수로 물줄기를 쏟아 부었다. 그 후 교섭에 의해 공장에 들어갔으나 공장에서 쫓겨난 400여 노동자들은 상경하여 '전평'사무실에 머물면서 반도호텔 근처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였고, '전평'과 쟁의단, 당국과 회사측이 교섭한 결과 피고자 즉시 석방, 해고자 즉시 복직,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노동조정위원회에 붙일 것, 노동자들은 즉시 내려가 작업할 것을 합의하고 공장으로 돌아갔다. 동양방직 노조의 노조측 교섭대표였던 김정애는 47년 2월 16일 열린 '전평' 전국대회에서 부인부 차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천 동양방직의 쟁의는 탄압의 강도와 이에 굴하지 않는 수백 명의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 이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막대한 지원, 요구조건의 관철이라는 점에서 미군정기의 중요한 노동운동이었다. 동양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1947년 전평의 메이데이 행사에서 섬유노조 대표 이재희가 선언했듯 "어리고 여자라도 투쟁할 줄 안다"는 투지를 갖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그 후 1947년 9월 총파업, 1947년 3·22총파업에 남성들과 함께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평'조직이 거의 파괴된 후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어졌다.

(6)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투쟁

'신진술'로의 전환 이전에 '부총'의 정치활동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1945년 12월 28일 3상회의 결정에 대해 조공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을 바꾸어 1월 3일 민족통일자주독립촉성 시민대회를 열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선언을 하자 전평·전농과 함께 '부총'도 여성들을 이 대회에 동원시켰으며 1월 7일에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월 23일에는 200여 개 단체의 30만 군중이 참가한 미소 양국대표 환영을 위한 시민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총'은 며칠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조선공산당의 입장이 변화함으로써 혼란을 겪는 여성대중에 대한 설득을 위해 3상 결정 지지에 대한 선전·해설작업으로 선전배라, 벽보, 강연회, 가두연설 등에 치중하였다. 4월 11일에는 '소미공동위원회 부녀좌담회'를 열어 박진홍, 김원주, 구무선 등이 연사로 나와 "부녀의 해방을 높이 부르짖으며 앞으로 수립될 임시민주정부에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부녀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준 애국적 민주주의자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 좌담회에서는 부녀관객의 긴급동의로 "회의 이름으로 소미공동위원회에 정부 수립에 대한 부녀의 요구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실행을 주축에 임하였다."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부총'은 "그 책임소재가 민주위원의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책동에 속지 말고 3천만 동포는 민주정부 수립에 매진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46년 초 소위 탁치 논쟁은 '반탁은 곧 우익, 찬탁은 곧 좌익'이라는 입장으로 좌우익이 뚜렷이 분화되는 기점이 되었는데 여성운동에서도 이미 각기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좌우익 여성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찬탁과 반탁 논쟁을 기점으로 보다 분명해졌다. 1차 미소공위 결렬 후 미군정은 좌우합작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독립촉성애국부인회'에서는 그에 따라 '부인부터 좌우합작'을 하자면서 '부총'에 3개 항목의 합동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부총'은 근본적 원칙이 다르면 합동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다. 한편 '부총'은 1946년 7월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이 발표되자 토지개혁과 부녀, 노동법안과 부녀의 관계를 해명하고 선전했으며, 좌우합작과 입법기관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 '부총'은 반동테러로 희생당한 동지의 원호와 특히 그 가족의 위문·구조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1946년 여름 대수해에는 전 부총원이 참가하여 조사대·구호대를 편성하여 파견하고 모금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벌였고 각 지부에 수해동포 구제에 전력을 다하지는 격문을 보냈다. 서울 시에서는 수해구제 임시위원회에 참가하여 연대활동을 하였으며 농번기 때는 농촌부녀 원조사업으로 이동 원조반이 출동하여 모내기를 돕고 간이탁아소를 개설하는 등 대중사업도 전개하였다.

2. 전면적 정치투쟁기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지방에서는 좌익 제거작업이 활성화되며 서울에서도 공공연한 탄압이 이루어져 정판사 위폐 사건, 해방일보 정간, 대중단체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좌익세력 탄압과 동시에 좌익세력을 분열시키고 미군정에 대한 일반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도입법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는데 '조공'도 미소공위 결렬 후 미군정의 좌익 제거작업의 본격화와 이승만이 이끄는 '독촉중앙협의회' 산하의 극우파 청년단체나 폭력단체의 테러가 전국에서 감행되자 이전까지의 합법투쟁노선을 포기하고 정당방위의 역공세인 신전술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신전술은 미군정과 극우단체의 테러에 대응하여 실력으로써 이를 저지하여 조직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대중시위를 조직하여 실천함으로써 미군정의 실정을 폭로하는 한편, 미소공위를 재개하라는 압력으로 공위를 재개시킴으로써 삼상회의안을 관철시켜 민주주의적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선이었다. 1946년 7월 신전술 채택 이후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탄압에 맞서 좌익세력은 대중조직을 통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게 된다.

신전술은 총파업과 대중시위운동으로 구체화되는데 전국 총파업은 '전평'이 주도하였고 전국적 시위운동은 대개 '민전' 주축로 행하여졌다. 9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 인민항쟁 이후 '민전'은 12월 29일 삼상결정 1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과 북한에서 한 제반개혁을 남한에서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군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1947년 초 미군정과 극우 테러단체는 '전평' 지도부와 좌익인사를 체포하였고 좌익단체에 대한 테러를 가하였는데 '민전'은 3·1기념 시인대회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조직하였으며 곧 이어 미군정의 탄압과 테러에 대항하면서 공위 속개 촉진을 위한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인 3·22총파업을 실시하였다.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대회는 서울 남산에서 30만 명이 참가하였는데 삼상 결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각종 개혁 실시를 요구하는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미군정의 공세에 대처하였다. 1947년 5월 21일 미소공위는 재개되었으나 이미 미소냉전은 악화되었고 미국은 남한 단정수립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으며 미소공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소공위 교착상태 후 군정 경찰의 테러는 극심해져 '민전'이 주축한 '7·27공위 경축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촉진'을 위한 인민대회를 기점으로 미군정은 좌익 제거작업에 직접 나섰다. 미군정은 이날 공위 성공 지지연설을 한 '직맹' 대표와 '여맹' 대표를 체포하였으며 민전이 준비하던 '8·15시인대회'를 금지시키고 좌익 정당과 사회단체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좌익인사를 대량 검거하였다. 각 지방 '민전' 간부들, '남로당' 간부들, '전농', '여맹', '협조', '문학가동맹'의 간부진 6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허헌을 비롯한 10여 명의 간부가 지명수배되었다. 미군정은 좌익 정당·사회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좌익의 거의 모든 활동을 봉쇄·탄압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남한단정 수립정책을 전개하여 47년 9월 23일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을 가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민전'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물론 신진당, 민족자주연맹결성위원회, 민중동맹 등의 중간파 정당·사회단체들은 양군국 동시철폐안을 지지하면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7년 10월 17일 제2차 미소공위가 완전히 결렬되고 10월 30일에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 대조선위원단 파견안이 가결되었다. 1948년 1월 15일 '민전' 중앙위원회는 양군 동시철폐 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인공'을 수립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남로당은 폭력적인 2·7구국투쟁을 계기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한 배합투쟁기로 전환하였다.

'부총'은 신전술 채택 이후의 정치투쟁기에 독자적인 정치대회·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민전' 산하단체로서 '민전'과 보조를 맞추어 담화발표, 대회개최, 대회에서의 여성동원 등에 활동을 집중하였다.

'부총'은 1946년 8월 1일 위폐사건 공판에서 경관이 발포 살상한 사건에 대하여 전 여성이 통분한다는 담화를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하였고, 8월 5일에는 서울지부 제2회 대회 결의사항으로 ① 조선주둔 미군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 ② 8·15를 기하여 테러의 근절과 피검된 민주주의 지도자의 석방운동을 전적으로 전개할 것, ③ 북조선의 노동법·남녀동등권 등 민주개혁을 실시한 북조선 지도자에게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1946년 8월 15일에는 8·15 기념포스터 작성, 출판사업, 전재동포 원호 등의 사업을 계획·준비하였고 8·15를 기해 구금·투옥된 민주진영의 지도자의 제1석방과 테러근절 요구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8월 10일 미국이 남조선에 차관 2천 5백만 불을 설정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전' 사무국에서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차관 설정은 불가하다는 성명이 나왔고, '부총'도 "조선 반식민지화와 상품시장화의 일보를 1천 5백만 조선 부녀를 대표하여 절대로 거부하며 반대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1946년 12월 10일 '부총'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도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촉진 메시지와 모스크바결정 총체적지지, 즉시시행 요구, 애국지사 석방 등의 결의를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하지 중장에게 전달키로 결정"하였다. '부총'은 1947년 1월 11일 미군이 호남성 안에서 조선 부녀 3명을 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미군정에 엄중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담화문·결의서를 수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2월 15일 '부총' 제2회 전국대회에서 '부총'은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개칭되면서 조직 확대를 모색하였으며 1947년 3·8 국제부인의 날 기념대회에서는 테러근절책 확립요구, '민전' 강령 지지·실천, 차관 반대, '전농'의 토

지게적인 절대 지지와 국제민주여성연맹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3월 20일에는 러치 장관이 발표한 보통선거법 초안에 같은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문맹자, 5년 이상 체형자에게는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자 전재민, 근로인민과 부녀자를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였고, 3월 23일 '남녀평등권 법령'을 미군정청에 제출하였다. 4월 17일에는 유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수명의 대표가 하지 중장을 방문하여 귀임 환영인사를 하면서 삼상 결정에 대한 확고한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설을 반대해준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① 남녀평등권 법령을 곧 실시할 것, ② 탄압을 일소하고 민주주의 부인운동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것, ③ 테러 근절, 특히 부녀에 대한 잔학한 폭행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맹'은 1947년 5월 미소공위 재개 이후에는 '공위 수호와 임정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중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면서 성명서 발표가 주된 활동이었다.

5월 22일에는 정철성, 조원숙이 '여맹'의 대표로 서울시 학무고 고문 마틴을 방문하여 메데이아에 참가한 학생을 정확·퇴학시킨 학교 당국의 처사는 일제 식 교육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을 복교시킬 것을 언명한 마틴의 성명에 사의를 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과 8월에는 "공위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남녀평등권법을 실시하는 민주개혁할 수 있는 인공수립을 맹서"하는 담화를 시작으로 7월 21일에는 공위의 미국측 대표 브라운 장관에게 협의대상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고 민주임정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는 서신을 전달하였고 7월 28일에는 "남녀평등권법 실현할 임정 위해 손잡고 싸우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5일에는 공공연히 삼상결정 파괴의 양면전술을 집행하고 있는 반탁투위 산하 단체들을 공위 협의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것, 8월 12일에는 "삼상결정은 내정간섭이라는 한민계 14개 단체 서한은 비열한 행위"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8월 12일 저녁부터 13일 낮까지 서울전역에 걸쳐 좌익인사들과 '민진'회관을 비롯하여 산하 각 정당·단체회관에 대한 일제 검색검거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7·27 미소공위경축 임시정부수립촉진인민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8·15 2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부회장 중 1인이었던 '여맹'의 위원장 유영준이 검거되었다. 이에 '여맹'은 "8월 폭압으로 171명의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검거되었으며 유 위원장은 60의 고령으로 3개월이나 갇혀 있었고 부위원장 정철성은 구류 29일을 받았고 그 외 간부들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류, 벌금형, 체형을 받았다. 또한 서울 시내에서만 50여 명의 여성이 테러를 당하였으며 서청, 족청 등 테러단이 본 동맹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가족 중에 좌익 정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구타, 납치, 사발, 낙태, 강간등의 야수 같은 폭행을 한 예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여맹'에 대한 우익세력의 테러도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여맹'은 성명서 싸움으로 미군정에 대해 정책시정과 요구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표면상으로는 미군정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설정하면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었다.

3. 비합법 여성운동의 시기

1948년 2·7구국투쟁 이후 5·10단정반대 투쟁기는 대중동원에 의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이 병행된 배합투쟁기였다. 2·7구국투쟁은 전국도시에서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대중시위를 학생들은 맨휴를, 농촌에서는 농민시위대가 미군정 경찰기관을 습격하는 민중봉기가 있었다. 이후 남로당은 각 지방 당부별로 야산대를 조직하여 경찰기관, 극우단체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1948년 3월 22일에는 3·22총파업 1주년 기념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단선단정 반대 봉화, 시위, 맨휴 등 단선단정 반대투쟁에 돌입하였고 5월에는 5·10선거를 파괴·파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선거 실시 전까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관서 습격, 파괴, 방화, 경찰관·선거관리위원·우익요원 암살, 통신망·철도파괴 등의 폭력투쟁을 실시하였으며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무효화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948년 4월 19일에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가 평양에서 열려 '민진' 산하단체들뿐 아니라 모든 단선반대 세력들이 결집되었다. 연석회의에서는 남조선 단독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달리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10선거 실시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자 1948년 6월 29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가 열려 남조선에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선거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5명에서 7명의 대표들을 해주에 모이게 하여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그 회의에서 360명(북한은 212명)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민진'은 7월 15일부터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할 각 지방대표들을 선출하였으며 산하단체는 이들 대표를 지지한다는 서명투표로서 연판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진'에서는 1,020명의 대표(선정은 1,080명)을 8월 21일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보냈으며 해주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선정되고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회의를 열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전개된 '여맹'의 활동을 다음과 같았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독자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합법 당조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여성운동은 곧 비합법 당활동이었기 때문에 2·7 구국투쟁과 5·10 단선반대투쟁, 그 이후의 투쟁에서는 여성운동의 영역이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2·7 구국투쟁은 1948년 1월 8일 유엔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오자 그에 대한 배경 파업을 필두로 시작되었는데 서울, 영등포, 대전, 대구, 군산 각지에서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으며 철도 기관구에서는 기관차 40여 량이 파괴되었다. 노동자들의 뒤를 이어 농민, 사무원, 학생들도 유엔조선위원회 반대, 망국 단선단정 반대, 양군 즉시 철수 등을 외치며 시위, 동맹휴학 빠라살포 등을 하였다.

2·7 구국투쟁후 3·22 총파업 1주년 기념 총파업에서 '여맹'은 "남조선 8백만 전 여성과 더불어 이 구국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참가하여 전 인민과 전 여성의 요구를 대표한 이 파업의 요구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공동투쟁 할 것을 성명"하였다.

5·10 선거 반대투쟁은 남북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된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가 지도하였는데 위원회는 공장, 직장, 학교 등에는 파업, 동맹휴학, 데모, 아지프로(선전선동), 생산기관 파괴를 지시했으며, 농촌에는 부락인민대회를 개최하고,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행정기관에 몰려가 식량요구투쟁을 하며, 관공서 습격으로 치안을 마비시킬 것 등을 지시하였다. '남로당'은 엄격히 심사한 당원들로 구성된 무장, 별도대인 선행대를 조직하여 경찰지서·관공서 습격 등 5·10 선거 파괴를 위한 폭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선거가 끝나자 5월 18일 '여맹'은 '전평', '남로당', '교육자협회'와 마찬가지로 선거 무효로 선언하였다. 2·7 구국투쟁과 5·10 선거 반대투쟁은 전술상으로 볼 때 폭력과 비폭력의 배합투쟁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행동대가 조직되고 지방에서는 무장부대로서 야산대가 조직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

수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당 활동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무장부대인 아산대는 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1948년 제주도의 4·3항쟁과 여순 사건을 계기로 완전한 비합법 투쟁으로 전환하였고 무장투쟁이 유일한 전술이 됨에 따라 호남 유격전구, 지리산 유격전구, 태백산 유격전구, 영남 유격전구, 제주도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다.

여성들은 유격대 활동과 같은 무장투쟁에 여맹 조직단위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당조직으로 참가하였으나 여맹원들은 유격투쟁 곳곳에 참가하고 있었다. 1949년 말 태백산, 영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1950년 2월 청도, 경산, 영천 유격대에서 생존한 사람은 30명 정도였는데 도회지에서 올라온 여성대원들이 “너무나 힘없어” 죽어갔다고 하며, 증언에 의하면 6.25이후 빨치산 조직에 여맹 출신의 여성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1951년 9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전북도당 산하 4도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던 김문현의 증언에 의하면 유격대원 중 여성대원들도 3분의 1 정도였으며 주로 모퉁(원호)사업과 선전사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회문산에는 여성중대가 있었는데 여성중대는 선전대 역할을 하면서 금산골에 위치한 후방대에서 옷을 만들거나 밥을 짓기도 하였지만,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보초로 경계근무를 맡거나 전투에 참여하였다.

빨치산 생활 중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행군 및 전투를 치러야 했으며 여자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여성대원들은 주로 여맹 출신이거나 의용군 출신으로 투쟁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순창군 여문산에 주둔했던 기포병단에 입산한 여성들은 대개 간호원, 문화요원, 통신보조원이었으나 남자와 똑같이 보급투쟁을 다니고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곡성군에서는 20여명의 여자가 입산하였는데 구례군 간전면 여맹원이었던 양봉순은 비술산에서 이현상과 함께 싸웠는데 처음에는 취사부였으나 남자보다 우수한 전투군으로 인정받아 대대장까지 하였으며 영웅칭호를 받았다. 남부군에서는 주로 취사, 빨래를 담당하던 여성대원들이 군당세포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으며 실바늘을 여성들에게 빌리러 다니는 군당 선전부장은 여성을 멸시하는 봉건잔재가 남아있다는 공개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보통 남성들이 여자보다 신체적 조건상 전투에 더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아산대에 여자가 있으면 토벌군이 끝까지 추격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시정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전북에서 일심군 여맹 부위원장이었던 구복순은 1948년 남편이 여순 사건 당시 예비 검속으로 체포되어 사망한 후 여맹활동에 나섰는데 1950년 청운산 비트가 발각되자 수류탄으로 자폭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유방 한 쪽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토벌군에게 생포되어 소나무에 매달려 찢겨 죽었다고 한다. 1946년 전주교도소 탈출사건으로 사망한 문병학의 부인인 박금옥도 남편이 사망한 후 상복치마를 입고 활동에 나섰으며 1950년 입산하였다고 한다.

▶ 현대의 여성운동(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²⁾

1. 여성운동의 침체기(1950, 60년대)

1950년대의 활동

미군정기의 여성운동 과정에서 좌익과 중도파가 소멸됨에 따라 그 이후의 여성운동은 반제·반봉건적 여성운동의 흐름이 단절된 채, 일제 하 친일적인 교육·계몽·여권 운동과 미군정기의 친미적이며 반공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이 맥을 잇게 되었다. 따라서 운동은 자연히 체제 유지적이고 친미적이면 공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대한부인회와 같은 관련단체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대한부인회는 조직의 결성에서부터 정비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주로 여성에 대한 반공 교육과 선전 등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대한부인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 문제 해결보다는 친여단체로서의 활동이나 봉사·취미 차원의 활동에 머물렀다. 특히 이승만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권이 더욱 밀착되어 1958년 대한 여자청년단과 같이 자유당의 기간 단체가 되어 버렸다.

4·19 혁명 직후 대한부인회 등 여성단체의 간부들은 부정선거 혐의로 투옥되었으며, 5·16이후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체되면서 여성단체도 모두 해체되었다. 이후 여성단체 활동은 1964년에야 재개될 수 있었는데 대한부인회는 한국부인회로 개칭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때 여성문제연구원(1962)이 설립되었다. 여성문제연구원은 황신덕, 박순천, 이태영, 이희호 등 17인의 발기로 발족되어 여성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시도하였다.

남녀쌍벌죄 적용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며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위원회를 조직하여 계몽과 여론에 힘을 썼다. 1950년대 후반에 오면서 가정법률상담소, JOC(카톨릭 노동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여성의 법적 문제 혹은 노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전문직 여성들의 친목단체인 여기자클럽, 여성항공협회 등 무수한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1959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되어 여성운동의 횡적·종적 연결을 도모하려 하였다.

1960년대의 활동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화와 사회 분화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단체활동의 요구로 이어져 2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주로 서울에 기반을 두었고 성격과 활동 방향은 보수적이고 안이하였다. 조직의 취지를 보면 일반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및 국가 발전을 위한 반공·방위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강압적으로 집권한 박 정권의 안정과 연장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한 상태에서 잠재해 있는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체의 조직적 기반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나 재정적 기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며 특히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정권과 야합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3년부터 전개되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성 대다수의 인식을 고양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청원이라는 방식을 통한 지위 향상운동의 차원에 머물렀다.

2) 이 글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펴냄. 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2 여성운동의 새로운 도약(1970년대)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1970년대는 50, 60년대와는 달리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60년대 이래 수출 일반도의 파행적 산업화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심화·확대되면서 여성운동은 노동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70년대의 저임금정책에 기반한 수출산업의 추진은 대기업의 성장,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로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근로조건 등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더욱이 경영자들의 산업합리화를 명목으로 한 저임금제의 심화, 노동 시간 연장 내지 노동 강도의 강화, 생리휴가·월차휴가·산전산후휴가의 이용에 대한 제재, 결혼 퇴직제, 여성 조기 정년제 등은 여성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여성 노동자 운동은 6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인 농성과 파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을 거치며 노조 내에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는 등 여성 지도력이 차츰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결혼 퇴직제와 임신 퇴직제의 부당성에 대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70년대 민주노조 중심의 여성 노동자 생존권 투쟁은 조직적이고 격렬하였다. 동일방직 노조에서는 1972년 여성 지부장을 뽑아 월차 및 생리휴가 등을 쟁취하였고, 이후 계속된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맞서 싸웠으며, 유신 말기인 1978년에는 회사로부터 똥물 세례까지 받았다.

한국화이자 콘트롤데이터는 외자기업에 따른 특별한 제약 조치에도 불구하고 73년 민주노조를 결성한 뒤, 결혼 퇴직제를 철폐하고 출산 휴가 60일을 쟁취하였으며 탁아서 설치를 모색하였다. 남영나일론의 경우 1977년 회사의 남녀 차별과 불공정한 임금 인상에 항의하여 수백 명이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에 경찰에서 지도자를 연행하여 구류처분하고 11명을 집단해고하자 여성단체들에 도움을 호소하고 투쟁하여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해태의 경우 1976년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위해 투쟁하여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YH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법 해고, 부당 전직·전출, 감봉 등에 견디다 못해 75년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의 일방적 폐업에 맞서 시민당 사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김경숙이 사망하면서 1979년 정치 문제로까지 진전되었고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확보가 주요한 과제였고 여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최고의 희생자는 바로 여성 노동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차별 문제를 점차 거론하게 되었다.

중산층 여성들의 의식화

70년대에 들어와서도 기존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리 확보나 문제 해결을 뒷전에 둔 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부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권력의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여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문제를 제기한 계층은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서구의 여성 해방운동에 공감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주로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불평등의 사례를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74년 '젊은 여성들의 단결력을 통하여 한국여성운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여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여성단체 실무자, 각계 여성 지도자, 노동조합 여성간부, 주부, 교회 여성, 농촌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모임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가족법 개정운동, 미인대회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여성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밖에 가정법률상담소 중심의 가족법 개정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중심의 기생관광 반대운동, YWCA 등의 결혼 각서제 폐지운동, 여성유권자연맹의 여성 근로자 교육활동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1973년에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강력히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일부의 여성단체들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1977년 남영나일론 여성 노동자 해고 사건에는 YWCA, 한국교회여성연합 등 6개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불매운동을 동일방직 똥물탄압 때는 7개 여성단체들이 성금 보내기, 성명서·진정서 보내기 등의 지원을 하였다. 이처럼 중산층 여성들은 기층 여성문제에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 여성운동의 목표가 민주화운동 및 분단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이후 여성운동의 논의에 많은 것을 시사하였고 80년대 본격적 여성운동론의 기초가 되었다. 이같이 70년대에 들어서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그 기초를 닦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성 연구의 활성화와 여성이론의 탐구에 힘입은 바 컸다.

일부 선진적 지식층 여성들이 서구 여성 해방이론과 여성 해방운동을 소개한 저술들을 번역하여 내놓음으로써 지식층 여성들의 의식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어 한국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기반에 일조를 하였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보편화되었으며 1977년 9월 이화여대의 여성학 강좌 개설도 한국의 본격적 여성문제 제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제3세계 여성해방론이 소개된 것도 우리의 여성운동론 발전에는 큰 소득이었다. 제3세계 여성들은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가 바뀌어야 하며 국제적 협력과 평화는 국민의 존엄성과 그들의 자주적 결정권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그리고 타국에 의한 점령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성 해방 이념은 여성 문제와 민족 문제의 논의를 발전시켜주었다.

3. 여성운동의 질적 전환(1980년대)

여성단체와 여성 관련 기구들의 설립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70년대의 여성 문제의 제기과 올바른 인식 정립의 모색이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운동권과 사회과학 이론의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제 여성 문제를 전체 사회 구조의 모순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났다.

여성평우회(1983)는 바로 이러한 여성운동 방향의 새로운 모색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 단체였다. 여성평우회는 운동의 목표를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의 타파, 남녀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 민족 분단의 비극 극복과 평화로운 통일사회의 건설로 설정했다. 아울러 여성운동이 사회 구조 전체를 인간화시키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사업, 출판·홍보사업, 빈민 이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사업, 문화제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운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여성평우회의 활동은 여성운동을 사회변혁적 관점과 연결시키고자 한 조직운동이었으며, 또 합법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 인식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여성운동 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평우회와 같은 시기에 구타당하는 여성의 문제를 전담하는 여성의 전화(1983. 7)가 개통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출판문화를 통한 남녀 해방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인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1984. 5)가 발족되었다. 또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화하고 시각을 정립하고자 한국여성학회가 창립(1984.11)되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여성개발원(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 정무장관 제2실(1988)등의 설립은 여성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등 공식적 차원에서 여성 문제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부문 운동으로의 발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운동은 여성 대중의 의식 성장에 기초하여 운동의 범주가 계층·계급별로 분화되고 각기 부문 운동으로서 발전되어갔다. 특히 86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 대책활동, KBS 시청료 거부운동, 87년 6월의 민주화 투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87년부터 여성운동 조직들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 더 나아가 민족·민주 운동의 대오를 강화해 나갔다. 당시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부인 등이 광범위한 대중 투쟁을 통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부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계급·계층 내 여성 부문의 구축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요구·차별철폐와 보호권 쟁취-를 대중적으로 제기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를 기점으로 여성노동자로서의 독자적인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여성 대중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는 ① 차별적 임금철폐 ② 정년 차별 철폐 요구 ③ 모성보호 쟁취 요구 ④ 직장 내 폭력 추방 요구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80년대 후반기 여성 노동자 운동은 노조 여성부와 여성 노동자 단체들, 즉 한국여성노동자회(1987. 3), 기독교민회(1987. 9), 인천 나눔의 집(1989. 1. 1년 후 인천여성노동자회로 개칭), 부산 노동자의 집(1989년 부산 여성노동자회로 개칭), 성남 여성노동자회, 광주 여성노동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도 여성 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일어서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여성 농민운동은 독자적인 여성 농민운동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카톨릭농민회 여성부, 카톨릭 여성농민회에서 분회 형식으로 여성 농민을 조직하였다. 80년대 후반에 농민 여성의 정치의식 고조와 그 활동상은 상당히 활발한 것이었지만, 독자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만큼 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성 농민 대중과 쉽게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여성 농민을 교육하고 지도력을 개발시키며 여성 문제를 선전해나가는 데 제약을 받았다.

80년 말에 이르러서 군 단위 여성농민회가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결성되었으며 도 단위에서 여성농민준비위원회, 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드디어 1989년 12월 18일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중산층이 중심이 된 주부운동은 80년대 들어 새롭게 설립된 여성운동의 영역으로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들에서 시민운동이 급속히 발전되었다. 1987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공해 추방운동, 소비자 운동, 교육 민주화운동, 탁아운동, 부당 잡세 거부운동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빈민 여성들의 빈민운동 과정에서의 활동도 새로운 양상이었으며, 대학 내의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여학생 운동 등도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80년대에는 여성들이 각 계층별로 각 부문에서 크게 생존권 투쟁, 성차별 폐지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또 이 외에도 중요하게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1987) 및 개정운동(1989)과 AIDS추방운동, 여성 폭력 추방운동, 인신 매매 근절운동, 강간 경찰 규탄, 가족법 개정운동(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등을 전개해나갔다.

각 부문 운동의 연대

이렇게 계층별 부문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은 1986년 봄,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 노동 문제를 여성문제의 중심 과제로 규정하면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여성운동권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투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모색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기층(노동·농민·빈민)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여성운동의 실천적 과제로 설정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기층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1986년 3월 8일 한국여성대회에서 24개 여성단체연합으로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면서 7월 7일 보다 확대된 여성단체연합(26개 단체)으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전단 배포, 소식지 발간, 고발 및 대중집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틀을 여성단체 차원을 넘어 종교계, 재야운동단체, 신민당 민주화추진협의회로 넓혀 성고문 범국민폭로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 10월에는 아시안게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같이 임금 인상 투쟁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한 여성단체들의 연합은 1987년 2월 18일 여성운동 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통일적으로 관철시켜나가는 구심체로서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 전선이 형성되어 여성운동은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총 247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를 결집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였고, 88년 3월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민족 자주화를 위한 여성운동'으로 천명하고 주요 과제로 민족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와 여성운동의 기반 확산, 조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80년대 후반 여성운동은 연대화와 더불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주로 87년 6월 투쟁 이후 결성된 지방 여성운동단체의 결성은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역량의 축적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 여성문제의 상담, 교육, 생존권 지원 등으로 각 지역의 사회운동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갖고 이루어졌다.

과학적 여성 해방이론 정립의 모색

미흡하기는 하지만 80년대의 여성운동이 대중화, 조직화, 연대의 공고화, 전국화 등의 양상을 띠고 민족·민주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서 여성들의 구체적 인 이해와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해방 이념의 과학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모색 속에서 가능하였다.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가 무엇이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성 해방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이화여자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되고 1984년 한국여성학회가 발족하면서 좀더 이론적 차원에서 여성 문제가 제기되고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서구 여성 해방이론의 도입이 주를 이루었지만 한국현실에 적절한 이론들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근로 여성, 도시 빈민여성, 농민 여성 등 이른바 민중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실적인 여성 해방운동으로 매진하기 위해 여성억압의 체계 및 기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고 여성 중심적 관점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 여성해방론을 극복하고 한국적 여성해방론과 실천적 여성해방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났다. 1985년 발간된 <여성>의 출판, 여성사연구회의 출범 등은 이러한 이론적 작업에 주요한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후 일련의 연구자들은 여성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 방식도 전체 사회운동과 동시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서구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많고 한국적·실천적 여성해방론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관념적이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의 논의는 실천으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론적인 면에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다.

4. 여성운동의 다변화(1990년대)

1990년대의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80년대 민주 투쟁 속에서 고양되었던 사회변혁운동 일부문으로써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밖으로는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전세계의 개방화 바람과 안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맞으면서 운동의 양식에서 기존의 80년대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운동 방법이 도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기본적으로 여러 부문 운동의 연대화가 이루어지고 전문화 영역들을 만들어 갔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운동

90년대 여성운동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여성 관련 법조항의 제정과 개정이었다. 여성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은 80년대 운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성운동계의 중요 이슈로서 부각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정치세력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중요하게 가족법 개정을 비롯한 법적 불평등의 개정을 시도하였는데 90년의 개정에서는 호주의 권리·의무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호주상속을 호주승계제로 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친권제도, 재산상속제도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97년에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리고 97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자녀 국적은 부모양계주의를 부부 국적은 선택주의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95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이루어내 미비한 부분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계는 평등을 촉진하는 지원법의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97년 개정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사적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온 부분들에 대한 법들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90년대 여성 관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었고 한국 여성의 전화 등 4개 단체가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투쟁으로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즉 성폭력특별법의 제정(1994)을 따내었다. 또한 여성계가 94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96년 이상희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권자연맹을 비롯한 사회단체 22개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1997)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쟁과 성과는 여성운동의 역량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여성운동계의 연대와 정치세력화

90년대 여성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연대활동을 정체세력화하여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계기로 여성계는 정치 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1991)을 결성하여 지방 의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 하였다. 1994년에는 56개 여성단체들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지방 의회 의석에 여성이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의 총선에서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여성단체연합회는 97년 5월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빈곤, 경제세력화, 폭력 인권, 가족정책, 평화 통일, 정치 및 정책 결정 참여 등 북경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여성정책의 실현 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드러내면서 이후 여론화 과정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할 공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1월 여성단체연합과 여성신문사,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로 '대선 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여 각 정당의 후보들로부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와 국회의원·지방의원 공천 시 30%, 비례대표 중 50%의 여성 할당 등의 공약을 받아냈다. 이러한 선거 기간 동안의 여성정책의 공론화는 당장은 실천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차후 여성정책의 입안에서 당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문가 단체의 등장과 운동의 다변화

90년대 여성운동의 활성화는 그동안 여성운동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운동가들이 배출되고, 여성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 즉 80년대 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여성단체들 내에서 많은 운동가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중간 간부들의 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운동가들을 키워냈는데 사실상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많은 전문적 여성단체가 만들어지고 특수단체도 설립되었다. 전문적 단체로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건설되어 이듬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신대의 실상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91년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이제까지 무시되어왔던 성폭력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입법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 국회에서 여성정책을 전달할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1995년 북경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회로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연구소 등이 주축된 비정부 민간 기구인 NGO의 활동도 있었다.

특히 90년대에는 운동이 방법과 내용에서 다변화하였다. 먼저 방법 면에서 보면 소규모의 조직을 단위로 하는 운동 방식이 등장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는 주부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집을 자주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강화하여 회원의 조직력을 증가하고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펴나갔는데, 특히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지역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으로 세력화하였다.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이 방법을 통해 주부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대중적 기반의 획득을 위해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소규모 조직이 운동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문화운동과 지역에서의 생활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0년대에 와서 문화운동이 여성운동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적 영역을 통해 여성의 일상에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연극을 상연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설립되고 여성문화 전용극장인 '마녀'가 등장하고 문화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프>지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생활운동 역시 대중 여성들을 운동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우리 현실을 좌우하는 사소한 것부터 나아가 정치운동으로까지 운동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운동 방법의 다변화는 여성운동의 공간을 확대시켜주어 많은 저변층을 확대할 수 있었고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여성운동이 더 이상 몇몇 운동가들의 것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여성들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각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도 어느 정도 꺾일 수 있어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도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지나치게 대중성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여성운동의 핵심이 변질되는 부분도 드러났다.

여성 연구의 축적과 연구자의 배출

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확산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 연구소가 설립되고 지방에서도 여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단체들은 지역 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여성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변두리로서 소외되었던 여성 문제를 끌어내어 여성 연구의 저변을 확대시켰다는 점과 또 이것이 운동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것이었으나, 반면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보지 못함으로써 심지어 문제를 호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같은 활발한 여성 연구와 많은 연구자들의 배출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전문가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만만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까지 여성학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연구가 충분히 기층 여성의 문제까지를 끌어안고 그 충실한 대안을 끌어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의 주제가 문화와 심리, 생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회 구조 전반의 모순 속에서 여성 문제를 보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성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기에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